

KREI

##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김현중·이정민·이형용



**KREI**

#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김현중·이정민·이형용



## 연구 담당

---

**김현중**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장, 제3장, 제4장, 제6장 집필

**이정민** | 전문연구원 | 제5장 집필

**이형용** | 연구원 | 제2장, 제4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P254

##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10.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홍보(주)

I S B N | 979-11-6149-313-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관련한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정책을 검토한 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 관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국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정책을 검토하여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이슈와 사례를 입양, 양육, 사후의 생애주기별로 정리하고 단계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정책에 반영되어 반려동물과 관련한 생애주기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개선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확산 및 정착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한국애견협회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EBS 등 관계자, 학계 전문가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반려동물 비 양육자와의 갈등, 반려동물에 의한 사망 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 실태와 외국의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입양, 양육, 사후 단계로 구분하였다. 생애주기별 현황과 정책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일본의 반려동물 관리 정책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후,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현황 문제점, 그리고 정책을 파악하기 각종 통계자료와 언론 보도자료, 문헌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으며, 외국사례는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및 복지 종합계획 TF에 참여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분양되는 반려동물은 연간 약 230여만 마리로 추정되며, 입양경로로는 주로 지인을 통한 분양과 분양숍을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려견의 경우 지인을 통한 분양과 펫숍에서 구매한 비율이 90.2%, 반려묘는 75.5%에 달하였으며, 보호시설에서 입양한 경우는 각각 4.3%와 1.3%에 불과하였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018년도에 23.7%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반려견 양육 가구는 18.0%, 반려묘 3.4%, 기타 3.1%로 나타났다. 인구 구조 변화와 반려동물로

부터 얻는 정서적 만족감을 고려할 경우, 향후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장묘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 반려동물 관리 조직 및 업무 내용, 정부의 재정사업, 시행 중인 제도,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들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가 법, 제도, 대책 등 동물 보호 및 관리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및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주요 제도로는 동물등록제, 동물생산업 허가제, 동물 관련 영업 등록제, 동물검역제도,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지자체 동물소유권 취득제도, 포상금 제도 등이 있다.

반려동물 양육자와 동물 관련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 유기, 동물 학대, 개 물림 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규정과 벌칙이 강화되었다.

한편 국민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유기, 학대,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에 있어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입양 단계에서는 반려동물 상업적 생산에 대한 논란, 어린 반려동물의 유통,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반려동물 유통 관련업에 대한 약한 규제, 개인 브리더에 대한 규정 미비, 지인 분양에 따른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양육 단계에서는 낮은 동물등록, 소음, 개 물림 사고, 반려견 양육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기·유실 동물의 관리 문제, 동물 학대, 반려동물 카페 등 영업 관련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사후 단계에서는 동물 사체의 불법 매립, 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 불법 장묘시설 운영 등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기반 측면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기초통계 구축 미흡과 전담인력 및 조직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의 반려동물 보호·관리 정책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에서는 무분별한 반려동물 증가 및 그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의 상업적 생산의 경우 관련 면허를 필수로 요구하여 무허가 번식업체의 난립을 막고 있다. 동시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여 광견병 퇴치와 함께 양도 및 분실 여부, 예방접종 유무 등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중성화를 유도하여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이 권장(미국, 일본)되거나 의무화(독일)하고 있으며, 분양 전 사전교육(미국 뉴욕주, 독일)을 통해 충동 입양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소 내 안락사 비중이 점차 감소(미국, 일본)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독일, 일본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인수제는 우리나라 동물보호 여건을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



며, 반려동물 소음 관련 규정, 개 물림 사고 규정, 양육자의 자격증명, 맹견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 명령 규정 등은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 및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도움이 되는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동물의 유기·유실 감소, 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동물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과 외국의 반려동물 관리 정책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입양 단계에서는 온라인 판매행위 제한, 동물판매 영업 범위 설정, 동물판매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동물판매 영업자의 관리체계 개선, 동물생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동물판매 영업 관리강화, 반려동물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지인 분양에 대한 관리 강화, 중성화 수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양육 단계에서는 등록대상 동물 확대, 동물등록 방법 개선, 동물판매 시 등록 의무화 동물등록제도 개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강화 및 단속 강화 등 동물등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반려동물 양육자 등 교육 강화 및 지원, 갈등 해소를 위한 법 및 제도 보완, 유기·유실 동물 관리 강화, 동물 학대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사후 단계에서는 동물사체처리 방법 개선, 공공 동물장묘시설 확충, 미등록 및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부분에서는 반려동물 국가 통계 구축, 반려동물 전담인력 및 조직 확충, 장기적인 동물등록세 도입 검토를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	7

## 제2장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현황

1. 키워드 분석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 이슈 .....	13
2. 입양 단계 .....	16
3. 양육 단계 .....	18
4. 사후 단계 .....	22

## 제3장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

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체계 .....	27
2.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보호 및 관리 정책 .....	43
3.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60

## 제4장 반려동물 보호·관리의 문제점

1. 반려동물 관련 법 위반사항 .....	65
2.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문제점 .....	68
3. 반려동물 보호·관리 기반 측면의 문제점 .....	84

## 제5장 외국의 반려동물 보호·관리 정책과 시사점

1. 미국 .....	89
2. 영국 .....	98
3. 독일 .....	107
4. 호주 .....	113
5. 일본 .....	120
6. 국가별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129

## 제6장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 반려동물 정책의 기본 방향 .....	137
2.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	140

## 부록

외국의 반려동물 보호·관리 규정 등 참고 자료 .....	163
---------------------------------	-----

참고문헌 .....	175
------------	-----

## 제2장

〈표 2-1〉	감성 키워드 분석 결과 .....	15
〈표 2-2〉	반려동물 입양 경로(복수 응답) .....	17
〈표 2-3〉	반려동물 생산, 수입, 운송, 전시, 판매 업체 현황(2018년) .....	18
〈표 2-4〉	반려동물 양육 현황 .....	19
〈표 2-5〉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종류 .....	20
〈표 2-6〉	반려동물 양육 장소 .....	21
〈표 2-7〉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	21
〈표 2-8〉	동물장묘업체 현황(2018년 기준) .....	24

## 제3장

〈표 3-1〉	「동물보호법」의 구성 .....	30
〈표 3-2〉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 현황 .....	31
〈표 3-3〉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 현황 .....	33
〈표 3-4〉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제도 .....	42
〈표 3-5〉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44
〈표 3-6〉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45
〈표 3-7〉	반려동물 구입 관련 피해 보상기준 .....	46
〈표 3-8〉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49
〈표 3-9〉	반려동물 등록 방법 .....	50
〈표 3-10〉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현황(2018년 기준) .....	51
〈표 3-11〉	반려동물 양육자의 준수사항 .....	52
〈표 3-12〉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	53
〈표 3-13〉	동물 학대 등의 금지 규정 및 벌칙 .....	54

〈표 3-14〉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57
〈표 3-15〉 동물 사체의 처리방법 .....	59
〈표 3-16〉 동물장묘업의 시설,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59
〈표 3-17〉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	61
〈표 3-18〉 유실·유기동물 예방 방안에 대한 인식 .....	61
〈표 3-19〉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	62

## 제4장

〈표 4-1〉 반려동물 관련 법 위반처분 실적(2018년 기준) .....	66
〈표 4-2〉 반려동물 관련 주요 의무 인지 및 준수 여부 .....	66
〈표 4-3〉 월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현황 .....	76
〈표 4-4〉 개 물림 피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	77
〈표 4-5〉 유기·유실동물 보호 형태 .....	78
〈표 4-6〉 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비용 .....	79

## 제5장

〈표 5-1〉 미국의 면허 종류 .....	91
〈표 5-2〉 일본의 제1종 동물취급업의 사업 내용과 해당업자 .....	124
〈표 5-3〉 일본의 제1종 동물취급업자 준수 사항 .....	124
〈표 5-4〉 일본의 반려동물 학대 관련 처벌 사항 .....	127
〈표 5-5〉 국가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	129
〈표 5-6〉 국가별 반려동물 주요 담당부서 .....	129
〈표 5-7〉 국가별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등록 관련 규제 .....	130
〈표 5-8〉 국가별 반려동물 양육 시 준수사항 .....	130

〈표 5-9〉 국가별 유기동물 관련 내용 .....	131
〈표 5-10〉 국가별 동물 학대 관련 규정 .....	131
〈표 5-11〉 국가별 반려동물 사후 관리 규정 .....	132

## 제6장

〈표 6-1〉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기술 이용 의향 .....	149
------------------------------------	-----

## 부록

〈부표 1〉 미국의 연방동물 보호법(알파벳순) .....	163
〈부표 2〉 미국의 주별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	166
〈부표 3〉 미국의 주별 목줄 관리 규정 .....	169
〈부표 4〉 호주의 주 및 준주 정부 동물복지 법률 및 주관부서 .....	171
〈부표 5〉 호주 지역별 반려동물 생산·분양·입양 관련 제도 .....	172
〈부표 6〉 일본의 반려견 및 반려묘 사육 현황 추정 .....	173
〈부표 7〉 반려견 및 반려묘의 수용 및 처분 현황 .....	173
〈부표 8〉 요코하마시의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이용 안내 .....	174

## 제2장

〈그림 2-1〉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터넷뉴스 빈도 .....	14
〈그림 2-2〉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관어 분석 .....	15
〈그림 2-3〉 반려동물 입양 경로 .....	16
〈그림 2-4〉 반려동물 돌봄 관련 업체 현황 .....	22
〈그림 2-5〉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 및 처리 계획 .....	23

## 제3장

〈그림 3-1〉 반려동물 관리 조직 및 주요 업무 내용 .....	28
〈그림 3-2〉 「동물보호법」 체계도 .....	29
〈그림 3-3〉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15~2019) .....	35
〈그림 3-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추진 과제(2020~2024) .....	36
〈그림 3-5〉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중점추진과제 · 38	
〈그림 3-6〉 동물 등록 현황 .....	49
〈그림 3-7〉 동물 학대 감시 체계도 .....	55
〈그림 3-8〉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계도 .....	56
〈그림 3-9〉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 .....	60
〈그림 3-10〉 맹견의 공격 피해 해결 방안 .....	62

## 제4장

〈그림 4-1〉 반려견 미등록 이유 .....	73
〈그림 4-2〉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 건수 및 이웃 갈등 원인(서울시) .....	74

〈그림 4-3〉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환자 이송 현황 .....	75
〈그림 4-4〉 유기·유실 동물 구조 현황 .....	78
〈그림 4-5〉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현황 ...	85

## 제6장

〈그림 6-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	139
--	-----





제1장

서론





# 1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연구 필요성

- 가족 구성원 수 감소, 출산율 저하,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앞으로 1인 가구의 비율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지인배 외 2017: 1).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010년 304만 가구에서 2017년 574만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 비중은 17.4%에서 29.4%로 증가하였음(지인배 외 2017: 12).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반려동물 비 양육자와의 갈등, 반려동물에 의한 사망 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소유자의 부주의, 구매 후 변심, 생활의 어려움, 관리비용의 증가, 반려동물 질병과 노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 및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지인배 외 2017: 26-27). 강아지 공장으로 대변되는 동물 학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 반려동물의 유기와 유실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유기·유실되는 반려동물의 수는 2014년 81,147마리에서 2018년 121,077마리로 해당 기간 49.2% 증가함.

○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수도 연간 2,000건을 넘어섰고, 반려견에 물려 치료 도중 사망한 사건도 몇 차례 발생한 바 있음. 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소음 문제 등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와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은 상황임.

-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는 2014년 연간 1,889건에서 2016년 2,11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윤재옥 의원실).<sup>1)</sup>
-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이 2015년 1,377건에서 2016년 1,505건으로 늘어났으며, 2017년 9월 기준 1,317건으로 집계됨(연합뉴스 2019.02.17.).

○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2016년)’을 마련<sup>2)</sup>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규정과 제도를 개선함. 하지만 유기, 동물 학대, 반려동물 관련 사고, 소음에 따른 갈등 등 사회적인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

1) 연합뉴스(2017.10.22.) 기사 자료를 재인용함.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2.15.).

- 따라서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 등 정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즉, 유기, 동물 학대, 반려동물 관련 사고,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 실태와 외국의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연구내용

-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현황(2장)
  - 키워드 분석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 이슈
  - 반려동물 생애주기별(입양, 양육, 사후 단계) 현황
-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정책 현황(3장)
  - 반려동물 관리 조직(기관) 현황
  - 반려동물 관련 법 및 대책 현황
  - 반려동물 관련 재정사업 및 제도 현황

-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의 문제점(4장)

- 반려동물 관련 법 위반사항
- 생애주기별(입양, 양육, 사후) 문제점
- 반려동물 보호·관리 기반 측면의 문제점

#### ○ 외국(미국, 독일, 영국, 호주, 일본) 사례 조사 및 시사점(5장)

- 외국의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법, 제도 현황
- 외국 사례의 시사점

#### ○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6장)

- 반려동물 정책의 기본 방향
- 입양, 양육, 사후 단계별 정책과제

## 2.2. 연구방법

#### ○ 통계·조사 자료 활용 및 문헌조사

-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통계 및 국민 인식조사 자료 활용
-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선행연구 등 문헌 조사

#### ○ 전문가 활용(원고 위탁)

- 유럽 등 선진국의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법, 제도 파악과 시사점 도출

- 주요 내용: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생산/분양 관련 규제 및 제도, 반려동물 양육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유기동물 관련 규정, 동물학대 규정, 반려동물 사후 관리규정
- 독일과 일본 사례: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
- 영국과 호주 사례: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태영 교수

○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협의회

-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관계자 등 회의
- 동물보호 및 복지 종합계획 TF 참여(농림축산식품부 주최)

###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 3.1. 선행연구의 검토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수행되었음. 특히, 반려동물의 분양(생산, 입양, 등록), 보호, 장례 등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에 대한 연구는 각 부문별로 다루어지고 있음.
-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련된 연구는 이영대(2016)와 지인배 외(2017), 김현희(2017)가 대표적임. 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초점을 두고 연관산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함. 일부 반려동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이영대(2016)는 해외의 반려동물 산업 및 관련 제도 사례를 정리하고, 반려동물 산업 관련 정부조직 설치 및 기금 설치, 수출 확대 방안,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안) 등을 제시함.
- 지인배 외(2017)는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사육현황과 함께 사료, 용품, 수의·진료, 보험, 미용, 휴게, 도그쇼, 장례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인식 조사와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생산, 유기, 맹견 관리 등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음.
- 김현희(2017)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주력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동물보호법」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동물보호법」과는 별개의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관련 법률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부문별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반려동물의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특정 분야를 다룬 연구들도 있음. 허민영(2016)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중에서 반려동물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화영 외(2017)와 박주연(2017)은 의료서비스 분야를 다루었음. 장은혜(2015)와 황규성 외(2015)는 반려동물 장묘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김선희(2013)는 반려동물 분양 및 유통 관련 문제를 다룬 바 있음.

- 김선희(2013)는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분양·유통될 때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조사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개선과제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기준 정보 제공, 구입 계약서 제공 의무 강화,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 등임.
- 허민영(2016)은 반려동물 거래시장에서 상당수의 반려동물들이 미신고

생산자에 의해 유통되며, 질병 보유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입증책임 등의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 지향성 강화를 위한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거래시장 건전화, 생산시설 및 생산 환경 등의 생산자 정보 제공, 품질 보증 및 책임 주체의 명확화, 사업자의 책임 범위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화영 외(2017)와 박주연(2017)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화영 외(2017)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비 현황 등을 분석하고 동물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며, 박주연(2017)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음.
- 장은혜(2015)는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법제 현황과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현황 및 입법례를 살펴보고 동물장묘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함. 황규성 외(2015)는 국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동물장묘업체 및 반려동물 장례 관련 전문인력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전상곤 외(2017)는 국내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조직을 살펴보고, 해외의 제도와 조직, 행정체계 등을 참고하여 국내의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조직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함.

###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앞서 검토한 반려동물 관련 선행연구들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연구는 특정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반

려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제안된 개선방안 등은 최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반영됨.

- 이 연구는 국민이 반려의 목적으로 주로 기르고 있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입양(생산, 분양), 양육(외출, 보호, 유기, 유실), 사후(장례) 등 생애주기별 전반에 걸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유기, 동물 학대, 이웃 간 갈등, 반려동물에 의한 사망/사고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제2장

#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현황





# 2

##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현황

### 1. 키워드 분석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 이슈<sup>3)</sup>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빅카인즈(BIGKinds) 분석<sup>4)</sup>을 실시하였고,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국민의 감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감성 키워드 분석<sup>5)</sup>을 실시하였음. 분석을 위한 키워드는 반려동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관 단어를 포함함.

- 애견, 반려견, 반려묘, 맹견, 애완동물, 개, 고양이, 강아지, 동물보호, 동물복지, 입양, 분양, 중성화수술, 동물사체, 동물 학대, 개 물림 사고, 동물소음, 유기동물, 유실동물, 강아지공장, 안락사, 동물장묘업,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애견카페, 동물미용업, 펫숍, 동물병원, 사료, 동물등록, 펫파라치,

3) 키워드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박혜진 선임주무원이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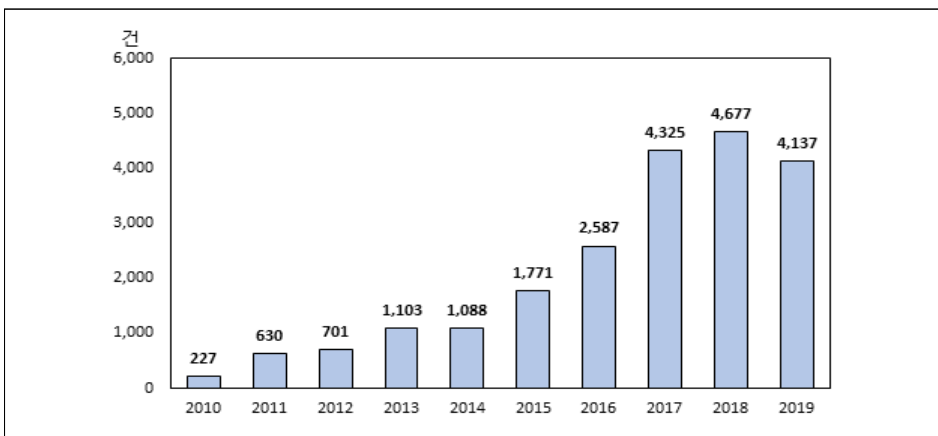
4)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 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임([www.bigkinds.or.kr](http://www.bigkinds.or.kr): 2019.11.08.).

5) (주)다음소프트의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마이닝 도구인 ‘소셜메트릭스 비즈(SOCIALmetrics Biz)’를 이용하여, 소셜미디어 중 블로그 40만~45만 건, 커뮤니티 3만 건, 인터넷뉴스 3만 건을 분석함.

동물세금, 개 입마개, 목줄 등임.

- 반려동물과 연관단어를 포함한 인터넷뉴스 건수는 2010년 227건에서 2018년 4,677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함. 2019년(11월 8일 기준)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4,137건이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그림 2-1**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터넷뉴스 빈도



주: 2019년은 11월 8일 기준임.

자료: 저자 작성.

- 인터넷뉴스에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반려동물’, ‘고양이’, ‘강아지’, ‘애완견’, ‘애완동물’ 등 동물의 종류에 대한 키워드가 주로 등장하고, ‘입양’, ‘보호’, ‘등록’, ‘가족’, ‘사료’, ‘동물병원’ 등의 단어도 자주 등장함. 한편,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의 단어인 ‘유기견’, ‘사체’, ‘고통’ 등도 인터넷뉴스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남.

- 2010년에는 반려동물 연관 단어로서 ‘애완동물’, ‘애완견’의 빈도가 높았지만, 2019년에는 ‘반려동물’, ‘반려견’의 빈도가 높음. 불과 10년 사이에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서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친구, 가족과 같이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2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관어 분석



자료: 저자 작성.

○ 반려동물 연관어 분석 결과로 볼 때, 반려동물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성보다는 긍정적인 감성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2년을 제외하면, 긍정 감성어가 부정 감성어보다 숫자가 훨씬 많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 감성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 긍정적인 감성어로는 ‘행복하다’, ‘소중한’, ‘성장’, ‘도움’, ‘즐기다’, ‘건강한’ 등이 있음.

○ 한편,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감성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동물 학대,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동물 관련 영업자나 반려동물 양육자의 불법 행위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부정적인 감성어로는 ‘고통’, ‘갈등’, ‘불법’, ‘무분별한’, ‘버림받다’, ‘피해’, ‘아픔’, ‘부담’, ‘위험’, ‘인명피해’, ‘스트레스’, ‘불가하다’ 등이 있음.

표 2-1 감성 키워드 분석 결과

단위: 건

감성 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긍정	830	2,911	2,737	6,725	6,020	8,677	8,067	13,026	14,759	13,301
부정	488	2,284	3,371	2,021	2,895	2,617	3,578	4,803	4,864	3,801
중립	682	1,554	2,612	4,098	3,873	5,161	5,510	9,011	8,373	6,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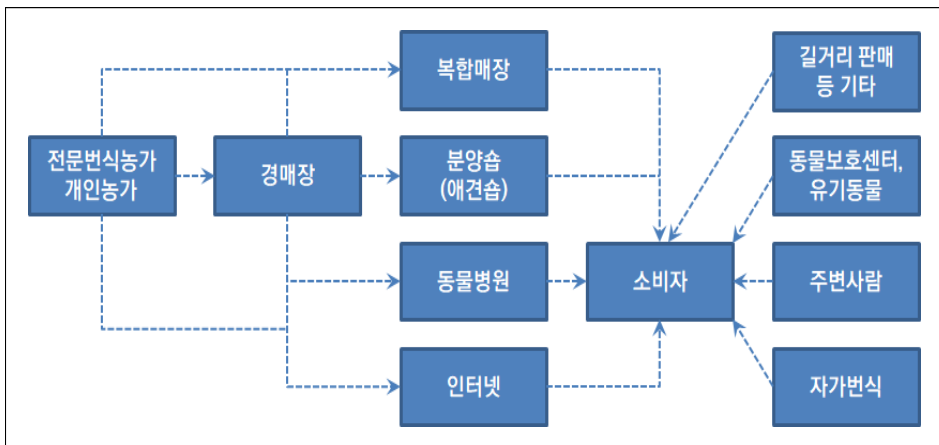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2. 입양 단계

- 반려동물이 1년 동안 분양 또는 입양되는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2017년 대국민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약 230만 마리가 분양되는 것으로 추정됨(지인배 외 2017: 17).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지인으로부터 분양받거나, 분양숍, 인터넷, 동물병원을 통해 구매하며, 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양하고 있음.
  - 분양숍이나 동물병원 등을 통하는 경우는 상당수가 경매장을 거쳐 유통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주로 개인 번식장과 전문번식장을 이용함(지인배 외 2017: 17-18).

**그림 2-3** 반려동물 입양 경로



자료: 지인배 외(2017: 18).

-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인을 통해 분양을 받았으며, 분양숍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개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입양하는 비중이 6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펫숍에서 구입하는 비중은 28.6%로 나타남. 보호시설을 통해 입양하는 비중은 4.6%, 인터넷 구입 비중은 3.8%로 조사됨.
- 고양이도 개와 마찬가지로 지인으로부터 입양하는 비중이 55.3%로 비중이 가장 크고, 펫숍을 통한 구입 비중은 20.2%, 인터넷 구입 비중은 7.3%, 보호시설 입양 비중은 1.3%로 나타남. 개와 달리, 고양이의 경우 길거리의 유기동물을 데려와서 기른다는 비중이 20.6%로 높게 나타났음.

**표 2-2** 반려동물 입양 경로(복수 응답)

단위: %

구분	지인 입양		펫숍 구입	보호시설에서 입양	인터넷 구입	기타
	무료	유료				
개	49.6	12.0	28.6	4.6	3.8	3.3
고양이	46.5	8.8	20.2	1.3	7.3	20.6(유기동물)

자료: 신종화 외(2018: 63).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생산, 유통, 분양 관련 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18년 기준, 동물생산업체 수는 1,186개소이며 1,704명이 동물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동물생산업체는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함. 동물수입업체 수는 70개소, 동물운송업은 281개소, 동물전시업은 394개소가 영업 중임.
- 동물생산업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위치하며 충청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많음. 동물수입업은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에, 동물운송업은 서울, 경기도에, 동물전시업은 경기도, 서울, 부산에, 동물판매업은 경기도, 서울, 인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많이 위치함.

표 2-3 반려동물 생산, 수입, 운송, 전시, 판매 업체 현황(2018년)

단위: 개소, 명

지역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판매업	
	업체수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	업체수	종사자
합계	1,186	1,704	70	82	281	323	394	518	4,056	4,902
서울	18	29	7	7	66	98	52	70	517	649
부산	24	28	5	5	19	24	37	49	252	289
대구	10	13	3	3	5	5	12	15	165	189
인천	40	108	13	16	24	19	24	31	310	372
광주	13	15	-	-	9	11	13	16	121	127
대전	23	27	1	1	8	10	7	6	134	153
울산	69	106	3	1	6	8	11	7	94	126
세종	6	12	-	-	-	-	-	-	11	20
경기	400	585	16	25	55	56	94	106	1,223	1,442
강원	35	39	1	2	14	16	29	41	107	112
충북	66	90	2	2	9	9	14	26	136	210
충남	150	213	1	1	12	12	13	25	180	260
전북	56	94	2	3	18	18	10	14	140	190
전남	77	84	4	1	6	6	26	31	119	103
경북	140	186	10	10	13	13	24	37	263	353
경남	55	70	2	5	11	11	18	30	260	283
제주	4	5	-	-	6	7	10	14	24	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7.23.).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3. 양육 단계

○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더불어, 동물을 좋아하거나 가족이 원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마릿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 개와 고양이가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2010년 346만 가구에서 2017년 608만 가구까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는 541만 마리에서 916만 마리로 증가함.

-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동기로는 '동물을 좋아해서(61.1%)', '가족이 원해

서(43.2%)’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19.9%)’, ‘자녀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18.7%)’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지인배 외 2017: 86).

**표 2-4** 반려동물 양육 현황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2018년
표본크기(명)		2,030	2,000	3,000	5,000	2,000
전국 가구 수(천 가구)		19,865	20,212	21,011	21,633	22,043
개	양육비율(%)	16.3	16	19.1	24.1	18
	가구당 평균 마릿수	1.47	1.38	1.28	1.3	1.3
	추정마릿수(천 마리)	4,760	4,463	5,137	6,778	5,158
고양이	양육비율(%)	1.7	3.4	5.2	6.3	3.4
	가구당 평균 마릿수	1.92	1.7	1.74	1.75	1.5
	추정마릿수(천 마리)	648	1,168	1,901	2,385	1,124
전체	양육비율(%)	17.4	17.9	21.8	28.1	23.7
	보유가구수(천 가구)	3,457	3,618	4,580	6,079	5,224
	추정마릿수(천 마리)	5,408	5,631	7,038	9,163	6,282

- 주 1) 전체 양육비율에는 개, 고양이 이외의 기타 동물도 포함됨(2018년 기타 동물 양육비율은 3.1%임).  
 2) 개, 고양이의 추정마릿수 = 전국 가구 수 × 양육비율 × 가구당 평균 마릿수  
 3) 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2019.02.01.)에 따르면, 개, 고양이 마릿수를 각각 507만 마리, 128만 마리로 추정함.  
 4) 전국 가구 수는 각 연도의 12월 기준임.  
 자료: 신종화 외(2018: 60-62); 행정안전부(www.mois.go.kr: 2019.10.24.).

○ 2018년도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3.7%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개를 양육하는 가구 비중은 18.0%, 고양이 양육 가구 비중은 3.4%로 조사됨.<sup>6)</sup>

- 개는 가구당 1.3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양이는 가구당 1.5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됨. 개와 고양이 양육 마릿수를 추정한 결과, 개는 516만 마리, 고양이는 112만 마리가 양육 중인 것으로 추정됨.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비중은 조사 기관이나 연구에 따라 23.7~27.9%로 나타나고 있음.

<sup>6)</sup> 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2019.02.01.). 기존 조사 결과와 조사 방법(2018년 대인 면접조사, 기존 전화조사)의 차이로 인해 직접 비교는 어려움.

- 신종화 외(2018)의 조사에서는 2018년에 23.7%의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황원경 외(2018)의 연구에서는 25.1%가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018)의 조사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비중이 27.9%로 조사됨.

**표 2-5**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종류

단위: %

구분	신종화 외 (2018)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	황원경 외 (2018)
개	76.0	81.3	75.3
고양이	16.6	20.1	31.1
기타	13.1	5.8	17.2

주: 복수 응답으로 비율 합계가 100을 초과함(전체 응답자 중에서 각각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신종화 외(2018: 10);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018: 11); 황원경 외(2018: 5).

-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개와 고양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농림축산검역본부(2018) 조사에서는 개 76.0%, 고양이 16.6%, 기타 동물 13.1%로 나타났음.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018) 조사 자료에서는 개가 81.3%, 고양이가 20.1%였으며, 황원경 외(2018)의 조사에서는 개가 75.3%, 고양이가 31.1%임.
- 인구 구조 변화와 반려동물로부터 얻는 정서적 만족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 지인배 외(2017: 77)에 의하면, 2026년 반려동물 마릿수는 1,320만 마리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려동물 양육 장소는 산책이나 외출을 제외하면 주로 실내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와 고양이 모두 약 90%가 실내에서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개는 산책과 외출한다는 비중이 높지만, 고양이는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로 낮게 나타남.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일 경우, 개를 야외에서도 기른다는 응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표 2-6** 반려동물 양육 장소

단위: %

구분		실내에서만 기른다	산책과 외출 이외에는 실내에 서만 기른다	실내와 야외에서 모두 기른다	야외에서만 기른다	모름/무응답
개	전체	23.3	64.8	7.1	4.6	0.1
	아파트	26.3	69.9	3.1	0.6	0.2
	단독주택	12.0	40.0	25.6	22.4	0.0
	다세대/연립/빌라	20.3	69.5	6.8	3.4	0.0
	원룸/오피스텔	29.3	63.4	2.4	4.9	0.0
	기타/무응답	23.1	61.5	7.7	7.7	0.0
고양이	전체	68.5	22.1	8.0	1.0	0.3
	아파트	69.6	21.7	7.5	1.2	0.0
	단독주택	60.0	22.0	16.0	2.0	0.0
	다세대/연립/빌라	70.6	23.5	3.9	0.0	2.0
	원룸/오피스텔	76.9	19.2	3.8	0.0	0.0
	기타/무응답	0.0	100.0	0.0	0.0	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018: 42-43).

○ 반려동물 양육비의 경우, 개는 월평균 9만 6,000원, 고양이는 6만 7,000원으로 개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게 나타남. 사료비의 경우, 개는 월평균 5만 원, 고양이는 4만 2,000원으로 개가 고양이보다 19.0% 높았고, 돌봄 비용도 개가 4만 6,000원, 고양이가 2만 5,000원으로 개가 훨씬 높음.

**표 2-7**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단위: 만 원

구분	개	고양이
사료비	5.0	4.2
돌봄비용	4.6	2.5
양육비 총액	9.6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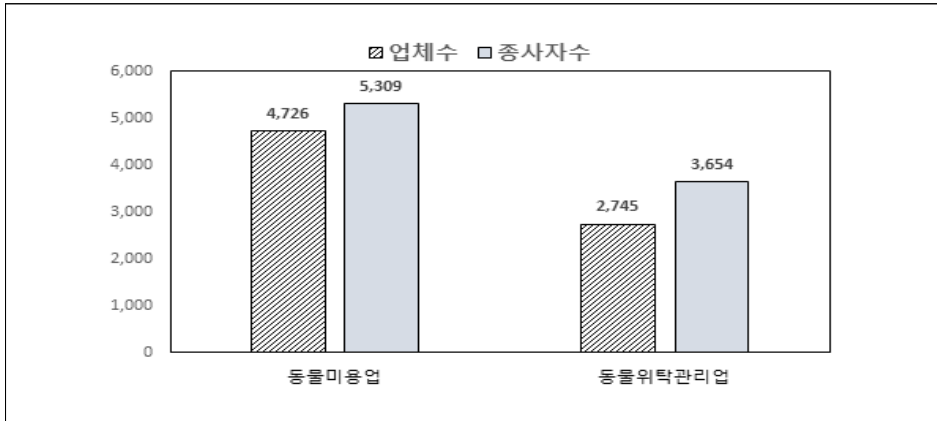
주: 돌봄 비용은 미용, 병원 등의 비용임.

자료: 신중화 외(2018: 16-21).

-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업도 빠르게 증가하였음. 동물미용업 업체 수는 2018년 기준 4,726개소, 종사자 수는 5,309명이며, 동물위탁관리업은 2,745개소, 종사자는 3,654명임.

**그림 2-4** 반려동물 돌봄 관련 업체 현황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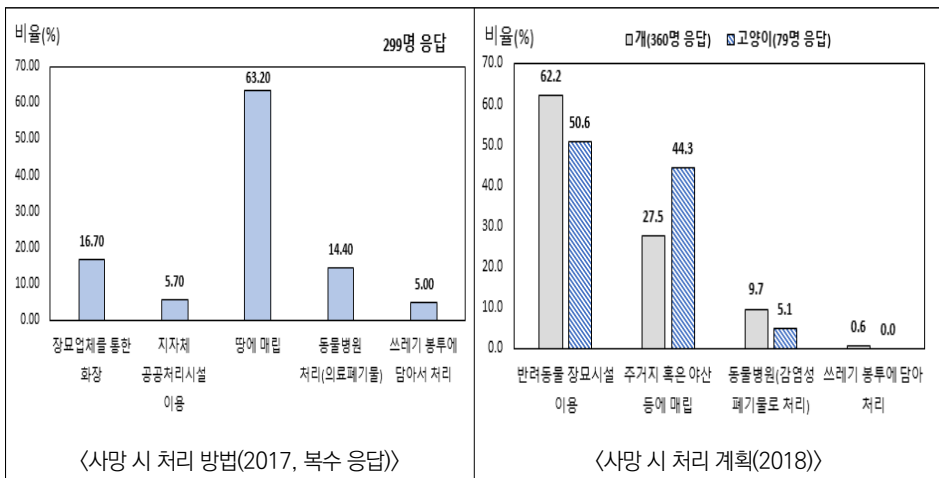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2019: 15-16).

## 4. 사후 단계

- 반려동물을 점차 가족과 동일시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반려동물 양육자 가운데 17.1%가 기르던 개가 죽은 경험이 있었고,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였음(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 96).
- 지인배 외(2017)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험이 있는 양육자의 경우 사체를 땅에 매립한다는 응답이 63.2%로 나타났고, 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한다는 응답은 16.7%였음.

- 한편, 향후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장묘시설을 이용하려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장묘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개의 경우 62.2%, 고양이의 경우 50.6%로 조사됨.
- 법에서 허용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주거지 또는 야산 등에 매립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남.

**그림 2-5**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 및 처리 계획



자료: 지인배 외(2017: 63, 사망 시 처리 방법); 신종화 외(2018: 22, 사망 시 처리 계획).

○ 2018년 기준, 반려동물 장묘업체 수는 전국에 33개소가 있으며 119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됨. 경기지역에 장묘업체가 가장 많이(14개소, 42.4%) 위치하고 있음(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14).

- 장묘업체 가운데 ‘장례’ 시설만 운영하는 곳이 3개소, ‘장례+화장’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2개소, ‘장례+화장+납골’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가장 많은 22개소임. ‘장례+화장+건조+납골’ 시설까지 운영하는 곳이 2개소임.



표 2-8 동물장묘업체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소, %, 명

연도	계(비중)	동물장묘업체 유형(개소)					종사자수 (명)
		장례시설만 운영	장례·화장 시설 운영	장례·화장· 납골 시설 운영	장례·화장· 건조·납골 시설 운영	기타	
부산	1 (3.0)	-	-	1	-	-	9
대구	1 (3.0)	1	-	-	-	-	5
광주	1 (3.0)	1	-	-	-	-	1
세종	1 (3.0)	-	-	1	-	-	3
경기	14 (42.4)	-	-	11	1	2	66
강원	1 (3.0)	-	-	1	-	-	4
충북	3 (9.1)	1	-	1	-	1	6
충남	4 (12.1)	-	1	2	-	1	5
전북	1 (3.0)	-	-	-	1	-	3
경북	2 (6.1)	-	-	2	-	-	3
경남	4 (12.1)	-	1	3	-	-	14
전체	33 (100.0)	3	2	22	2	4	119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2019: 14).

## 제3장

#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





# 3

##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

### 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체계

-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 반려동물 관리 조직 및 업무 내용, 정부의 재정 사업, 시행 중인 제도,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들을 정리함.

#### 1.1. 조직과 관련 법률

-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정책국 내 동물복지정책팀은 주로 「동물보호법」 운영, 동물보호 문화 개선, 동물 학대 예방, 반려동물 산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는 동물등록제 운영,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동물행동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기관임.

○ 지방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동물보호 및 복지 전담조직이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축산 관련 부서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그림 3-1** 반려동물 관리 조직 및 주요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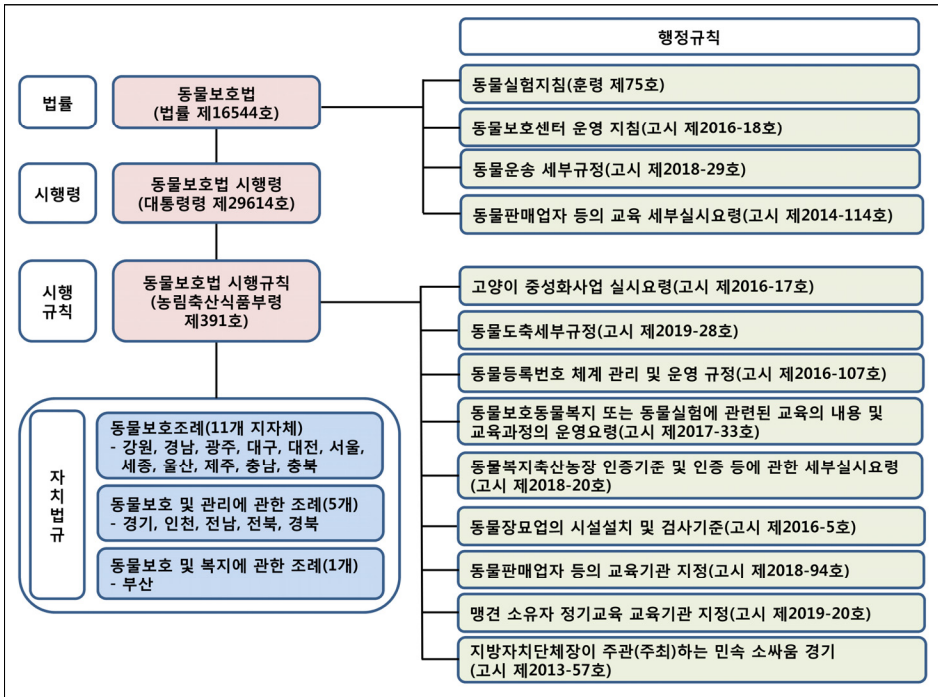
조 직		담당 업무 및 전담조직 운영 여부
중앙 조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복지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법 운영</li> <li>• 동물보호 문화 개선 및 동물학대 예방</li> <li>• 반려동물 산업 관리, 윤리적 동물실험 등</li> </ul>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등록제 운영</li> <li>•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li> <li>• 동물보호법 제개정 지원 및 동물복지 교육 홍보</li> <li>• 동물복지 OIE 정책 동향 파악 및 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 등</li> </ul>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행동 및 동물복지 연구, 동물복지(축산환경과)</li> <li>• 반려동물 영양 및 사료안전성 평가모델 연구(영양생리팀)</li> </ul>
지방 조직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광역시: 7개, 도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시 광역시: 서울, 부산, 대전은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 운영</li> <li>• 나머지 광역시: 농축산 관련 부서에서 다른 업무와 병행</li> <li>• 도: 경기도 전담 조직 운영</li> <li>• 나머지 도: 축산 관련 담당부서에서 동물보호·복지 업무 병행</li> </ul>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시 광역시: 서울 25개 구 중 5개, 인천 10개 구 중 2개, 부산 16개 중 2개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 운영</li> <li>• 나머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는 전담 조직 없음</li> <li>• 도: 경기도 7개시, 전남 1개 시, 전남 1개 시 전담 조직(팀) 운영</li> <li>• 나머지 도의 기초자치체: 전담 조직 없음</li> </ul>

주: 지방 조직의 경우 전상곤 외(2017: 45-62)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2019.09.23.);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2019.10.23.);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www.nias.go.kr: 2019.10.23.).

-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이외에도 동물보호·복지 및 관리를 위해 중앙 부처의 고시, 훈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림 3-2 「동물보호법」 체계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09.23.). 「동물보호법」 법령체계도.

- 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핵심 법령인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임.<sup>7)</sup>

<sup>7)</sup>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09.23.). 「동물보호법」 제1장 제1조(목적).

-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법 제정 이후 20여 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0년대에 법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음.

○ 「동물보호법」은 다음 표와 같이 제7장, 제47조, 부칙으로 구성됨.

**표 3-1 「동물보호법」의 구성**

법률 장	법률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9조(동물의 운송), 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1조(동물의 수술),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6조(신고 등), 제17조(광고),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3장 동물실험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제5장 영업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제34조(영업의 허가), 제35조(영업의 승계),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7조(교육),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6장 보칙	제39조(출입·검사 등),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41조의2(포상금), 제42조(수수료), 제43조(청문),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6조의2(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09.23.).

○ 「동물보호법」 이외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령은 「수의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약사법」, 「민법」, 「형법」, 「공동주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함.

○ 다음 표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로 관련 법령 또는 고시를 정리한 것임.

**표 3-2**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 현황

구분		관련 법령 또는 고시
입양	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의사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입·생산·운송·판매	동물보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입동물사전신고서 제출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동물등록	동물보호법, 의사법,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양육	사육·관리	동물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맹견의 관리	동물보호법, 의사법
	관리책임(손해배상 및 형사)	동물보호법, 민법(손배배상책임), 형법(형사책임), 경범죄처벌법
	건강관리	사료관리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진료 및 동물용의약품 이용	수의사법, 약사법, 동물보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미용	동물보호법
	외출(공원이용 포함)	동물보호법, 경범죄처벌법, 자연공원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여행(국외여행 포함)	국내: 동물보호법, 도로교통법, 장애인복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해외: 가축전염병예방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유기·유실·학대	동물보호법, 유실물법,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사후	장례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등록말소	동물보호법
	사체처리	폐기물관리법, 환경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향만법, 경범죄처벌법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19.09.23.).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1.2. 재정사업<sup>8)</sup>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은 “동물보호 관련 교육·홍보 추진 등을 통한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으로 관리수준 개선, 분양 여건 개선을 통한 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2019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동물보호·복지 교육 및 홍보사업, 유기·유실 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음.
  - 2018년까지 사업내용에 포함되었던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등의 예산이 2019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내용과 사업예산이 조정됨.
- 반려동물산업육성은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교육·문화·행동교정 전용운동 놀이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건립 지원,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개선을 통한 유기·유실동물 보호·분양 여건 개선과 불법 매립·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반려동물 소유자 장례비 부담 완화, 지역 넘비현상 극복 등 성숙한 동물장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

<sup>8)</sup>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2019) 『2019년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의 18-40쪽을 참고하여 작성함.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은 다음 표에 제시됨.

**표 3-3**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 구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전체 예산		7,364	13,589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농특)	소계	7,364	4,109
	교육 홍보	1,105 - 홍보 530, 교육 340, 상담센터 운영 90, 동물보호문화축제 100,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등 45	1,813 - 홍보 1,230, 교육 340, 상담센터 운영 98, 동물보호문화축제 100,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등 45
	유기·유실 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756 - 27천 마리×20만 원×20%(보조)×70%(참여율)	1,156 - 입양지원: 27천 마리×20만 원×20%×70%(참여율) - 구조·보호비: 30,774마리×64,990원×20%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780 - 26천 마리×15만 원×20%	1,140 - 38천 마리×15만 원×20%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2,920 - 일반: 3개소×20억 원×30% - 광역: 1개소×40억 원×40%(보조)×70%(2년차)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으로 이전
	공공동물장묘 시설 지원	900 - 2개소×50억 원×30%(보조)×30%(1년차)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재구축	703 - 1식 703백만 원×100%	
	동물복지실태 조사	200 - 1식 200백만 원×100%	
	소계	0	9,450
	공공동물 장묘 시설 지원	-	2,100 - 2개소×50억 원×30%(보조)×70%(2년차)
반려동물 산업육성 (자율, 균특)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	2,280 - 일반: 3개소×20억 원×30% - 광역: 1개소×40억 원×40%(보조)×30%(1년차)
	반려동물지원 센터 건립지원	-	4,800 - 4개소×80억 원×50%(보조)×30%(1년차)
	반려동물 놀이 시설 지원	-	270 - 9개소×1억 원×30%
	반려동물 산업육성 (제주, 균특)	-	30 - 1개소×1억 원×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2019: 20, 31).

### 1.3. 주요 대책 및 계획

- 정부는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및 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 절에서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내용과 최근에 발표된 주요 대책 내용을 정리함.

#### 1.3.1.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법정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2019년 종합계획에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비전으로, 유기동물 마릿수를 2013년 9만 7,000마리에서 2019년 7만 마리로 줄이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2014).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핵심 내용에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포함되어 있음.
  - 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에는 동물등록제 정착,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맹견 관리 등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에는 동물인수제 도입,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내용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개체별 연계

관리, 신규 서비스업 등록제 신설, 의료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임.

- 인도적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는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마련, 민관 협조를 통한 감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그림 3-3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15~2019)

<b>비전</b>	<b>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b> <b>-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 이용의 윤리성 제고 -</b>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동물 발생수 : ('13) 97천두 → ('16) 85 → ('19) 70</li> <li>◆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 : ('13) 1% → ('16) 4 → ('19) 8</li> <li>◆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 : ('13) 0개소 → ('19) 10</li> </ul>		
<b>추진 과제 및 주요 내용</b>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①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등록제 정착</li> <li>•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li> <li>• 맹견관리, 소변처리 등 의무 확대</li> </ul>
		②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인수제 도입</li> <li>•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도</li> <li>•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마련</li> <li>• 유기·유실동물 임의 구조보호 금지</li> </ul>
		③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부터 판매까지 개체별 연계 관리</li> <li>• 신규 서비스업 등록(신고)제 신설</li> <li>• 반려동물 의료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li> </ul>
		④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마련</li> <li>• 민관 협조를 통한 감시·홍보 강화</li> </ul>
	2.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	⑤ 축종별 최소 복지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li> <li>• 의무규정 단계적 확대 및 교육·지원</li> </ul>
		⑥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인증제 개편 및 축종 확대</li> <li>• 직불제 등 인센티브 제공</li> <li>• 사후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li> </ul>
	3.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⑦ 국가공통 동물실험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동물의 보호·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li> <li>•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제 도입</li> </ul>
		⑧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위원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li> <li>• 윤리위원회 지도·감독 확대</li> </ul>
		⑨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등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li> <li>• 초중고교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li> </ul>
	4. 추진체계 및 R&D	⑩ 추진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조직 및 자원 확대</li> <li>•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조 강화</li> <li>• 정책대상자 편의 제고</li> </ul>
		⑪ 정책기반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li> <li>• 기초통계 보완</li> </ul>
		⑫ 연구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합동 R&amp;D 기획단 구성·운영</li> <li>• 길고양이 중성화 백신 개발 등 연구</li> </ul>
<b>추진 기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동물보호법) 및 기초 통계 정비</li> <li>◆ 주체별 역할 정립 및 이행 담보방안(교육·홍보, 재정지원, 지도·점검 등) 강구</li> </ul>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2014: 22).

- 이외에도 인력·조직 및 자원 확대,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조 강화, 정책 대상자 편의 제고 등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대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기초통계 보완, 연구개발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020~202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이를 위해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논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할 예정임. 6대 분야 21대 과제는 다음 그림에 제시되어 있음.

**그림 3-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추진 과제(2020~2024)

6대 분야	21대 과제
①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①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②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④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⑤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②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①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②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③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③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①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③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④ 사설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
④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①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②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⑤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① 실험동물 공급·관리 체계 강화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③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체계 마련
⑥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① 동물복지위원회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②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③ 중앙정부·지자체 인력 및 조직 확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7.04.) 1쪽 자료를 재인용함.

### 1.3.2. 주요 대책

#### 가)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산업 육성대책<sup>9)</sup>

○ 정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반려동물 연관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 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함.

-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와 가구 수가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동물 유기, 동물 학대, 열악한 동물 사육 환경(일명 강아지 공장)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대책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와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

- 동물보호·복지 의식 정착을 위해 동물소유자, 영업자 등 관계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완하며,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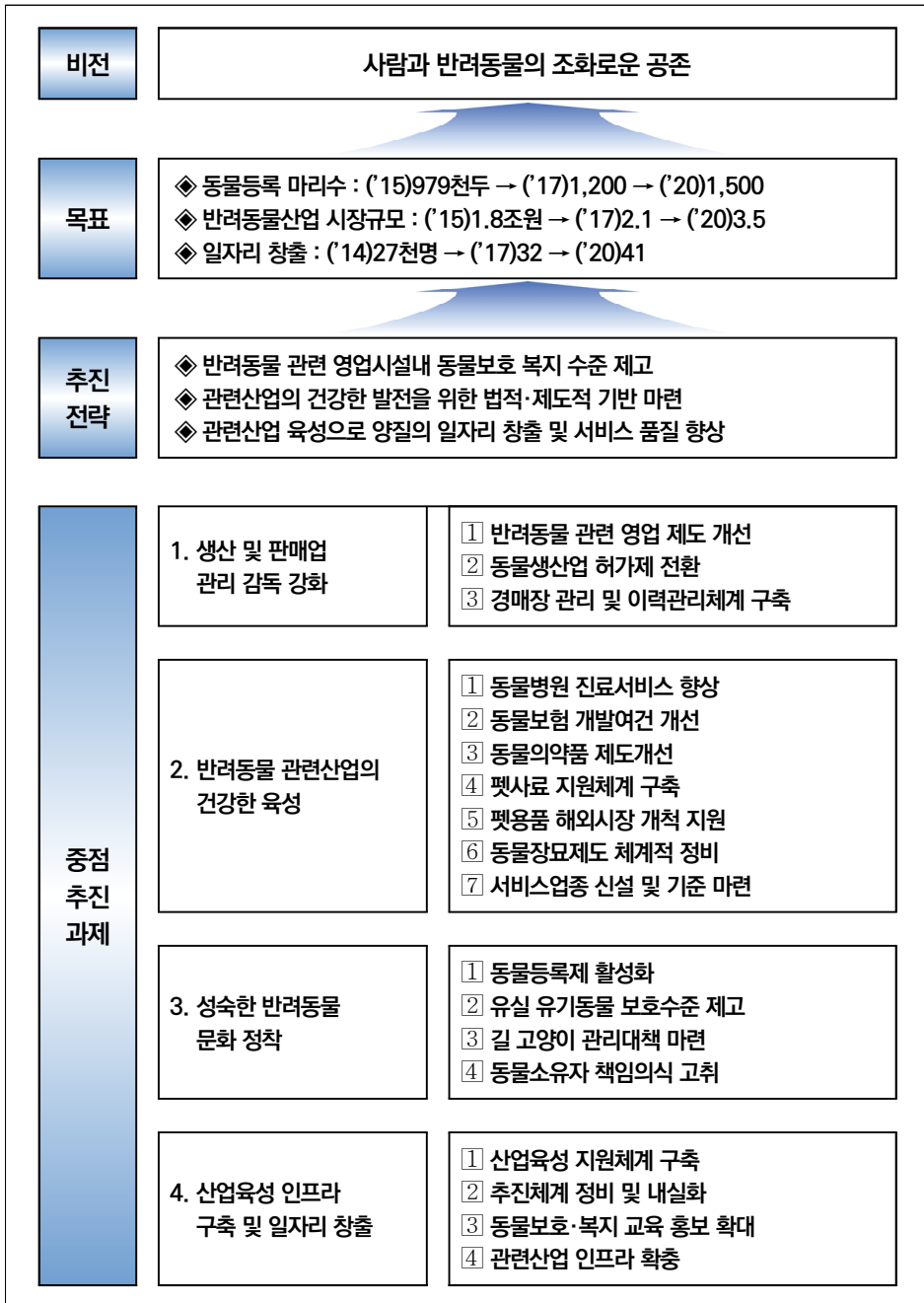
○ 이 대책에서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비전으로 동물등록 마릿수,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4개 분야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함. 아울러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제시함.

-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내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향상(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12.15.)

---

<sup>9)</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12.15.).

그림 3-5 반려동물 보호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중점추진과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2016: 13).

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sup>10)</sup>

- 정부가 2018년 1월 마련한 대책에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는 개 물림 등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임.
  -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 대상견 및 일반 반려견으로 구분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함.
  - 맹견은 입마개 착용, 수입·공동주택 내 사육제한, 어린이 시설 출입금지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함.
  - 관리대상견은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고, 모든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함.
-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소유자의 처벌(형사처벌, 과태료 상향)을 강화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개에 대한 처리방법(격리 조치, 안락사 등)도 규정함.
- 또한,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강화,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이수 의무화,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 확대 및 반려동물 사회화 훈련 기반 구축, 유실·유기동물 사전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의 조치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임.

---

<sup>10)</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01.18.).



다) 동물 학대 행위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sup>11)</sup>

○ 이 대책에서는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서는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임.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에는 동물을 유기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반려동물 목줄과 맹견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시 그리고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부분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강화할 계획이며,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영업을 추가하고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또한, 미등록,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라) 동물등록제 개선 및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의무화<sup>12)</sup>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2월 그 동안의 대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발표함.

---

1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03.20.).

1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12.20.).

- 동물복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의 월령 기준을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변경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 의무와 맹견의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함.
  -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 의무 교육 실시(1년마다, 3시간 이상)
  -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수 있는 자의 연령(만 14세 이상) 신설
  - 맹견에 대한 목줄, 입마개,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규정 구체화
  - 등록대상동물 월령 미만 동물 등록 허용
- 2019년 3월 21일부터 강화된 맹견 소유자의 사육·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 발생에 따른 벌칙 등이 적용됨.<sup>13)</sup>
  -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 출입금지(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03.21.)
  -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상해에 이르게 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4. 주요 제도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는 동물등록제, 동물생산업허

---

<sup>13)</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3.21.).

가제, 동물 관련 영업등록제, 동물검역제도, 동물보호감시원 제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 포상금 제도 등이 있음.

**표 3-4**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제도

제도 명	제도 내용
동물등록제 (2014년 전국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이하도 등록 가능)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li> </ul>
동물생산업허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기준 등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2018.3.22. 허가제로 전환).</li> </ul>
동물 관련 영업등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li> </ul>
동물검역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서 반려동물 수입하거나 데려오는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마릿수에 따라 검역 절차 상이).</li> <li>■ 외국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거나 수출할 때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li> </ul>
피해보상제도(반려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피해(폐사 또는 질병 발생)가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판매자 질병 치료 비용 부담 등의 구매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li> </ul>
동물보호감시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함.</li> </ul>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음.</li> </ul>
지자체 동물소유권 취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시·군·구가 아래 경우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li> <li>-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li> <li>- 보호비용 납부 기한 종료된 날부터 10일 지나도 보호비용 미납부 경우</li> <li>- 동물 소유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li> </ul> </li> </ul>
포상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되는 동물보호법 위반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li> <li>-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li> <li>- 안전조치를 위반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li> </ul> </li> </ul>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19.10.04.). 동물보호법.

## 2.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보호 및 관리 정책

- 이 절에서는 반려동물 생애주기를 입양, 양육, 사후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반려동물 양육자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정부의 반려동물 관리체계 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함.

### 2.1. 입양 단계

#### 2.1.1. 영업 관리: 동물의 생산·전시·운송·판매·수입업

- 반려동물 양육자가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이 해당됨. 정부는 이러한 영업자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영업자가 이 기준을 갖춰 허가 또는 등록하도록 함.
  - 2016년 5월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일명 강아지 공장) 등 강아지 번식장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3월 22일부터는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다음 표는 영업의 종류 즉,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동물생산업의 경우 일반기준,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물판매업은 일반 동물판매업과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표 3-5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영업 종류		시설 및 인력 기준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벽이나 층 등으로 분리</li> <li>■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li> <li>■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쉽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li> <li>■ 설치류나 해충 등의 차단 설비 구비, 소독약과 소독장비 구비, 정기 청소 및 소독 실시</li> </ul>
동물 생산업	일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 설치(동물 직접 판매 시 판매실 별도 설치)</li> <li>■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 주기 위한 설비 구비</li> <li>■ 사육설비 바닥은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함.</li> <li>■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 및 관리 인력 확보</li> <li>■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5kg 20마리 이하, 5~15kg 10마리 이하, 15kg 이상 5마리 이하)로 생산하는 경우 소음방지설비 구비</li> </ul>
	사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시설 외부 노출 시,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li> <li>■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li> <li>■ 개의 경우 운동공간 설치, 고양이의 경우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 설치</li> <li>■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li> <li>■ 사육설비는 위로 쌓이지 않아야 함(2018.3.22. 이전 신고자는 2단까지 허용).</li> <li>■ 사육설비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함(2018.3.22. 이전 신고자 예외 조항 있음).</li> </ul>
	분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끼를 가지거나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li> <li>■ 분만실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은 재질이어야 함.</li> <li>■ 분만실의 바닥은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li> <li>■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 유지 설비 구비</li> </ul>
	격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성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li> <li>■ 격리실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은 재질이어야 함.</li> <li>■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li> </ul>
동물전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실과 휴식실 구분 설치, 출입구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 구비</li> <li>■ 전시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못 나가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li> <li>■ 개의 경우 운동공간 설치, 고양이의 경우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 설치</li> <li>■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 확보</li> </ul>
동물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차량: 직사광선 및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설비, 적정온도 유지 위한 냉난방설비, 이동 중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 이동 중 동물의 상태 수시 확인 가능 구조</li> </ul>
동물수입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실과 격리실 구분 설치, 사료와 물 주기 위한 설비, 채광 및 환기 가능, 사육설비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 쉬운 재질</li> <li>■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하도록 설치</li> <li>■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 확보</li> <li>■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 적용</li> </ul>
동물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실과 격리실 분리, 사육시설은 직사광선 및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 사료와 물주기 설비, 동물 적정 체온 유지 설비,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 적용</li> <li>■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 확보</li> </ul>
경매방식의 동물 판매업(경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 구분 설치, 3명 이상의 운영 인력 확보, 접수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 구비,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 설비, 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발판 등 소독장비 구비 등</li> </u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09.2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 동물의 생산, 전시, 운송, 수입,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6**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영업종류	준수 사항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동물보호법 제37조, 동물장묘업 제외).</li> <li>■ 영업장 내부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 게시</li> <li>■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동물 소음 최소화, 새로 온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li> <li>■ 동물 종류별·성별·크기별 분리 관리, 질환이나 상해동물, 공격성 동물, 늙은 동물, 어린동물, 임신했거나 포유 중인 동물 분리 관리</li> <li>■ 4시간 이상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 머무는 동물은 항상 깨끗한 용기에 물, 사료 공급</li> <li>■ 시정 명령 등 받은 경우 사후조치 이행 후 지체 없이 보고</li> <li>■ 동물(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전시업, 위탁관리업)의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등</li> <li>■ 판매업자, 수입업자, 생산업자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li> <li>■ 동물장묘업자 및 위탁관리업자는 폐쇄회로 녹화영상 30일간 보관</li> <li>■ 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고 지자체에 보고</li> </ul>
동물생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1회 이상 정기 운동 기회 제공, 사육실 내 질병 확산 주의, 백신 접종 등 질병 예방 조치 후 개체관리카드에 기입 관리</li> <li>■ 연 1회 이상 털, 손톱, 발톱, 이빨 관리(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후 기록</li> <li>■ 12개월 이상만 교배 및 출산,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 기간 두어야 함.</li> <li>■ 번식 능력이 없는 동물의 보호 및 입양 노력, 동물 유기 및 폐기 목적으로 거래 불가</li> <li>■ 질병 및 상해 동물 즉시 격리 치료, 치료 불가 등의 경우 수의사가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li> <li>■ 실적 보고서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보고,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지켜야 함.</li> </ul>
동물전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령 이상 개, 고양이 전시,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등록을 해야 함.</li> <li>■ 전시 동물의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 실시, 매년 1회 검진, 건강 이상 동물은 격리 후 수의사 진료 및 적절한 치료</li> <li>■ 개 또는 고양이는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 관리, 영업시간 중에도 휴식 제공(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 제공)</li> <li>■ 하루 10시간 이내 전시(10시간 넘을 경우 별도로 휴식시간 제공)</li> <li>■ 깨끗한 물과 사료 충분히 제공하고,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관리</li> <li>■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이용 불가, 배설물 즉시 처리</li> </ul>
동물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기준 준수, 종류, 품종, 성별, 마릿수 및 운송일 기록 비치</li> <li>■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2마리 이상 운송 시 개체별로 분리</li> <li>■ 운임은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소유자 동승 여부와 무관)</li> </ul>
동물수입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국,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li> <li>■ 실적 보고서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 판매할 경우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지켜야 함.</li> </ul>
동물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고양이의 경우 2개월령 이상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함(미성년자에게 판매 등 불가).</li> <li>■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개의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등록제도 세부내용 공지</li> <li>■ 판매 시 계약서와 해당 내용 증명 서류 제공 의무</li> <li>■ 온라인 홍보 시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시</li> </ul>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경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사전 고지</li> <li>■ 경매 일정을 지자체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하고 경매 일정 변경 시 3일 전 통보</li> <li>■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li> <li>■ 준비실에서 경매 동물이 식별 가능하도록 구분, 실적 보고서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보고</li> <li>■ 경매참여자에게 동물 출하자과 건강상태 정보 제공, 경매 상환 녹화 영상 30일간 보관</li> </u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09.2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영업자의 준수사항).

○ 동물을 판매할 경우,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거나 해당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동물보호법」 제9조의2).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하고(「동물보호법」 제9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및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
- 운송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병든 동물, 어린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 운송 시,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함.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운송을 위하여 전기 물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음.

### 2.1.2. 반려동물 구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로부터 반려동물을 구입한 후, 예기치 못하게 질병이 걸렸거나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표 3-7** 반려동물 구입 관련 피해 보상기준

피해 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불</li> <li>-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요구할 수 없음.</li> </ul>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li> <li>-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 환불 요구 가능</li> </ul>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19.10.04.).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1.3.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입양<sup>14)</sup>

○ 동물이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음.” 신종화 외(2018: 63)에 의하면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로부터 개를 입양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4.6%로 나타남.

- 동물보호센터는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이 소유자 등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함.
- 일반인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2.1.4. 개, 고양이의 수출입 검역<sup>15)</sup>

○ 개, 고양이를 수입하려면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함.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결과 및 개체별 연령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세관신고서에 검역 대상 물품을 기록하여 세관 검사대 통과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검역증명서를 제출함.
- 9마리까지는 사전 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10마리부터는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시기,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함. 호주 고양이와 말레이시아 개, 고양이는 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임.

<sup>14)</sup>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19.09.20.).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sup>15)</sup>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2019.09.20.). 개고양이 검역절차.



○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검역조건을 확인해야 함.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항 사무실에 검역 신청을 하면,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 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함.

## 2.2. 양육 단계

### 2.2.1. 동물등록제<sup>16)</sup>

○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 위생상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정한 다음의 등록대상 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임.

-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임. 아직 고양이는 등록대상 동물로 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8년 8월 기준, 2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sup>17)</sup>

○ 동물등록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전국 시·군 지역(142개)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과 일부 도서를 제외한 225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됨. 동물등록 사항, 방법 등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음.

---

<sup>16)</sup>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2019.10.11.). 동물등록제.

<sup>17)</sup>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19.10.11.).

**표 3-8**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항목	주요 내용
등록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li> <li>■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li> </ul>
신고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 이름이 변경된 경우(30일 이내)</li> <li>■ 소유자의 주소 변경 및 전화번호 변경(30일 이내), 사망한 경우(30일 이내),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30일 이내),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는 경우(30일 이내)</li> </ul>
월령	■ 3개월 이상인 개(2020년 3월 21일부터는 2개월 이상인 개)
등록 방법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3천 원, 인식표: 3천 원, 변경신고: 무료
등록대행	■ 지정된 동물병원,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목적의 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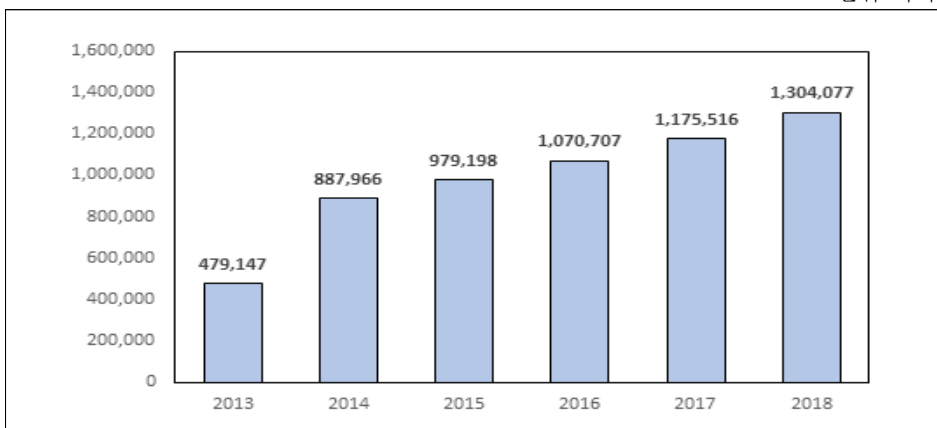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10.11.),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동물보호법」 제47조).

○ 전체 등록동물 마릿수는 2013년 47만 9,147마리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130만 4,077마리로 증가하였음. 2018년에 신규로 등록된 반려동물 마릿수는 14만 6,617마리로 2017년 신규 등록마릿수보다 39.8% 증가함.

**그림 3-6** 동물 등록 현황

단위: 마리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이 있음. 2018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61.0%가 내장형이며, 외장형은 27.7%, 인식표는 11.2%임.

- 한편, 국민 인식조사에서 반려동물 등록 방법 중 마이크로칩 내장형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1.6%로 나타났음. 다만 반려동물 양육자는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50.1%로 나타났고 현행 세 가지 선택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9.9%로 나타남(신종화 외 2018: 37).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반려동물 등록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표 3-9** 반려동물 등록 방법

단위: 마리, %

연도	신규 등록마릿수	등록 방법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계
2015	91,232	55.0	36.2	8.8	100.0
2016	91,509	65.2	27.6	7.2	100.0
2017	104,809	67.5	25.8	6.7	100.0
2018	146,617	61.0	27.7	11.2	100.0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짐. 2018년 기준 3,498개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중, 동물병원이 3,245개소(92.8%)로 가장 많음.

표 3-10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소, %

연도	계(비중)	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	보호단체
서울	837(23.9)	772	42	21	2
부산	239(6.8)	236	2	1	-
대구	157(4.5)	154	3	-	-
인천	179(5.1)	174	5	-	-
광주	93(2.7)	92	1	-	-
대전	109(3.1)	103	5	1	-
울산	53(1.5)	31	13	9	-
세종	17(0.5)	17	-	-	-
경기	962(27.5)	928	16	18	-
강원	110(3.1)	80	5	23	2
충북	97(2.8)	84	6	7	-
충남	108(3.1)	89	10	9	-
전북	93(2.7)	67	17	9	-
전남	61(1.7)	52	3	6	-
경북	142(4.1)	130	9	3	-
경남	192(5.5)	189	3	-	-
제주	49(1.4)	47	1	1	-
전체	3,498(100.0)	3,245	141	108	4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2019: 7).

## 2.2.2. 반려동물 양육자의 준수사항

○ 다음 표는 반려동물 양육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임.

- 반려동물의 사육환경, 건강관리, 위생관리 등 기르는 장소에서의 사육 관리,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양육 중인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 등으로 구분하여 법적 준수사항을 제시함.

표 3-11 반려동물 양육자의 준수사항

구분		주요 내용
사육 관리	일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li> <li>■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li> <li>■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함.</li> </ul>
	사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 종류, 크기, 특성, 건강 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li> <li>■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li> <li>■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li> <li>■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함)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2마리 이상일 경우 마리당 해당 기준 충족)</li> <li>-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li> </ul> </li> <li>■ 실외 사육 시,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li> <li>■ 목줄을 사용하여 사육 시, 목줄의 길이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li> </ul>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li> <li>■ 개는 6개월마다 1회 구충할 것</li> </ul>
	위생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에게 질병(곰팡이 등 상해를 포함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 제공</li> <li>■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li> <li>■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li> <li>■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li> <li>■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li> <li>■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li> </ul>
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표 부착: 기르는 곳을 벗어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함(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li> <li>■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 사용(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li> <li>■ 배설물 즉시 수거(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li> <li>■ 입장 제한된 정부 지정 자연공원 출입 금지(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li> </ul>
손해배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을 물어 상해를 내는 등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치료비 등 손해배상(민법)</li> </ul>
형사책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li> <li>■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li> <li>■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li> <li>■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는 경우 등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 범칙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짐.</li> </ul>

주: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동물보호법」 제46조).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19.10.11.).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10.11.).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2.3.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 맹견을 소유한 사람에게에는 맹견 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 등에게 상처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일반 반려동물 양육자의 의무와 더불어 더 높은 수준의 의무가 부여됨.

-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벌칙은 다음 표에 제시됨.

**표 3-12**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구분	주요 내용
소유자 관리의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li> <li>■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li> <li>■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li> </ul>
맹견 출입 제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맹견 소유자 등은 다음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li> <li>-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li> </ul> </li> </ul>
교육 의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li> <li>■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li> <li>■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li> <li>-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ul>
형사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자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li> <li>■ 소유자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19.10.1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10.11.).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2.4. 동물 학대 감시 체계<sup>18)</sup>

○ 동물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동물 학대와 관련된 법 규정이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됨. 다음 표는 동물 학대와 관련되어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제시한 것임.

- 2017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음.

**표 3-13** 동물 학대 등의 금지 규정 및 벌칙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등의 규정	벌칙 또는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li>-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li>-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li>-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ul> </li> </ul>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학대 행위 금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li>-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 손상, 체액 채취,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 설치 행위</li> <li>-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li>-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li> <li>-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ul> </li> </ul>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금지(「동물보호법」 제8조제3항)</li> </ul>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자 등 동물 유기 금지(「동물보호법」 제8조제4항)</li> </ul>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맹견 유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동물학대 등의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금지, 동물 경품 제공 금지,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 금지 등(「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li> </ul>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 10.11.). 「동물보호법」.

<sup>18)</sup>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2019.10.16.). 동물학대방지.

○ 동물 학대가 신고 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심각한 수준의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단순 동물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조치를 취함.

- 정부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3-7** 동물 학대 감시 체계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2019.10.16.). 동물학대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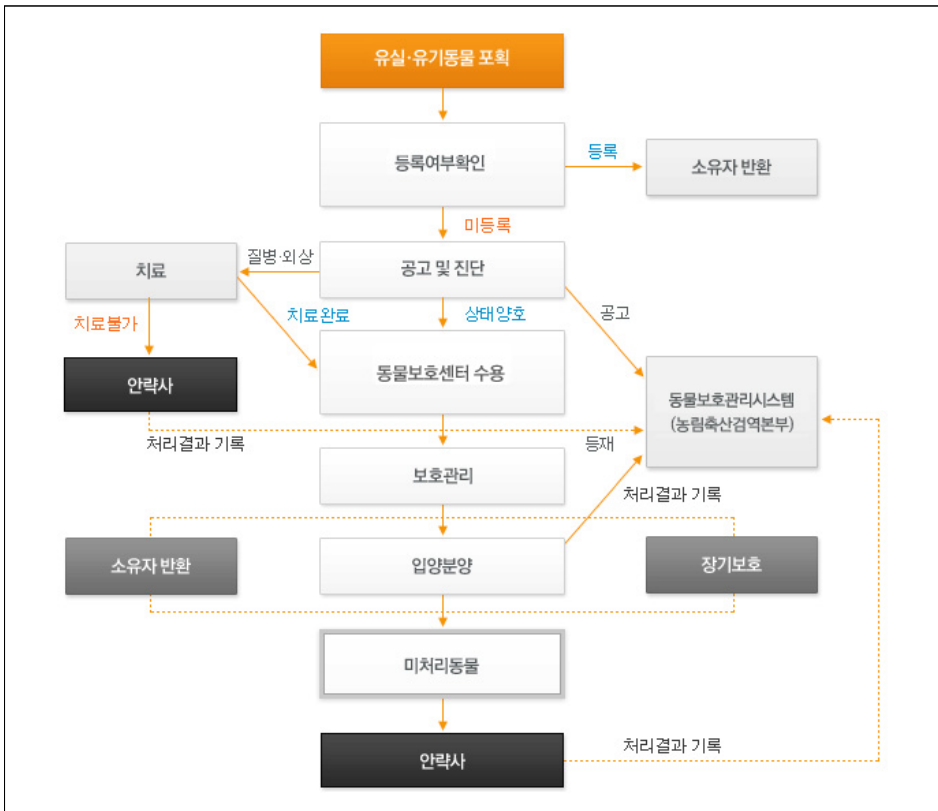
## 2.2.5. 유기·유실 동물의 관리

○ 유기 또는 유실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음.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된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주에게 인도, 일반인 분양, 치료, 보호 관리, 안락사 등의 조치를 취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기·유실관리와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시스템을 운영 중임.

**그림 3-8**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계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2019.10.16.). 유실·유기동물.

## 2.2.6. 영업 관리: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다음 표에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업과 동물미용업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제시됨.

**표 3-14**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 종류		기준 및 준수사항
동물 위탁 관리업	시설 및 인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li> <li>■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과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구비</li> <li>■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못 나가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li> <li>■ 동물병원을 같이 할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li> <li>■ 위탁관리실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li> <li>■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 확보</li> </ul>
	영업자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 제공</li> <li>■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li> <li>■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li> <li>■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 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li> <li>■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li> <li>■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업소 관련 정보 등이 담긴 계약서 제공</li> <li>■ 위탁관리하는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 수시 확인</li> </ul>
동물 미용업	시설 및 인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li> <li>■ 소독기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li> <li>■ 미용작업실은 미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미용작업대와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장치 구비</li> <li>■ 미용작업실에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수·배수시설, 냉·온수 설비 및 건조기 구비 등</li> </ul>
	영업자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li> <li>■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 보관</li> <li>■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준수</li> <li>■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기준 준수</li> </ul>

주: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의 공통기준은 <표 3-5>, 영업자 준수사항의 공통기준은 <표 3-6>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10.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별표 10(영업자 준수사항).

### 2.2.7.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구충

○ 반려동물 소유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동물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시키고,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해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경우는 반드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함.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예방접

중은 생후 6주부터 시작되는데,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다면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접종해야 하며, 예방접종의 시기와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sup>19)</sup>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인 광견병의 경우,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2.3. 사후 단계

### 2.3.1. 반려동물 사망 후 사체처리 규정

-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사망하였을 경우, 동물 사체는 함부로 버릴 수 없으며,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도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이 부과됨.
  - 사체 투기 금지 관련 법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및 「항만법」 제22조 제1호임.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음. 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 또는 소각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할 수 없음(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0.11.). 이 조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sup>19)</sup>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19.10.11.).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의 사체는 매장, 화장, 생활쓰레기 봉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음.

**표 3-15** 동물 사체의 처리방법

구분	처리 방법
매장 (동물병원/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장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동물병원 사망</b>: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 처리</li> <li>■ 반려동물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li> <li>■ <b>동물병원 이외에서 사망</b>: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됨.</li> </ul>
화장 (동물장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동물병원 사망</b>: 소유자가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소각</li> <li>■ <b>동물병원 이외에서 사망</b>: 소유자가 화장장에서 소각 또는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 소각</li> </ul>
장례 및 납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하여 장례 및 납골할 수 있음.</li> </ul>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19.10.11.).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2.3.2. 동물장묘업 영업 관리

○ 다음 표에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제시됨.

**표 3-16** 동물장묘업의 시설,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구분	기준 및 준수사항
시설 및 인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 구비</li> <li>■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 구비</li> <li>■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 유골을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부착</li> <li>■ 이외에 별도의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세부사항은 별도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 마련 가능</li> </ul>
영업자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 처리</li> <li>■ 동물의 사체를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소유자에게 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 제공</li> <li>■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li> <li>■ 환경 측정대행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li> <li>■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화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후 보고</li> <li>■ 영업 실적 보고서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보고</li> </ul>

주: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의 공통기준은 <표 3-5>, 영업자 준수사항의 공통기준은 <표 3-6>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10.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별표 10(영업자 준수사항).

### 3.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국민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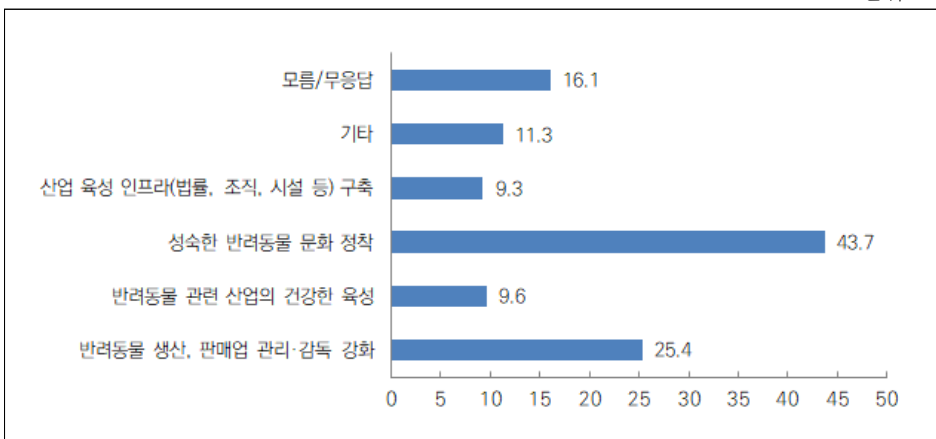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018)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43.7%로 가장 높았음.

○ 반려동물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인배 외(2017: 82-83)의 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소유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90% 이상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3-9**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018: 20)의 자료를 재인용함.

**표 3-17**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계
반려동물 상업적 대량 생산	7.3	82.1	10.7	100.0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관련 처벌 강화	95.4	2.7	2.0	100.0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관련 처벌 강화	93.5	3.1	3.5	100.0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이수 의무화	83.4	9.2	7.5	100.0

자료: 지인배 외(2017: 83)의 <표 4-2>와 <그림 4-1>을 재인용함.

-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유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높았음(신종화 외 2018: 68).

**표 3-18** 유실·유기동물 예방 방안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반려동물 양육층	반려동물 비양육층	전체
유기자 처벌 강화	42.5	39.0	39.8
미등록한 소유자의 처벌 강화	23.7	33.2	31.0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16.1	16.6	16.5
동물 생산/판매 사업 규제 강화	11.1	7.4	8.3
중성화 수술 등 개체 수 조절비용 정부 일부 지원	6.6	3.6	4.3
동물 사육 의무교육 필요	0.0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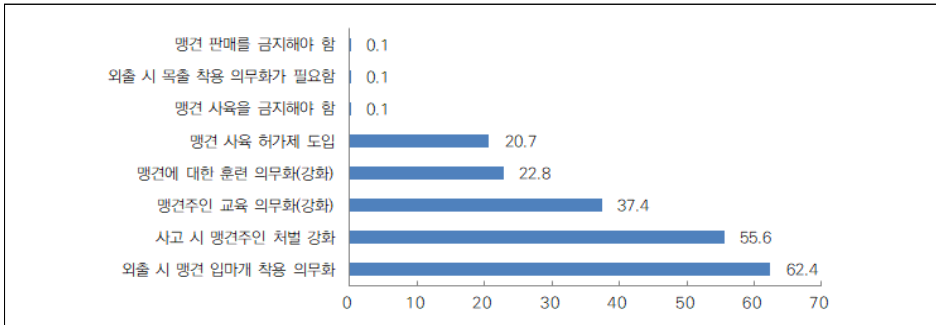
자료: 신종화 외(2018: 68)의 <그림 38>을 재인용함.

- 반려동물로 인한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화와 개 물림 사고 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맹견의 공격 피해 해결방안으로 ‘외출 시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가 6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나타났음(지인배 외 2017: 84).
- 신종화 외(2018)의 조사에서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관리가 부실할 경우 소유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6.6%로 가장 많았음.

**그림 3-10** 맹견의 공격 피해 해결 방안

단위: %



주: 응답자 2,000명의 조사결과이며, 1순위와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자료: 지인배 외(2017: 84)의 <그림 4-2>를 재인용함.

**표 3-19**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단위: %

방안	계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14.8
아이들이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2.4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16.1
목줄이나 입마개 등 개의 안전관리가 부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6.6
계	100.0

자료: 신종화 외(2018: 67)의 <그림 37>을 재인용함.

○ 또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서 상업적 생산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동물 생산, 판매업이 동물 보호·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됨.

- 반려동물 관련 필요 정책에서는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25.4%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지인배 외(2017)의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상업적 생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82.1%로 나타남.

○ 국민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유기, 학대,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제4장

# 반려동물 보호·관리의 문제점







# 4

## 반려동물 보호·관리의 문제점

### 1. 반려동물 관련 법 위반사항

○ 다음 표에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활동에 의한 반려동물 관련 법 위반처분실적을 나타낸 것임.

- 2016년 법 위반 처분건수는 477건에서 2017년 441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는 549건으로 크게 증가함. 2018년 기준, 위반처분 유형별로는 동물관리 미이행이 28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물미등록 131건, 영업미등록 59건, 동물 학대 28건, 유기 15건 순으로 많음.

○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활동으로 인한 위반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동물관리 미이행임.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준수해야 사육관리 의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배설물 처리 의무, 목줄 착용 의무, 개 물림 사고 방지 의무 등에 대한 위반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10.7~13.3%로 나타났고, 해당 의무를 전혀 모르는 응답자도 9.4~19.9%로 나타났음.

**표 4-1** 반려동물 관련 법 위반처분 실적(2018년 기준)

단위: 명, 건

지역	동물보호 감시원(명)	위반처분 유형(건)						
		동물 미등록	동물관리 미이행	영업 미등록	동물 학대	유기	기타	계
서울	62	2	30	6	-	1	12	51
부산	22	-	35	3	1	-	5	44
대구	7	-	15	-	-	3	1	19
인천	13	-	-	8	2	2	2	14
광주	3	-	7	3	-	-	-	10
대전	9	82	5	-	1	1	5	94
울산	7	-	-	-	2	-	-	2
세종	4	-	-	-	-	-	-	-
경기	97	9	60	24	13	5	3	114
강원	28	1	4	-	-	1	1	7
충북	12	1	-	-	-	-	-	1
충남	18	1	4	2	4	-	1	12
전북	22	-	3	2	1	1	-	7
전남	24	-	3	2	-	-	-	5
경북	24	-	95	3	3	-	-	101
경남	20	3	17	5	-	1	2	28
제주	3	32	6	1	1	-	-	40
계	375	131	284	59	28	15	32	54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7.23.),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표 4-2** 반려동물 관련 주요 의무 인지 및 준수 여부

단위: %

항목	알고 있음		모름	
	준수	위반경험	들어봤음	전혀모름
도시공원 내 배설물 처리 의무	55.9	13.0	21.7	9.4
반려견 목줄/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51.3	12.3	25.4	11.0
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	47.0	12.0	27.7	13.3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 입힐 시 과실차상죄	44.9	10.7	31.9	12.6
동물유기 시 과태료 부과	41.9	11.9	26.4	19.9
반려동물 안은 채 운전 금지	40.7	13.3	26.7	19.3

주: 반려동물 양육가구 700명의 응답 결과임.

자료: 황원경 외(2018: 27).

○ 반려견 양육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려견을 등록해야 함. 그러나 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처분 건수가 131건으로 나타났고,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의 49.8%(신종화 외 2018: 29)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동물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함. 동물생산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판매업, 동물 운송업, 동물장례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은 등록을 해야 함. 2018년 영업 미등록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59건이었으며, 여전히 미등록, 무허가 상태에서 관련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동물생산업의 경우, 2017년 545개소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2018년에는 1,18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0~400개소가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최근 규모화된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소규모 브리더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 및 소재 파악도 어려운 실정임.

- 생산업을 포함한 동물 관련 영업장들이 무허가, 무등록으로 운영될 경우, 동물보호를 위한 영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 동물 관련 영업의 규정과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영업장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 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에 대한 위반사항도 적발되기도 함. 해마다 유기·유실 동물이 10만 마리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와 관련된 내용도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음.

## 2.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문제점

### 2.1. 입양 단계

#### 2.1.1. 반려동물 상업적 생산에 대한 논란

-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에서 반려동물의 과다 생산과 동물 유기,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박효민 외 2019: 10).
- 반려동물의 상업적인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물림 사고, 유기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McMillan(2018)은 모견이 비위생적인 환경과 좁은 케이지에 갇혀 지내며, 산책 등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모견 상태뿐만 아니라 번식장의 비위생적인 환경은 태어난 강아지들에게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강아지들이 부모견 및 동배 강아지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스트레스가 줄어드나, 어릴 때 모견과 떨어진 강아지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행동학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McMillan 2018).

#### 2.1.2. 어린 반려동물의 유통

-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와 고양이는 2개월 이상만 판매될 수 있지만, 일부 생산업체나 펫숍에서는 2개월 이전의 미성숙한 새끼가 판매되는 경우도 있음. 모견의 보호하에 면역력 증강이나 사회성 습득 등의 건강한 발육이 어려워져 유통 단계에서만뿐만 아니라 전체 생애주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 반려동물이 유통되는 경우 유전적 문제와 건강 상태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비 부담 등으로 유기견 증가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지인배 외 2017: 27-28).
- 강아지가 크면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린 동물이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성숙한 동물 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또한, 어린 강아지가 거래되면서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갈등도 초래하기도 함.

### 2.1.3.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 일부 번식장의 반려동물 생산 과정에서의 학대 행위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적이 있음. 반려동물 생산 과정에서 일부 생산업자들이 반려동물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소홀히 관리하거나 비윤리적인 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sup>20)</sup>
  - 이 사건을 계기로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7년 7월 1일부터는 자가진료가 산업동물로 제한되었고,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생산업에서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 한편, 일부 비윤리적인 생산업체들이 반려동물 생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동물생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동물운송업,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sup>21)</sup>
  - 동물생산업계는 일부 비위생적, 비윤리적 번식장 때문에 업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sup>22)</sup> 국내에서의 동물생산

<sup>20)</sup> SBS TV 동물농장(2016.05.15.).

<sup>21)</sup> 본 연구의 전문가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임.

업이 위축될 경우 동물 수입으로 대체될 수도 있음.

#### 2.1.4. 반려동물 유통 관련업에 대한 약한 규제

○ 영업장에서 입양된 동물이 유전적인 소인, 모견과 강아지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행동학적 문제가 많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McMillan(2018)은 펫숍에서 온 강아지들이 브리더 분양, 보호소 입양, 일반 가정에서 분양된 강아지들보다 공격성과 두려움, 불안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적함. 또한, 어린 시절 어미한테서 떨어진 강아지 중 펫숍을 통해 구매된 개들이 산책 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 과도한 짖음, 애정결핍 행동 등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음.

○ 위와 같은 동물의 판매·전시·이동 등에 관한 영업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위탁관리업, 미용업, 장묘업 등은 동물복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동물의 생산·수입·판매·전시·운송 관련 영업은 유기동물, 동물 학대, 상해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sup>22)</sup>

#### 2.1.5. 개인 브리더에 대한 규정 미비

○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체 외에 혈통견 생산 및 분양 등을 위한 브리더도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지인배 외 2017: 13-14), 개인 브리더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

<sup>22)</sup> 스카이드일리(2018.04.21.).

<sup>23)</sup> 법률신문(2019.02.25.).

기 어려움. 개인 브리더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동물생산업 기준에 의하면, 소규모<sup>24)</sup>로 생산하는 영업자는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에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추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 사육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 브리더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개, 고양이를 생산하면 무허가, 무등록 영업자가 됨.
- 무허가, 미등록 영업자에 의해 생산되는 동물은 적절한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뿐더러, 반려동물 판매 시 소비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있음.

#### 2.1.6. 지인 분양에 따른 문제

- 반려동물 양육자는 절반 이상이 지인을 통해 분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표 2-2>. 펫숍이나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육관리나 양육자의 준수사항 등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양육자에게 공지되지만, 지인을 통해 분양받은 양육자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어 동물 학대, 유기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동물 학대, 유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의 무분별한 번식을 제한하여 지인 간 분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sup>25)</sup>

<sup>24)</sup> 체중 5kg 미만: 20마리 이하, 체중 5~15kg 미만: 10마리 이하, 체중 15kg 이상: 5마리 이하

<sup>25)</sup>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TF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제기됨.



## 2.2. 양육 단계

### 2.2.1. 낮은 동물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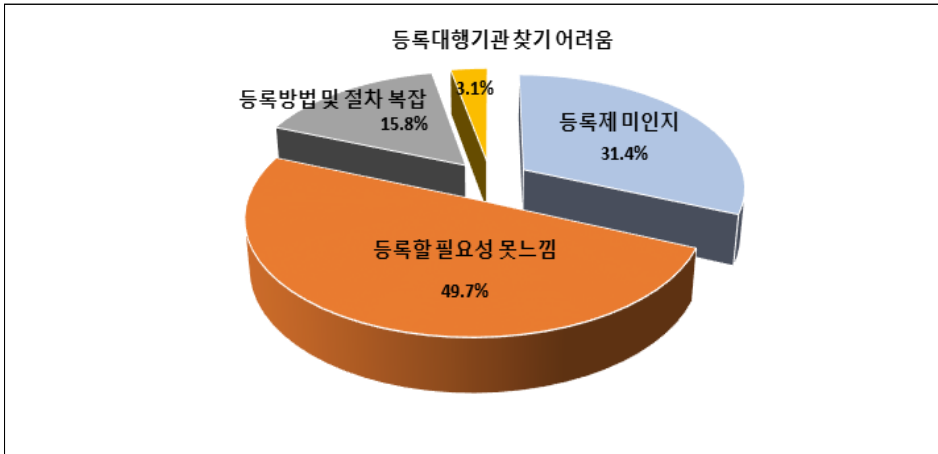
- 동물의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동물 마릿수가 증가하고 있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물등록제를 홍보하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물등록률은 높지 않은 편임.
  - 전국 등록대상 동물인 개 마릿수를 고려하면, 2018년 동물등록률은 25.2%<sup>26)</sup> 수준임. 신종화 외(2018: 29)의 조사 의하면, 반려견 양육자의 49.8%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2019년 7~8월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사진 신고 기간을 운영함. 이 기간 2018년 신규 등록 마릿수의 2배가 넘는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sup>27)</sup>
-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등록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이 등록률이 낮은 이유로 꼽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는 ‘등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고, ‘동물등록제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31.4%,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라는 응답이 15.8% 순으로 많았음.
- 동물등록률이 낮으면 동물이 유실되었을 때 양육자에게 인도되기도 어렵고, 동물 유기로 이어질 수 있음.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sup>26)</sup> 2018년 개 추정마릿수 515만 8,000마리와 등록 마릿수 130만 4,077마리를 이용하여 추정함.

<sup>27)</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9.11.).

그림 4-1 반려견 미등록 이유

단위: %



자료: 신종화 외(201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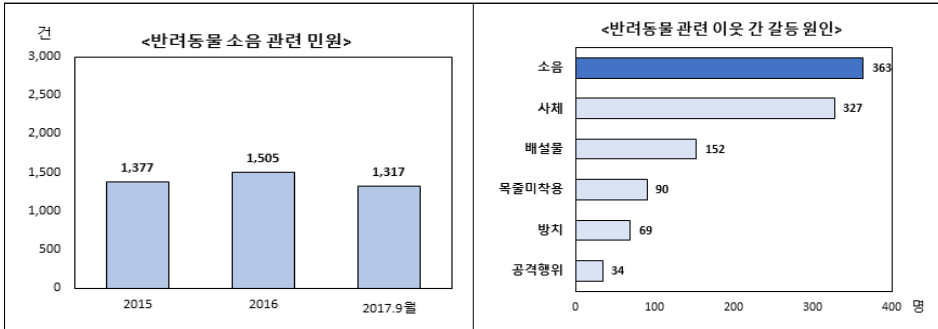
## 2.2.2.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 양육자와의 갈등

### 가) 소음으로 인한 갈등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애견카페 및 애견숍 주변에서의 동물 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의 소음 관련 민원이 계속 해서 생기고 이웃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

- 서울시의 2017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은 9월 말까지 1,317건으로 계속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가 2016년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원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35건 중에 363건(35.1%)이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된 것이었음. 소음 문제의 경우 주로 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에 발생함.

**그림 4-2**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 건수 및 이웃 갈등 원인(서울시)



주: 민원 건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조사 자료이며, 이웃 갈등 원인은 2016년 서울 8개 자치구 조사 결과임.  
 자료: 연합뉴스(2019.02.17.), 한겨레(2017.07.17.) 기사의 자료를 재인용함.

○ 동물의 소음 문제는 이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양육자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음. 신종화 외(2018: 98)에 따르면, 반려견의 ‘시끄러움(짖음)’이 양육자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응답(16.5%)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법상 소음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임. 현행법상 동물의 소음은 법에 포함되지 않음.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는 반려동물이 짖거나 벽, 바닥을 긁는 소리를 층간 소음으로 규정하고, 소음이 일정 수준<sup>28)</sup>을 넘길 경우 소음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조항이 있어도 소음피해 증명이 어려울뿐더러 동물 주인이 동물의 보관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민법」 제759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음.

<sup>28)</sup> 서울시(2019.10.05.). 5분간 등가(평균)소음도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공기전달 소음 기준).

나) 개 물림 사고 등 반려견의 공격으로 인한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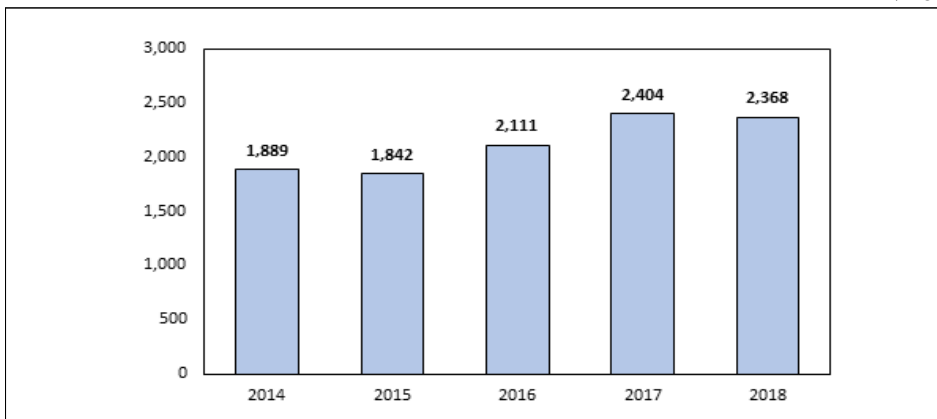
○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자의 의무위반 등으로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

- 소방청 보도자료(2019.02.13.)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명에서 2018년 2,368명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매년 2,000명 이상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 계절별로는 야외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가 월평균 226명으로 연평균 191명보다 18.3% 많았음. 2018년 기준, 연령별로는 51세 이상 이송 환자가 50세 이하보다 18.7% 많았고, 지역별로는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이 750명(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03명, 서울 188명 순으로 많았음.

**그림 4-3**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환자 이송 현황

단위: 명



주: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현황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해 물림 사고가 발생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나타냄.

자료: 소방청 보도자료(2019.02.13.) 재인용.

**표 4-3** 월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현황

단위: 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6	116	122	138	180	216	207	219	224	232	185	140	132	2,111
2017	139	115	182	207	250	232	244	228	224	229	205	149	2,404
2018	127	125	204	203	233	246	262	230	211	190	167	170	2,368

자료: 소방청 보도자료(2019.02.13.) 재인용.

○ 이외에도 동물의 사체, 도시공원의 공용 장소에서의 배설물 방치, 목줄 미착용, 반려동물의 관리 소홀, 어린이와 같은 반려동물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도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 양육자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

-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경우 배변 봉투 지참, 목줄 착용 등 반려동물 양육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임.

다) 개 물림 사고 후 반려견 양육자의 무책임한 행동

○ 매년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로 반려견 양육자와 피해자와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고, 반려견 양육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함.

-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716명, 진료비는 14억 원으로 조사됨.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 물림 피해를 입힌 반려견 양육자로부터 환수해야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4억 1,000만 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인재근 의원실).<sup>29)</sup>
- 건강보험공단은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함(연합뉴스, 2019.10.25.).

<sup>29)</sup> 연합뉴스 보도자료(2019.10.25.)의 내용을 재인용.

**표 4-4** 개 물림 피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연도	피해자 (명)	진료비(천 원)			진료건수(건)				
		결정금액	환수금액	환수율(%)	결정건수	완납	(완납률, %)	일부납부	미납
2014	141	208,919	189,151	90.5	161	140	87.0	7	14
2015	128	211,114	186,105	88.2	151	130	86.1	6	15
2016	124	238,091	209,432	88.0	146	129	88.4	8	9
2017	118	306,123	183,880	60.1	155	125	80.6	8	22
2018	135	323,802	195,345	60.3	162	107	66.0	13	42
2019	70	141,739	56,693	40.0	89	39	43.8	6	44
계	716	1,429,787	1,020,605	71.4	864	670	77.5	48	146

자료: 연합뉴스(2019.10.25.)의 자료를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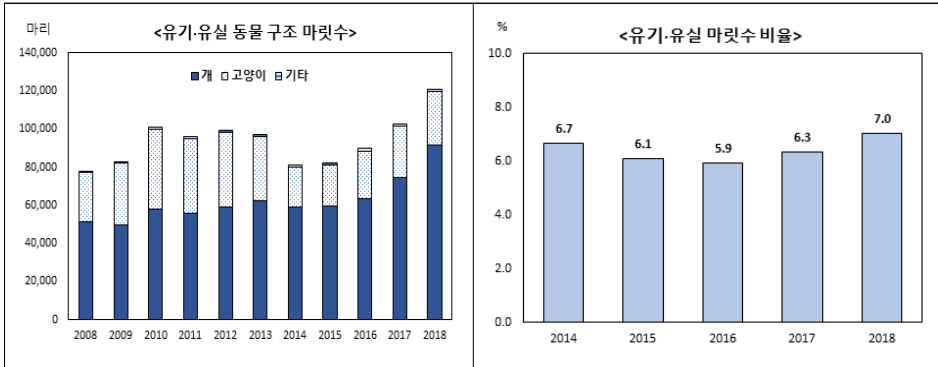
### 2.2.3. 유기·유실 동물의 관리 문제

#### 가)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및 증가

○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고 있음. 2018년 기준 유실·유기동물 구조 마릿수는 총 12만 1,077마리로 2008년 이후 연평균 4.5%씩 증가하였으며, 2017년보다 18.0% 증가하였음. 동물등록 마릿수의 7%가 유기·유실되는 실정임.

- 2018년 동물 종류별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은 개가 9만 1,797마리(75.8%), 고양이 2만 8,090마리(23.2%), 기타 1,190마리(1.0%)였음.
-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등록 마릿수가 증가하였지만, 유기·유실 마릿수가 더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등록 마릿수에서 유기·유실 마릿수 비율이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4-4 유기·유실 동물 구조 현황



주: 유기·유실 마릿수 비율 = 유기·유실 마릿수(개) ÷ 등록마릿수 × 100.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유실·유기동물은 소유자에게 인도,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되고, 안락사 또는 자연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일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받음.

○ 2018년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 12만 1,077마리 가운데 3만 3,422마리(27.6%)가 분양되었으며, 2만 8,890마리(23.9%)는 자연사, 2만 4,509마리(20.2%)는 안락사되었음. 소유자에게 인도된 경우는 1만 5,745마리로 그 숫자는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13.0% 수준임.

표 4-5 유기·유실동물 보호 형태

단위: 마리, %

연도	유실·유기 구조 마릿수	보호 형태(%)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기타	보호 중
2014	81,147	13.0	31.4	1.0	23.0	22.7	1.0	7.9
2015	82,082	14.6	32.0	1.2	22.7	20.0	1.3	8.2
2016	89,732	15.2	30.4	1.6	25.0	19.9	1.7	6.2
2017	102,593	14.5	30.1	1.9	27.1	20.2	1.5	4.7
2018	121,077	13.0	27.6	1.8	23.9	20.2	1.8	11.7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나) 유기·유실 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동물보호센터는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면서 2016년부터는 300개 미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센터는 점차 증가하지만, 위탁보호시설은 감소 추세임. 2018년 기준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는 31개소이며, 위탁보호(시설위탁 12개소 포함) 시설은 267개소임.
-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이에 따라 동물 구조와 보호, 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2018년 유실·유기동물 처리비용 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약 200억 원으로 2011년 88억 원 수준에서 연평균 12.5%씩 증가하였으며, 2017년 대비 28.9% 증가하였음.

**표 4-6** 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비용

단위: 개소,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개소)	339	349	361	368	307	281	293	298
지자체 직영	23	25	25	25	28	26	33	31
위탁 보호	316	324	336	343	279	255	260	267
운영비용(억 원)	87.9	105.8	110.8	104.4	97.5	114.8	155.5	200.4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다)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소의 관리 소홀

-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sup>30)</sup> 유기·유실 동물 보호시설에 보호되는 동물들은 주인에게 인도되거나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되는데, 반려동물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분양이 안 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음. 동물 보호나 안락사 및 자연사 과정에서 동물 보호시설 관리 문제가 대두됨.

30)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TF 회의 내용.



○ 최근에는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이용된 사건<sup>31)</sup>이나 관리가 어려워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는 사건<sup>32)</sup>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관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기도 함.

○ 지자체가 유기·유실 동물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구조된 동물 마리당 예산 지원이 이루어짐. 이러한 지원체제로 인해 위탁업체가 구조한 동물 수를 지자체에 허위로 보고하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건도 있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sup>33)</sup>

○ 일부 사설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동물보호 환경이나 유기동물 방치 등 동물의 관리 소홀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라) 유기·유실 동물의 야생화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

○ 동물의 유기·유실로 인해 야생화된 동물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민들을 공격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유기·유실 동물의 야생화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야생화된 동물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2.2.4. 양육 단계에서의 동물 학대

○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 양육자의 동물 학대 및 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함.

- 반려동물에 과다한 비용 지출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

---

31) 조선일보(2019.10.22.).

32) 한겨레(2019.01.11.).

33) 시사저널(2019.08.24.).

는 사건도 있으며, 동물을 때리거나 던지고 고의로 죽이는 동물 학대 사건 사례도 있음. 그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 행위를 영상매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sup>34)</sup>

-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 중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건은 70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68건은 벌금형에 그치고, 2건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2016년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쫓는 물에 모두 집어넣어 죽인 남성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일주일을 굶긴 반려견에게 강제로 막걸리를 먹이고 온라인에 인증사진을 올렸던 여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음.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7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바 있음.<sup>35)</sup>

○ 끊임없이 이어지는 동물 학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함.

- 「동물보호법」 제46조<sup>36)</sup>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그러나 형량 자체가 낮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동일범죄 전력이 없다면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커 낮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매일경제, 2019.03.05.).

## 2.2.5. 반려동물 카페 및 호텔 등 영업 관련 문제

○ 반려동물 카페 등의 동물 관련 영업을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양육자와 영업자

---

<sup>34)</sup> 세계일보(2019.07.30.).

<sup>35)</sup> 매일경제(2019.03.05.).

<sup>36)</sup>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2019.10.11.).

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애견호텔에 반려동물 양육자가 동물을 위탁한 후 찾아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sup>37)</sup>도 있음.

- 애견카페, 애견호텔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고객 강아지의 상해 및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sup>38)</sup>

○ 반려동물 카페, 호텔, 유치원 등 동물 관련 신규 업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 영업에 대한 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 이러한 신규업종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도 필요한 실정임.

- 예를 들어, 애견카페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고 해당 영업의 시설 기준을 적용받는데,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관련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고,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나 용품을 설치해야 함. 이러한 제약 사항 외에 동물 및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3. 사후 단계

### 2.3.1. 동물 사체의 불법 매립

○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에 따라 매장, 화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함.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땅에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없음.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반려동물 사망했을 때 땅에 매립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sup>37)</sup> news1(2019.10.22.).

<sup>38)</sup> 국민일보(2018.07.17.), 아시아경제(2018.09.09.).

- 반려동물 사망했을 때 ‘땅에 매립한다’는 응답률이 63.2%로 나타났고, 또한, 향후 반려동물 사망 시, ‘장묘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 다음으로 ‘땅에 매립한다’는 응답률(개 27.5%, 고양이 44.3%)이 높게 나타났음.

○ 동물이 가정 등 병원 외에서 죽었을 경우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함. 반려동물 폐사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땅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sup>39)</sup>

-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반려동물 사망 시 땅에 매립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땅에 매립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 법과 현실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지인배 외 2017: 64).

### 2.3.2.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과 불법 장묘시설 운영

○ 대부분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묘시설 설치 시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도 있음(지인배 외 2017: 64).

- 정부의 지원으로 공공 장묘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장묘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데다가 공적인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어 동물세와 관련된 논란도 야기하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을 갖춘 업체가 부족하여 동물 사체를 불법 매립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으로 동물 사체 화장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지인배 외 2017: 64).

<sup>39)</sup>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2019.10.11.).

- 이동식 화장업체 등 불법 업체들이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훨씬 높아 영업을 계속한다는 지적이 있음.
- 동물화장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화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냄새, 먼지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함(지인배 외 2017: 64).

### 3. 반려동물 보호·관리 기반 측면의 문제점

#### 3.1. 반려동물 관련 기초통계 구축 미흡

-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호·관리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의 정확한 양육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지금까지 정부는 부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가 조사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이나 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또는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되는데, 조사 기관마다 양육 중인 가구 비율이나 마릿수에서 큰 차이가 있음.

#### 3.2. 반려동물 보호·관리 조직 측면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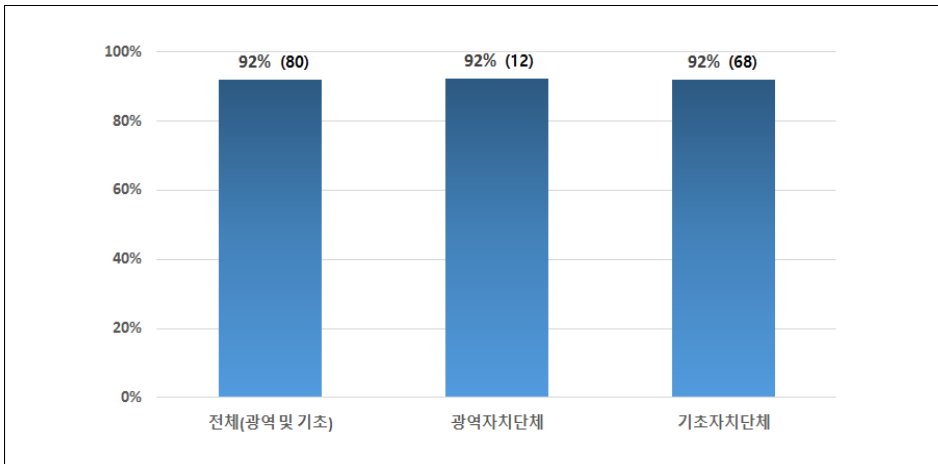
- 전담인력 부족으로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추적 및 단속 등의 어려움이 있음.

2018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인력은 총 800명(298개소)으로 개소당 2.7명에 불과하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와 유기·유실동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인력은 2015년 916명(307개소, 3.0명/개소)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음.

○ 반려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상곤 외 (2017)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별도의 부서 또는 팀 구성이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지자체의 92%가 동물보호·복지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보호·복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동물보호·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보다 1.5배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전상곤 외 2017).

**그림 4-5** 동물보호·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현황



주: 괄호 안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임.

자료: 전상곤 외 (2017: 72).



## 제5장

# 외국의 반려동물 보호·관리 정책과 시사점







# 5

## 외국의 반려동물 보호·관리 정책과 시사점<sup>40)</sup>

### 1. 미국

#### 1.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반려견 사육 마릿수는 2000년의 6,800만 마리에서 2017년 8,970만 마리로 연평균 1.6% 증가하였으며 반려묘는 2000년 7,300만 마리에서 2017년 9,520만 마리로 증가함(지인배 외 2017: 136).

- 반려견 사육 가구 수는 2000년의 4천만 가구에서 2017년 6,020만 가구로써 연평균 2.4%씩 증가하였으며, 반려묘 사육 가구 수는 2000년의 3,470만 가구에서 2017년 4,710만 가구로 연평균 1.8%씩 증가함(지인배 외 2017: 136).

<sup>40)</sup> 영국과 호주 사례는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태영 교수의 위탁 원고를, 독일과 일본 사례는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의 위탁 원고를 토대로 작성함.

○ 미국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주로 농무부에서 담당하지만, 부서별로 담당 부분이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음. 93개의 동물보호에 관한 연방법<sup>41)</sup>에 반려동물 보호·관리 규정이 제시됨.

- 대표적인 연방동물 보호법은 「군용동물 입양법」, 「동물피해 조정법」, 「동물 복지법」, 동물 싸움에 관한 사항, 「인도적 도살법」, 「해양포유동물법」, 「28시간 법」<sup>42)</sup> 등을 들 수 있음.

## 1.2. 생산/분양(판매) 관련 규제 및 제도

### 1.2.1.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면허

○ 미 농무부(USDA)에서는 「동물보호법」(Animal Welfare Act)에 따라 판매 및 번식업자들을 대상으로 상업용 분양 면허(Commercial Dog Breeder License)를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서 판매업자(도매)는 애완, 연구 및 수업, 사냥, 경비 및 번식을 이유로 개를 거래하는 이를 말하고, 펫숍 등 일반적인 소매업자들은 해당되지 않음(지인배 외 2017: 149).

- 펫숍 등 일반적인 소매거래는 동물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구매자가 동물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경우를 말함. 동물을 인터넷 및 전화로 거래할 경우에는 소매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분양 면허를 받아야 함.

○ 일반 소매업자라고 하더라도 연구기관 또는 전람회 출품용, 타 소매점 납품 시에는 면허를 요구함(지인배 외 2017: 149). 개와 고양이를 매년 25마리 이상 연구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5마리 이상의 번식견 및 번식묘를 기르는 번식

---

41) 황선훈(2010)을 참고하여 작성함. <부표 1> 참고.

42) 미국 내 동물 운송 시 휴식 없이 28시간 이상 운송수단에 가둬두지 못하게 하는 법률임.

업자는 면허를 받아야 함. 면허는 Class A, Class B, Class C로 구별되며, <표 5-1>과 같음.

**표 5-1** 미국의 면허 종류

Class	내용
Class A	사육장에서의 동물 번식 또는 사육을 위한 면허, 대부분의 번식업자가 해당됨.
Class B	동물 구입 및 재판매, 또는 이를 위해 동물을 이송시키는 경우, 동물 경매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됨.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나이, 기존 거래업자에게 있었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짐.
Class C	동물 전시 및 출품하는 경우, 서커스 공연·동물원 전시·동물극 출연에 필요한 면허임. 그러나 가축 품평회, 로데오경기, 사냥개 선발대회(Field Trial), 소매상점 등은 제외됨.

자료: 지인배 외(2017: 150).

### 1.2.2.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미국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광견병 퇴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제도 시행을 통해 반려동물의 양도 및 분실 여부, 예방접종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등록하면서 납부하는 비용을 통해 동물보호소 운영과 시민 대상 반려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김소희 2004).
- 미국에서는 주 정부 또는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부표 2> 참고). 등록제 대상 반려동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애완돼지(네브래스카)와 애완족제비(유타)를 등록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함.
-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광견병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며, 중성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비용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중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1.2.3. 반려동물 입양 관련 규제와 제도<sup>43)</sup>

○ 워싱턴 D.C.<sup>44)</sup>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저렴한 중성화 병원 서비스, 반려동물 소유자에 관한 법률, 긴급 또는 기상 악화 시 반려견 돌봄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음. 이를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 등록 시 납부한 비용에서 2달러를 재원으로 이용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있음.

○ 뉴욕주<sup>45)</sup>에서는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모든 주립 또는 공공기금 후원을 받는 초등학교에서 동물보호, 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 동물 학대, 동물의 무분별한 확산 조절에 대해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리노이주에서는 주(州) 법률<sup>46)</sup>을 통해 동물 소유자가 자신의 동물을 돌보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며,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동물에게 충분한 양의 건강에 좋은 사료와 물, 적절한 쉼터 및 기후로부터의 보호, 적절한 수의학적 치료, 인도적인 돌봄 및 대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됨.

- 법 위반 시, B급 경범죄로 처벌되며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재범 또는 상습범의 경우 4급 중죄로 처벌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5,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함.

○ 버지니아 주법<sup>47)</sup>에서는 반려동물의 경우 소유자에게 ‘양육 의무(duty of

---

43) 김지현(2018)의 연구를 참고·인용하여 작성하였음.

44) 「워싱턴 D.C. 법률」 제 8-1810조.

45) 뉴욕주 「교육법」 제 809조.

46) 「일리노이주법」 제 510장(동물법) 제70/3조 (d).

47) 「버지니아주법」 제3.2편(농업, 동물사육, 식품) 제3.2-6503조.

care)’를 규정하고 위반 시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적당한 사료와 물, 청결한 쉼터, 반려동물의 나이·크기·종·무게를 고려한 공간, 적절한 운동과 이동, 질병과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수의학적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돌봄 의무는 공공 및 사설 동물보호소, 반려동물 판매점, 전시장, 미용사, 딜러에게도 적용됨.

- 법 위반 시, 4급 경범죄로 처벌되며 25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이 중 사료, 물, 쉼터, 치료를 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2급 경범죄로 6개월 이하 금고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공간, 운동, 이동을 제공하지 않는 계속된 위반행위의 경우 3급 경범죄로 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1.3.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1.3.1. 가정 내 양육 중 관련 규정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 주거 조항이나 주인이 제시한 임차계약서에 애완동물 키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표준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조항이 특약으로 명시된 경우 이를 재판상 다툴 수 없게 되어 있음(김수진 2003).

○ 오리건주<sup>48)</sup>에서는 자주 발생하거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경우 공적인 불법방해(Public Nuisance)로 간주하며, 이 경우 경찰이나 보안관, 동물 통제관이 개를 압류 또는 양육자를 법원에 소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벌금은 지자체에 따라 250~500달러임.

---

48) 「오리건주법」 609.095.

### 1.3.2. 외출 시 관련 규정(목줄, 배설물 처리 등)<sup>49)</sup>

- 반려견을 동반하여 산책할 경우 일부 주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주법에서 규정되지 않더라도 카운티, 시 및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법률안을 시행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보통 주법보다 더 강력한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부표 3> 참고).
- 맹견으로 지정된 종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며, 맹견의 종류는 법률로 규정됨. 맹견이 아니더라도 많은 주에서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벌금은 2~500달러에 달함. 재차 위반하는 경우 델라웨어주에서는 750~1,500달러로 가중처벌하고 있음.

### 1.3.3. 안전사고 발생 관련 규정(개 물림 사고 등)<sup>50)</sup>

- 개 물림 사고 관련 미국의 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과 「특정 종 통제법(Breed-Specific Legislation)」으로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와 특정 종에 대해 소유주에게 감독과 관리 책임을 지우는 법임(조성자 2019: 287). 양육자의 관리 감독 소홀로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양육자는 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됨.
- 두 번째는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양육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불법행위상의 「개 물림 손해 배상 책임법(Dog Bite Law)」임. 배상 책임의 정도에 따라 크게 「원바이트(One Bite) 법칙」, 「개 물림 엄격 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 「혼합형 책임법」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조성자 2019: 294-300).

<sup>49)</sup> Edgar Snyder and Associates([www.edgarsnyder.com](http://www.edgarsnyder.com): 2019. 09. 24.)의 내용을 인용함.

<sup>50)</sup> 조성자(2019)의 연구를 참고·인용하여 작성함.

- 「원바이트 법칙」의 경우 개가 사람을 공격한 것이 처음이면 양육자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내용이며, 「개 물림 엄격 책임법」은 개 물림 사건이 발생하면 양육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내용임.
- 「원바이트 법칙」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원바이트 법안」을 채택한 주보다 「개 물림 엄격 책임법」을 시행하는 주가 더 많음.

#### 1.4. 유기 동물 관련 규정

- 미국의 동물보호소는 주마다 운영체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정부가 관리하는 곳보다는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더 많은 상황임. 2016년 기준 약 7,076개의 보호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됨(Rowan and Kartal 2018). 보통 동물보호단체의 지역별 지부가 운영 중이며, 군소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곳도 존재함(데일리벳, 2015.03.25.).
- 지역 및 단체별로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보호소 운영 수준은 높게 평가됨. 동물보호소는 질병 관리, 개체 관리, 행동평가 등을 함. 보통 주 정부 관할 보호소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후원, 자체 수익원(진료수익 등)으로 재원을 충원하고 있음(전의식 외 2011).
-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해 구조 인력, 행동평가 인력, 관리 인력, 진료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일부 수의과 대학에서는 동물보호소에 대한 의료과목이 개설되어 동물보호소에 적합한 수의사를 양성하고 있음.



○ 동물보호소에서 특기할 내용은 안락사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임. 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매년 3.4~3.6% 증가하고 있으나 안락사당한 마릿수는 매년 8.6~8.7% 감소하고 있음. 이는 유기동물이 늘어나지만, 유기동물 입양과 양육자 인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임.

○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네바다, 뉴멕시코,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와이오밍, 루이지애나,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텍사스 등의 지역에서는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자격을 갖춘 수의사’ 또는 ‘안락사 자격사’가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음.

### 1.5. 동물 학대 관련 규정<sup>51)</sup>

○ 미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일정 의무 부담과 함께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및 향후 동물 소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짐.

- 또한, 동물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처벌과 함께 심리분석 또는 정신의학 분석을 명령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판결 받은 자의 비용으로 치료를 명령할 수 있음.<sup>52)</sup> 특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던 경우(애니멀 호터)나 청소년일 경우 위 조치사항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리노이주<sup>53)</sup>에서는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 학대, 동물 고문,

---

51) 김지현(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됨.

52) 「일리노이주법」 제510장(동물법) 제70/3조, 제70/3.01조, 제70/3.02조.

53) 「일리노이주법」 제510장(동물법) 제70/3조 4항.

오락 목적의 동물 싸움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범죄자가 구속될 경우 법 집행관은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있음. 압류된 동물은 공공 및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관리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학대자는 해당 동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됨. 압류된 동물은 입양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 인도적 안락사를 당하게 됨.

- 이와 함께 동물 학대 및 투견 위반 등으로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출소 후 10년 동안 맹견을 소유·관리할 수 없도록 규제<sup>54)</sup>하고 있음. 맹견이 아닌 경우 중성화한 경우에만 소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1.6. 반려동물 사후 관리(장례)를 위한 규정

- 미국 내 반려동물 묘지 및 화장시설은 약 750여 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망 시 반려동물 묘지에 매장하기 위해서는 관과 묘지 비용 등으로 평균 2,000~3,0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김문호 2017).

- 사체를 화장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 동물병원에 의뢰하게 됨. 사체 크기에 따라 50~100달러의 비용이 청구되며, 화장한 이후 유해를 납골함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추가 비용(약 100달러)이 발생됨.

- 반려견의 양육이 더 이상 불가능해 안락사를 요청할 경우 수의사 진단이 필요하며, 진료비용 35달러, 안락사 비용 65~75달러가 청구됨. 안락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45달러가 추가로 필요함.

---

<sup>54)</sup> 「일리노이주법」 제720장(범죄) 형법 제5/12-36조.

## 2. 영국

### 2.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 지난 5년간 영국의 반려동물 수는 감소세임. 반려동물 수는 2013년에 7,500만 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2018년 약 5,500만 마리로 추정됨. 영국에서는 주로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으며, 인구의 26%가 반려견을 양육함.
- 영국은 반려동물 애호 국가이며, 인구의 45%가 동물을 양육하고 있음. 양육 비율이 높다 보니 반려동물 사료 및 액세서리 등 관련 상품을 위한 큰 시장이 있음. 2017년 개와 고양이 사료 시장 가치는 25억 파운드로 추정됨.
- 영국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제도는 「동물복지법 2006」을 기반으로 하며, 환경농촌식품부에서 담당함. 반려동물의 불필요한 학대방지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잘 정립되어 있음. 특히 「동물복지법 2006」은 약 100년 전인 1911년 동물보호법을 대체하여 포괄적인 법률을 제공하기 위해 20개가 넘는 법률과 동물보호와 관련된 주요 판례법을 결합한 것임.
-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여러 가지의 지침(Guidance)과 시행령(Code of practices)이 여러 기관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특히, 잉글랜드의 경우 2018년에 동물복지규정 2018(Animal welfare regulation 2018)이 새롭게 도입됨. 이 규정은 동물과 관련된 5가지 활동에 대해 영국에서 동물 판매, 고양이나 개에 대한 탑승 제공 또는 준비, 말 채용, 개 사육, 사육 또는 전시용 동물 훈련 등의 새로운 허가제도를 도입함.

○ 반려동물 복지 업무는 환경식품농촌부(DEFRA)와 그 산하기관(Agency, Public body)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로는 생산, 판매, 소유, 질병, 여행, 수입 등에서의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 생산업자, 판매업자, 소유자로서의 복지 준수를 위한 법률(Animal Welfare Act, Animal Welfare Regulation), 지침(Guidance), 시행령(Code of practices) 등이 있음. 이외 반려동물의 해외여행이나 수입에서 준수사항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와 외교부(Foreign & Commonwealth Office: FCO)의 지침을 따름.

## 2.2. 생산/분양(판매) 관련 규제 및 제도

### 2.2.1.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면허

○ 개 번식에 관한 규칙<sup>55)</sup>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적용됨.

- 12개월간 강아지 3마리 이상을 번식시키는 자
- 개 번식(breeding dogs) 및 개 판매업을 광고하는 자

○ 위에 제시된 기준 중에서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지역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강아지들을 위한 광고에 면허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새 법에 포함된 조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번식업자(breeder)들은 직접 키운 강아지만 팔 수 있고, 강아지가 사육되고 자란 곳에서만 팔 수 있음. 강아지는 팔리거나 모견을 떠나기까지 8주가 지나야 하며, 강아지가 생물학적 모견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야 함.
- 사육자들은 ‘사회화와 습관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

---

<sup>55)</sup> 잉글랜드 동물복지규정 2018.

여야 하며, 모든 개는 건강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함. 개들의 유전적 특성, 신체적 특징 또는 건강 상태가 번식으로 인해 그들의 건강이나 복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떤 개도 번식을 위해 사육되어서는 안 됨.

○ 웨일스<sup>56)</sup>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를 사육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함.

- 구역(premises) 내에서 3마리 이상 모견을 사육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구역 내에서 3마리 이상 강아지를 번식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판매를 위해 3마리 이상의 모견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광고하는 경우
- 12개월 이내에 3마리 이상의 모견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 구역 내에서 강아지 번식 및 판매 사업을 광고하는 경우

○ 강아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면허(license)를 받아야 함.

- 1년에 5마리 이상 번식 및 판매, 개 사육 및 판매 사업 광고, 반려동물 매장과 같은 곳에서 상업적으로 개 판매
- 사육업자(breeder)는 아니지만, 12주 이하의 강아지를 판매하는 경우

○ 「반려동물법 1951」에 따라 동물복지를 유지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해야 하며, 반려동물 영업자를 관리하는 사람은 모두 지방의회(local council)의 면허(license)를 받아야 함. 의회는 면허 발급 이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 동물들을 적당하고 청결한 숙소에 수용하고, 적절한 음식과 음료 제공, 질병과 화재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 지방의회는 모든 조건을 면허에 첨부할 수 있음. 면허를 받은 건물을 조사할

---

<sup>56)</sup> 동물복지(개 사육)(웨일스)규정 2014.

수 있으며, 건물 조건이 부적합하거나 면허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거부할 수 있음.

- 의회는 이 지역에서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동물을 부적절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영업자에게는 주어진 의회의 권한 내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위원회와 함께 문제를 제기해야 함.
- 이 법 제2조에 의해 노점, 시장, 거리 등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

### 2.2.2. 개 번식 및 판매법

○ 이 법에 따라, 어떤 구역에서든 개를 위한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그 구역에서 판매를 위한 개 사육업자는 반드시 지방의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12개월 동안 5마리 미만의 새끼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음.

○ 지방의회가 면허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에 다음 사항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함.

- 동물에게 적절한 숙박시설, 음식, 물 및 침구 재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히 운동을 시켜야 함. 질병 확산 방지 및 통제를 위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함.

○ 지방의회는 이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음. 개를 적절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 외에도, 이 법은 모견의 번식 빈도와 시기를 제한하고 있음.

- 모견은 생후 1년 전에는 임신할 수 없고, 일생 동안 6번 이상 출산할 수 없으며, 강아지 출산 후 12개월 동안은 출산할 수 없음.
- 영업자는 이와 같은 규정 준수 여부를 기록해야 하며, 해당 구역 또는 허가된 펫숍에서만 허가된 번식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를 판매할 수 있음.

### 2.2.3.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개에 대한 마이크로칩 장착(Get your dog microchipped)<sup>57)</sup> 관련 규정을 보면, 개는 8주가 될 때까지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하고, 만약 마이크로칩 장착이 되지 않았을 경우,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때는 수의사와 같은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됨.

○ 마이크로칩은 국가 표준에 맞는 마이크로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승인되지 않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면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개를 판매하기 전에 마이크로칩 인증서, 수의사 기록, 반려동물 여권 등을 통해 마이크로칩 장착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구입할 때에도 마이크로칩 인증서 등의 증명자료를 요청해야 함(전상곤 외 2017: 123).

### 2.2.4. 반려동물 입양 관련 규제와 제도

○ 출처가 불분명한 개나 고양이 구매를 지양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이나 신문과 같은 지역 매체를 통해 광고되는 개나 고양이를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함.

- 이는 불법적으로 수입된 개와 고양이가 광견병과 같은 질병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의 역사, 품종 또는 가계도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임.

○ 반려동물로 기르는 모든 동물에 적절한 관리를 제공해야 함.<sup>58)</sup>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무제한의 벌금(unlimited fine)이나 최대 6개월 동안의 구금이 가능하며, 향후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sup>57)</sup>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get-your-dog-microchipped](http://www.gov.uk/get-your-dog-microchipped): 2019.10.01.).

<sup>58)</sup>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caring-for-pets](http://www.gov.uk/caring-for-pets): 2019.10.01.).

○ 동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면허가 필요 없으나, 다음의 경우 지역의회에서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음.

- 이국적인 야생 동물의 일부 유형, 국내 야생 잡종 동물, 승차 마구간이나 반려동물 영업자 등임.

## 2.3.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2.3.1. 가정 내 양육 및 외출 시 관련 규정

○ 이웃의 개 짖음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회에 신고 가능하며, 영국과 웨일스의 일부 공공장소는 「공공 공간 보호 명령(PSPO)」에 의해 보호됨. PSPO를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100파운드, 법정에서는 1,000파운드까지 벌금 부과 가능함.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목줄 착용, 경찰이나 담당자의 요구 시 목줄 장착, 농장이나 일부 공원 등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동반할 수 있는 마릿수 제한, 주변 청결 유지, 배변 봉투 및 배변 처리 용품 소지 등임.

### 2.3.2. 안전사고 발생 관련 규정(개 물림 사고 등)

○ 공공 및 개인 장소에서 개를 위협하고 통제 불가능하게 두는 행위는 법에 따라 제한되며,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이 부상당할 우려를 표현할 경우 법원은 무제한 벌금형 또는 최대 6개월까지 수감을 명령할 수 있음.

○ 만약 개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반려견 양육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



금형에 처할 수 있음. 만약 반려견 양육자 고의로 개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면, 견주는 ‘악성 상해’로 기소될 수 있음.

○ 개가 누군가를 죽이면, 최대 14년 징역형을 받거나 무제한 벌금형(또는 둘 다)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개가 보조견(예: 안내견)을 다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음.

○ 영국에서는 핏불테리어, 일본 토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품종의 개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금지된 개의 판매, 방치, 유기, 번식 등도 금지되어 있음.

○ 자신의 개가 금지견으로 분류되었지만, 법원이 이 개가 대중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개를 금지견 면제목록에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견종이 살아있을 때까지 유효한 면제 증명서가 제공됨.

- 이를 위해서는 해당 개에게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 착용, 탈출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함.

○ 또한, 금지견을 사육할 경우, 소유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경찰관 등의 요청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면제 증명서 제시 등이 필요하며, 주소변경이나 사망 시 금지견 면제목록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2.4. 유기동물 관련 규정

○ 「유기동물법 1960(Abandonment of Animal Act 1960)」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고,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동물복지법 2006」, 스코틀랜드는

「동물건강복지법 2006」에 편입됨.

-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반려동물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인 복지 요구(5가지 자유)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됨. 즉 「동물복지법 2006」 제9조에 의거, 동물을 적절히 돌보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고통을 줄 경우 법정에 설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소유를 금지당하거나, 최대 20,000파운드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 2.5. 동물 학대 관련 규정

- 「동물복지법」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은 다음의 기본적인 복지 요구(5가지 자유)를 누릴 법적 권리(legal right)가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복지법 2006」 제9조에 의거 반려동물의 소지를 금지당하거나, 최대 20,000파운드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환경의 필요성, 적절한 다이어트의 필요성,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보일 필요성, 필요에 따라 다른 동물과 함께 또는 별도로 분리, 통증, 고통, 부상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 등임.
- 웨일스<sup>59)</sup>의 경우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개 목줄(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목줄, 반바크 목줄, 전기 울타리와 연결된 목줄 등)이 금지됨. 웨일스의 개(혹은 고양이)에게 이러한 목줄을 사용하는 양육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동최대 20,0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됨.
  - 잉글랜드와 웨일스<sup>60)</sup>에서는 애완견 단미(斷尾) 수술은 위법임.

---

<sup>59)</sup> Animal Welfare Regulations 2010.

-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경우 영국 왕립 동물 학대 방지 협회(RSPCA)에 신고가 가능함.

## 2.6. 반려동물 사후 관리(장례)를 위한 규정

-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매장할 경우 특별한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음. 개나 고양이와 같은 집에서 기르는 소형 반려동물의 경우 뒤뜰과 같은 양육자의 땅에 매장 가능하며, 최소 지하수 보호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그러나 말과 같은 대형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할 경우 최소 지하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이를 위해 지방의회에 있는 동물보건소(animal health office)에 연락해야 함.
- 반려동물 묘지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최소 지하수 보호 요구 사항, 동물 부산물 규정 2013, 사립 애완동물 묘지 및 크레마 토리아 협회의 자발적 행동 규범 준수가 요구되며, 추가로 반려동물 묘지를 동물 및 식물 보건 당국에 등록해야 함.

---

<sup>60)</sup> Docking of Working Dogs Tails (England) Regulations 2007; Docking of Working Dogs Tails (Wales) Regulations 2007.

### 3. 독일

#### 3.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 2018년 기준 독일의 개와 고양이 사육 마릿수는 총 2,390만 마리 수준으로 이 중 고양이가 1,450만 마리, 개는 940만 마리임. 2010년대 중반 고양이와 개 사육 마릿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Statista).<sup>61)</sup>
- 2018년 기준 독일의 가구 수는 4,138만 가구로 이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고양이가 22%(약 910만 가구)이며, 개는 17%(약 770만 가구)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39%(약 1,614만 가구) 수준으로 조사됨.<sup>62)</sup>
- 독일 정부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부처는 연방식품농업부(BMEL: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이며, 세부업무는 아래와 같음.
  -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명확한 규칙과 기준 마련
  - 동물을 키우고, 돌보고, 거래하는 사람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 제시
  -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 기준 관리
- 연방식품농업부 이외에 반려동물 단체인 독일 동물복지협회는 1881년 독일의 동물복지협회 및 동물보호소를 위한 우산조직으로 설립됨. 현재 산하조직으로 167개의 지역협회와 550개가 넘는 동물보호소 및 구조센터가 있음. 독

---

<sup>61)</sup>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17014/households-owning-cats-dogs-europe-germany>).

<sup>62)</sup>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17014/households-owning-cats-dogs-europe-germany>).

일 전역에서 온 8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독일 동물복지연맹은 유럽 최대의 동물 및 자연 보호 조직임.

- 동물보호소는 동물보호협회 산하기관으로 1841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동물보호소와 입양소, 동물병원, 반려동물추모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 양로원 방문교육, 수의보조 및 동물원 관리자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전상곤 외 2017: 145).
- 동물보호소는 연간 800만 유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5,000명의 회원과 10,000명의 기부자들 및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됨. 또한, 사육 포기 동물에 대한 인수 수수료와 입양동물의 입양수수료를 징수하여 일부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 3.2. 생산/분양(판매) 관련 규제 및 제도

#### 3.2.1.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면허

- 독일은 법적으로 모든 동물을 보호하고 있음. 독일은 허가받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의 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펫숍뿐만 아니라 개인 분양이 금지되고, 교배 역시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금지함. 예외적인 경우에 교배를 하고 새끼가 태어나면 수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식별번호를 부여함(정말로 동물병원 블로그 2019).
- 따라서 독일은 대부분 티어하임과 같은 유기동물보호소나 정부가 허가를 내준 분양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있음(정말로 동물병원 블로그 2019). 반려동물을 개인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며, 키우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인

가한 동물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개의 경우 60~115유로, 고양이  
의 경우 20~85유로의 인수 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겨야 함. 이렇게 맡겨  
진 반려동물들은 새롭게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분양됨.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과 상업적으로 거래하려는 사람은 관할 기관(수의사)의 허가가 필요함. 또한, 2014년 8월부터 척추동물의 이동과 수입 시 이동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동물 수입 전 48시간 이내에 수의사가 건강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광견병 예방 접종은 일반적으로 12주령에 한해 실시되며, 유효한 백신 보호가 달성될 때까지 21일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산 개는 15주령부터 독일로 들여올 수 있음. 수입된 동물들의 이동은 TRACES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해 목적지를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통지해야 함.

### 3.2.2.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독일의 경우,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이를 통해 모든 지방정부는 매년 Hundesteuer라고 불리는 강아지세를 부과하고 있음(세계일보, 2019.08. 25.). 이 세금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일부 금액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간 26만 원 수준임(데일리벳, 2018.01.29.).
- 뮌헨시의 경우 일반견은 연간 약 100유로(13만 원), 맹견은 약 800유로(107만 원)가량의 세금이 부과됨. 만약 반려견 양육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포탈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세계일보, 2019.08. 25.).
- 베를린 일간지 <더 로컬>에 따르면 베를린의 강아지세 수입은 한 해 1,100만

유로(140억 원)로 파악됨(이코노믹리뷰, 2019.01.30.).

### 3.2.3. 반려동물 입양 관련 규제와 제도

- 독일에서는 매년 3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입양되고 있음. 독일은 대부분의 입양을 티어하임과 같은 유기동물보호소나 정부가 허가를 내준 분양소에서 입양을 할 수 있음(정말로 동물병원 블로그 2019).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되는 모든 동물은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어 있고, 최신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반려동물 여권도 발급됨.
- 입양을 위한 서류작성을 위해 연락처, 신분증, 독일 거주 증명서가 필요하며, 입양비를 지불해야 함. 강아지의 경우 250유로, 고양이의 경우 60~100유로, 토끼의 경우 20~30유로, 작은 동물의 경우 2~25유로의 입양비가 필요하며, 이 비용은 간호, 예방접종, 마이크로 칩핑 및 중성화 수술에 사용됨.
- 독일의 반려동물 입양 절차에는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함.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 의사가 있다면 입양이 불가능하며, 입양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이 일정 기간을 두고 총 3번을 방문해야 함(정말로 동물병원 블로그 2019).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기본 상식과 양육법을 배우고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입양이 가능함.
-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대비해 연간 약 3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해야 함.

### 3.3.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르는 반려견 지식증명(Sachkundenachweis)이 있음.
- 독일은 반려지식증명시험에 대한 법도 주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주에서 위험견종을 기르려면 반려지식증명시험을 보고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함. 함부르크와 베를린처럼 산책줄 착용이 법적인 의무로 명시된 지역에서는 반려지식증명시험을 통해 산책줄 착용 의무를 벗어날 수 있음(정말로 동물병원 블로그 2019).
- 반려지식증명시험은 주에 따라 ‘반려견면허(Hundeführerschein)시험’이라고 불리며, 독일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반려견 면허시험은 이론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론시험은 반려견을 구매, 입양하기 전에 통과해야 함.
  - 이론시험은 미리 반려견과 함께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임. 실기시험은 반려견 입양, 구입 후 일 년 이내에 통과해야 함(정말로 동물병원 블로그 2019).
- 독일 니더작센주에서는 특정 견종을 위험견종으로 규정하는 것을 피하고 있음.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는 모든 견종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견종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임. 이에 니더작센주에서는 2013년부터 개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반려견 면허시험을 보도록 법률을 제정함(정말로 동물병원 블로그 2019).
- 베를린시는 외출 시 공공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보행자 거리·공공건물·엘리베이터 등에서는 1m로 제한함(엔젤팻 블로그 2019).



- 독일 베를린에서 반려동물과 지하철을 함께 이용할 때, 운송 용기에 담은 소형 반려동물은 무료지만 대형견은 1.7유로(약 2,300원)의 운임료를 징수함(조선일보, 2017.10.27.).

### 3.4. 유기 및 동물 학대 관련 규정

- 독일에서는 유기동물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음. 동물 학대 행위는 티어하임에 신고가 가능한데, 동물 유기보다는 동물 학대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음.
  - 독일 반려견과 관련한 민원 사유 중 ‘옆집 강아지가 이틀 이상 산책하지 않아서’, ‘차에 혼자 강아지가 있어서’, ‘산책 중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지 못하게 해서’ 등의 신고가 많음(강세바 블로그 2019).
- 반려동물 유실과 관련하여서는 FINDEFIX라는 서비스가 있음. FINDEFIX는 독일 동물복지협회의 무료서비스로 1981년부터 사람들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음.
- FINDEFIX는 비영리단체로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실종된 동물을 찾아주고 있음. 온라인 등록은 쉽고 빠르며 무료임. 수색은 740개 이상의 동물보호협회 및 550개 동물보호소(독일 동물복지협회)와 협력하여 전문적으로 진행됨.

### 3.5. 반려동물 사후 관리(장례)를 위한 규정

- 최근에는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 반려동물 공동묘지(Tierfriedhöfe)를 쉽게 찾을 수 있음.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은 반려동물을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음. 인간과는 달리 반려동물이 화장된 경우, 재를 바다나 숲에 뿌리는 것을 포함하여 재를 스스로 보관하거나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음. 마당이나 정원에 반려동물을 묻을 수도 있음.
-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매장에 대한 몇 가지 법적 제한이 있으며, 대부분 인근의 땅과 무덤의 깊이에 관한 사항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반려동물 화장도 증가하는 추세임.
- 대부분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모든 장례식 외에 반려동물의 재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매장지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화장 비용(매장 또는 향아리 포함)은 약 60~410유로임.

## 4. 호주

### 4.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 호주의 반려동물은 3,300만 마리를 기록, 호주 전체 인구보다 많음.<sup>63)</sup> 가구의 62%가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추정되며, 애완견이 480만 마리, 고양이가

---

<sup>63)</sup> 파이낸셜 리뷰(2019.02.18.)의 내용을 재인용함.

390만 마리로 추정됨. 지역별 반려동물 가구 비중은 노던준주(Northern Territory)가 82%로 가장 높고,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주(ACT) 75%,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가 68% 임(Jolly 2017).

○ AMA(2016)에 따르면 호주의 가구당 평균 반려동물 마릿수는 개가 1.3마리, 고양이가 1.4마리이며, 호주의 전체 가구 중 38.5%가 개를 키우고 29.2%가 고양이, 기타 반려동물로는 새, 물고기 등을 키우고 있음.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반려동물 숫자임.

○ 호주의 동물보호 및 복지는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담당함. 그러나 호주 정부는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각 주 및 준주, 지방 정부가 동물복지 법률을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 호주 정부는 전체적인 동물복지 전략의 개발과 실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 동물복지 전략에 따라 반려동물 실무그룹이 구성되었으며, 이 실무그룹의 구성 단체는 호주 반려동물 협의회, 호주 반려동물산업협회, 호주 수의협회, RSPCA 및 주 정부 대표가 포함되어 있음. 각 주(State) 및 준주(Territory) 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법률(Legislation), 시행령(Code of practice), 지침(Guideline), 주관부서는 <부표 4>에 정리함.

## 4.2. 생산/분양(판매) 관련 규제 및 제도

### 4.2.1.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반려동물은 6개월령부터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첫 위반 시

50점, 이후 60점의 벌점<sup>64)</sup>이 부과됨. 위험하거나 사육이 제한된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첫 위반 시 벌점 60점이, 이후에는 70점이 부과됨.

○ 등록대상 반려동물이 미등록된 경우 해당 평의회는 14일 이내 등록을 촉구하는 통지를 보낼 수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함. 불응 시 위험 또는 위협적이거나 제한된 개인 경우 첫 위반 시 벌점 60점 이후 70점, 이외에는 첫 위반 시 50점, 이후 60점이 부과됨.

○ 반려동물 소유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평의회에 통보해야 함.

- 동물의 등록 정보 또는 식별 정보에 변경이 있으면(변경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동물(개)이 위험한 개 또는 위협적인 개임을 법원에 서 신고하거나 취소한 경우(신고하거나 철회한 후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동물 사망(동물 사망 후 28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동물이 72시간 이상 실종된 경우(동물이 실종된 후 96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함), 실종동물을 찾은 경우(동물을 발견한 후 7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위반 시 위험 또는 위협적이거나 제한된 개는 벌점 8점, 이외에는 50점
- 반려동물 등록 사항에 변화가 있을 시 평의회는 새로운 동물등록증을 무료로 제공함.

---

<sup>64)</sup> 호주 법률에서 벌점(Penalty unit: PU)은 법령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을 계산하는 데 사용됨. 벌금(Fine)은 벌점 1단위당 가치(value)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된 벌점을 곱하여 계산함. 벌점 단위 산정 및 벌점 1단위당 금전적 가치는 각 주별로 다름.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는 2018년 7월 1일부터 벌점 1단위당 161.19달러로 고정되어 있고,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10달러, 퀸즐랜드는 130.55달러, 테즈메이니아주는 163달러 등임(Victorian Department of Justice and Regulation 2018; NSW Communities & Justice 2018; Queensland Government 2018; Tasmania Department of Justice 2016).

- 호주의 주 및 준주의 반려동물 등록(Registration), 마이크로칩, 기록 보관 및 보증(Record keeping and Guarantee), 번식업자 또는 판매업자 면허(licensing breeder & pet shop), 중성화(De-sexing) 관련 제도는 <부표 5>에 정리함.

#### 4.2.2. 반려동물 입양 관련 규제와 제도

- 호주의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등록된 번식업(지역 대피소 및 구조기관 포함), 번식장(집약적 번식장), 소규모 브리더, 온라인 구매 등이 있음.
  - 매년 수십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유기됨. 이는 번식장과 소규모 브리더에 의한 과도한 번식과 함께 소비자의 반려동물의 충동구매 및 포기로 인한 결과임. 그리고 매년 약 25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죽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 대피소 또는 구조기관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권장됨. 이러한 조직에는 RSPCA, AWL, Sydney Dogs and Cats Home, Cat Protection Society, Doggie Rescue 및 품종별 그룹이 포함됨.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번식장과 소규모 브리더의 성향을 막을 수 있음.
- 반려동물 판매업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우선 12주령부터 판매 전 인식표(ID)가 필요하며, 판매 시 12주령 미만도 규정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동물 판매는 금지됨. 규정 위반 시 양육자와 판매자에게 벌점 8~50점까지 부과될 수 있음.

### 4.3.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4.3.1. 가정 내 양육 중 관련 규정(층간 소음 등)

○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양육자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명령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양육자는 7일 이내에 해당 명령서에 해명 소견을 낼 수 있고, 7일 이후부터는 이를 따라야 함(고양이도 동일함).

- 짖는 소리나 다른 방법으로 습관적으로 소음을 발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지속해서 불편을 초래할 경우, 공공장소 외의 사유지에서 지속해서 배설하는 경우
- 사람, 동물(해충을 제외하고 동물과 관련하여, 가축을 기르고, 돌보고, 일하거나 보호하는 과정이 아닌) 또는 차량을 반복적으로 쫓거나 달리는 행위, 사람이나 해충이 아닌 동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 사유재산에 지속해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

#### 4.3.2. 외출 시 관련 규정(목줄, 배설물 처리 등)

○ 개는 목줄과 인식표(개의 이름과 주인의 인적 사항 기재)를 착용해야 하며, 어길 시 벌금 8점, 위험하거나 제한건의 경우 50점이 부과됨. 소유주는 개가 사유지에서 달아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위반 시 벌점 8~50점).

○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코드, 체인, 목줄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어길 시 벌점 10~100점이 부과됨. 공공장소에 주인과 함께 있는 반려견은 책임감독관 외에는 붙잡을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려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위반 시 벌점 10~100점이 부과됨.

- 어린이 놀이터에서 10m 이내, 음식을 장만하거나 먹는 곳에서 10m 이내

-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나 이와 비슷한 장소, 공공기관이나 공공 레크리에이션(해변 포함) 공간
-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교육기관, 쇼핑몰이나 쇼핑몰 주차장, 개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 피크닉 장소에서는 양육자가 반려견을 통제하고 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이상 머무를 수 있음. 줄을 풀어놓을 수 있게 허가된 공공장소라면 개에게 목줄이나 코드, 체인 등을 채울 필요가 없고 테이블과 의자를 사용할 수 있음(위험 또는 위협적이거나 제한건은 제외). 반려견은 무릎 위에 앉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됨. 반려견을 동반한 식품 사업자가 관계기관 허락 없이 테이블과 의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4.3.3. 안전사고 발생 관련 규정(개 물림 사고 등)

- 개가 주인이 없을 때 사람이나 동물에게 달려들거나, 쫓아가거나,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벌점 100~400점이 부과되며, 양육자가 자리에 없거나 부주의해서 다쳤을 경우 양육자 또는 보호자에게 벌점 200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동시 부과 가능).
- 사육 제한건이 사고를 냈을 경우 양육자 또는 보호자에게 400점 벌점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됨(동시 부과 가능).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개가 양육자의 부주의나 부재 시 사람을 공격하거나 문다면 상처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벌점 500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동시 부과 가능).
  - 다만, 개가 위협, 괴롭힘, 학대를 당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개가 있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양육자나 사유재산을 지키려고 공격했을

시, 사냥 또는 공공의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벌어진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 서비스견이나 보조견, 경찰견 또한 해당하지 않음.

#### 4.4. 유기동물 관련 규정

- 호주 수도주(ACT)<sup>65)</sup>에서는 동물 양육자가 동물을 유기하고, 관리인이 없다는 것을 알거나, 다른 사람이 그 동물을 양육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방치할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최대 벌점 100점 또는 1년의 징역(동시 부과 가능)에 처함.
- 뉴사우스웨일스(NSW)주<sup>66)</sup>에서는 동물 유기 시 법인의 경우 벌점 250점, 개인의 경우 벌점 50점 또는 6개월 징역(동시 부과 가능)에 처함.

#### 4.5. 동물 학대 관련 규정 및 사후처리 방법

- 뉴사우스웨일스(NSW)주<sup>67)</sup>에서는 동물에게 부당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서 동물에게 상해, 고통, 스트레스 또는 사망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동물을 학대, 겁박, 괴롭힐 경우 학대로 규정함. 동물 학대 행위는 범죄로서 최대 벌점 200점 또는 2년의 징역(동시 부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음.

---

65) 호주 수도주(ACT) 「동물복지법 1992」 제 6G조.

66)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동물학대방지법 1979」 제11조.

67)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동물학대방지법 1979」 제7조 학대(Cruelty).



- 동물 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게 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가하면, 가중 처벌을 받음. 벌점 300점 또는 3년의 징역(동시 부과 가능)에 처할 수 있음.
- 사망한 반려동물의 평균 매장 및 화장 비용은 약 200달러(호주)이며, 사망한 반려견 중 약 5%가 묘지 매장 또는 화장되는 것으로 추정됨.

## 5. 일본

### 5.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애완동물사료협회’<sup>68)</sup>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있음.<sup>69)</sup> 2018년 전국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육실태조사 결과 2018년 10월 기준 일본의 반려견 사육 마릿수는 약 890만 3,000마리이며, 고양이 사육 마릿수는 약 964만 9,000마리로 추정됨.
- 반려견 사육 마릿수 및 사육 세대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2014년 대비 2018년 반려견 사육 마릿수는 8.3% 감소하였으며, 사육 세대수는 9.4% 감소하였음. 일본 전체 세대수에서 반려견을 사육하고 있는 세대수의 비중은 2018년 12.6%로 나타났음. 반려견의

<sup>68)</sup> 일본 애완동물 사료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2018년 기준 85개사(정규회원 54개사, 찬조회원 31개사)로 조직되어 있음.

<sup>69)</sup> 「전국 개·고양이 사육 실태 조사」는 (사)애완동물사료협회에서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조사 방법은 인터넷 조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20~79세의 남녀임. 2018년 규모집계조사의 경우 5만 개 표본데이터를 각 연도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를 이용한 웨이트드 샘플링(weighted sampling) 집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육자조사는 1,980개의 표본데이터를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음.

세대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1.23~1.24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부표 6〉 참고).

- 한편 반려묘 사육 마릿수 및 사육세대수는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2014년 대비 2018년 반려묘 사육 마릿수는 1.7% 증가하였으며, 사육 세대수는 3.3% 증가하였음. 일본 전체 세대수에서 반려묘를 사육하고 있는 세대수의 비중은 9.6~9.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대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약 1.7마리로 나타남(〈부표 6〉 참고).
-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제도는 크게 3개 부처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은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견병의 관리를 위해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반려견의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 수입 신고 제도를 담당하고 있음(지인배 외 2017: 118).
- 환경성은 사람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동물의 반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법은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애완동물식품안전법)」로,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이 함께 담당하고 있음.
- 동물의 수출입을 위한 검역은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제도의 직접적인 시행을 담당하고 있음(전상곤 외 2017: 109).
- 후생노동성은 「광견병 예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건강국임(전상곤 외 2017: 107). 후생노동성은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반려견의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2에 근거하여 동물 수입 신고 제도를 담당함.

## 5.2. 생산/분양(판매) 관련 규제 및 제도

### 5.2.1.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면허

- 동물의 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동물애호관리법」 제7조 제5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됨.
  - 동물의 소유자는 양육 중인 동물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하여 적정한 사육이 곤란하지 않도록 번식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함.
- 동물 판매업자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이며, 업체 등록 시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반려견·반려묘의 번식 시행 여부에 대한 체크 항목만 있음.

### 5.2.2.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일본의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제는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에서 시행하고 있음.
- 「광견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취득한 날(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입양한 경우, 생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려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촌장(특별구에 있어서는 구청장)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즉 반려견이 태어났을 때는 1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지인배 외 2017: 119).

- 「광견병 예방법」 제4조의 2에 따라 시정촌장은 반려견 등록 신청이 있을 때 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반려견 감찰을 교부해야 함. 같은 법 제4조의 3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교부받은 이름표를 반려견에 착용시켜야 함.
- 등록 후 주소와 주인이 바뀌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등은 각각 신고가 필요함.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반려견 등록 대장에 기록되지 않으며, 이전 주소로 통지·연락이 보내지게 됨(지인배 외 2017: 119).
- 「광견병 예방법」 제5조에 따라 생후 91일 이상의 반려견은 매년 1회의 광견병 예방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음. 반려견 소유자는 매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주사제표를 받아야 함. 교부된 광견병 예방 주사제표는 반드시 강아지의 목걸이 등에 장착시켜야 함(지인배 외 2017: 119).

### 5.2.3. 반려동물 입양 관련 규제와 제도

- 제1종 동물취급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판매, 보관, 대여, 전시, 경매알선, 위탁사육 등의 사업임. 제1종 동물취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을 시작할 때 사업소·업종별로 도도부현 지사 등에 등록해야 함. 제1종 동물취급업의 내용과 해당 업자의 예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음.
  - 규제대상은 실험동물과·산업동물을 제외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판매, 보관, 훈련, 전시, 대여, 경매중개업, 양수(讓受)사육업 등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대리 판매나 반려동물 도우미, 출장 훈련 등과 같이 사육시설이 없는 경우도 규제의 대상임(지인배 외 2017: 127).

**표 5-2** 일본의 제1종 동물취급업의 사업 내용과 해당업자

업종	내용	해당 업자의 예
판매	동물의 소매 및 도매 또는 그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번식 및 수출입 행위 (그의 중개 또는 대리 포함)	- 소매업자·도매업자, 유통업자, 판매 목적의 번식 또는 수입업자 - 판매를 위한 동물의 사육업자 - 사육시설이 없는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보관	보관을 목적으로 고객의 동물을 맡는 업무	- 반려동물 호텔 업자, 반려동물 미용 업자 (동물을 맡는 경우) - 반려동물 도우미
대여	애완, 촬영, 번식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업무	- 반려동물 대여업자 - 영화 등의 배우·촬영모델·번식용 등 동물 파견 업자
훈련	고객 동물의 훈련 담당 업무	- 동물의 훈련·조교 업자, 출장 훈련업자
전시	동물을 보여주는 업무(동물과 만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 동물원, 수족관, 이동 동물원, 동물 서커스, 동물 접촉 테마파크 - 승마 시설, 동물매개치료업자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매 알선	동물거래를 원하는 사람에게 알선, 장소를 마련해 경매진행	- 동물경매시장의 운영업자(장소를 마련할 경우)
위탁 사육	유상으로 동물을 양도받아 사육하는 업무	- 고령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돌보는 “노견·노묘 Home”의 사업자

자료: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www.env.go.jp: 2019. 10. 01.)와 지인배 외(2017: 127)를 참고하여 작성함.

○ 제1종 동물 취급업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지키고, 주위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함.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도도부현 등에 따라 지역 사정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기준을 추가한 경우도 있음(지인배 외 2017: 128).

**표 5-3** 일본의 제1종 동물취급업자 준수 사항

구분	세부내용
1. 사육시설 등의 구조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개별 동물의 적절한 크기와 공간의 확보 - 급수·급이 시설과 놀이기구 등 필요한 설비의 배치
2. 사육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일 1회 이상의 청소를 시행, 동물의 도주를 방지
3. 동물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유령(幼齡, 어린 나이) 동물 판매 등의 제한 - 동물 상태의 사전 확인, 구매자에 대한 현물 확인 및 대면 설명 - 적절한 사육 및 보관, 광고의 표시규제, 관련 법령에 위반한 거래의 제한
4. 일반 사항	- 표시나 명찰(식별 표)의 개시, 동물취급책임자의 배치
5. 반려견·반려묘 등 판매업에 대한 가산 기준	- 반려견·반려묘 등 건강안정계획 수립 및 준수 - 수의사와의 연계 확보, 판매가 곤란한 반려묘에 대한 평생사양 확보 - 49일령 이하의 판매 제한, 장부의 작성·보존 및 소유 마릿수의 보고

주: 동물취급책임자는 상근 직원 중 업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임.

자료: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www.env.go.jp: 2019. 10. 01.)와 지인배 외(2017: 128)를 참고하여 작성함.

### 5.3.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동물의 주인은 “생명이 있는” 동물의 양육자로서 동물을 보호하며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음. 동물의 종류와 습성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해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위에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전상곤 외 2017: 110).
- 또한, 동물의 주인은 최대한 그 동물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적절하게 사육(평생 사양), 무분별한 번식 방지를 위해 불임 거세 수술 등(번식 제한), 동물에서 동물로 또는 동물이 사람에게 옮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예방에 주의(감염병 예방), 동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한 마이크로칩이나 미아방지 명찰 등의 표식을 달아야 함(소유 명시).<sup>70)</sup>
-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 동물을 사육함으로써 소음과 악취, 동물 털의 비산(飛散), 위생 해충의 발생 등으로 주변 생활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경우와 동물이 쇠약하는 등의 학대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주인 등에게 개선에 대한 권고나 명령을 시행할 수 있음(전상곤 외 2017: 111).
-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로 국가에서 정한 위험 동물(특정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함. 양육자는 마이크로칩 등으로 동물의 개체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물이 도주할 수 없는 구조의 시설을 마련해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전상곤 외 2017: 112).

---

<sup>70)</sup> 전상곤 외(2017: 110).

#### 5.4. 유기 동물 관련 규정

- 도도부현 등에서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인수함과 동시에,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부상 동물 등을 수용함. 2017년 반려견·반려묘의 총 수용 마릿수는 10만 648마리로 2015년 대비 26.4% 감소하였음. 총 수용 마릿수의 감소로 2017년 인도된 마릿수는 1만 2,602마리로 2015년 대비 7.1% 감소하였으나 분양 마릿수는 4만 4,320마리로 13.3% 증가하였음.
- 2017년 반려견·반려묘의 안락사 마릿수는 수용 마릿수의 감소와 지자체의 분양사업을 통한 분양 마릿수의 증가로 2015년 8만 2,902마리에서 2017년 4만 3,216마리로 47.9% 대폭 감소하였음(<부표 7> 참고).
- 2017년에 수용된 반려견은 총 3만 8,511마리(2015년 대비 17.4% 감소)임. 이 중에서 소유자로부터 인수된 반려견은 4,115마리(10.7%)이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견은 3만 4,396마리(89.3%)임. 2017년 반려견의 처분 마릿수는 총 3만 8,317마리로 이 중에서 지자체의 분양사업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를 찾은 반려견은 1만 7,669마리(2015년 대비 7.6% 증가)이며, 안락사한 반려견은 8,362마리(2015년 대비 47.1% 감소)임.
- 반려견과 반려묘의 안락사 마릿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안락사 마릿수 감소 배경에는 2012년 「동물애호관리법」 개정에서 “평생사양의 책임”이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귀여움이 없어져서” 혹은 “이사” 등을 이유로 하는 인수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사업과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직접 인수하는 반려동물의 마릿수가 증가한 것 등이 있음.

## 5.5. 동물 학대 관련 규정

- 현재 시행 중인 「동물애호관리법」의 기본원칙(제2조)은 “동물은 살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동물의 습성을 잘 알고 적절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살상, 학대, 유기는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동물취급업이나 특정동물의 사양 등에 대해서도 처벌 사항이 마련되어 있음.
-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일본 환경성 2019), 학대한 경우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됨. 또한,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 역시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표 5-4** 일본의 반려동물 학대 관련 처벌 사항

내용	처벌
반려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을 함부로 학대한 자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	100만 엔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동물을 사양·보관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에 의한 특정동물의 무허가 사양	5천만 엔 이하의 벌금
등록을 하지 않고 제1종 동물취급업을 영위한 자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고 제2종 동물취급업을 시행한 자	30만 엔 이하의 벌금
주변의 생활환경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50만 엔 이하의 벌금

자료: 일본 환경성(2019). 「알고 있습니까? 동물애호관리법」.

- 2019년 6월 개정된 「동물애호관리법」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됨.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기존의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만 엔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만 엔으로 강화되었으며, 학대·유기의 경우 벌금 100만 엔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만 엔으로 강화됨.

## 5.6. 반려동물 사후 관리(장례)를 위한 규정

- 과거에는 사람의 공원묘지의 한구석에 반려동물을 매장했었지만, 수요 증가로 반려동물 전용 공원묘지도 등장하였음. 현재는 주인과 같은 무덤에 매장하는(납골 시설은 구분되어 있음) 공원묘지도 등장하고 있음(지인배 외 2017: 116).
- 동물 사체를 사유지인 정원에 매장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음. 다만, 동물 사체를 매장할 때 땅속 깊게 묻어 인근에 부패로 인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지자체에 따라 사체 처리방식이 다르며, 도둑고양이의 사체 처리는 무료로 하는 지자체도 있음. 사체처리를 위한 지정장소에 반입·회수하는 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료에서부터 3,000엔 정도임.
- 요코하마시와 같이 반려동물 전용 화장로에서 개별 화장을 하고 유골도 돌려주는 지자체도 있음. 2~3kg 정도의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2만 엔 정도로, 반려동물 공원묘지의 화장보다 비싼 경우도 있음. 지자체가 보유한 반려동물 화장로에서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화장하는 경우가 많음(지인배 외 2017: 116-117).<sup>71)</sup>

---

<sup>71)</sup> 〈부표 8〉 참고.

## 6. 국가별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6.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관리체계

- 미국, 독일, 한국은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세를 보이거나, 영국은 감소세를 보임. 호주는 인구 대비 많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려견보다는 반려묘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5-5** 국가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국가	반려견 사육 현황	반려묘 사육 현황	비고
미국	2017년 8,970만 마리	2017년 9,520만 마리	2000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
영국	2018년 5,500만 마리 추정		2013년 이후 감소세
독일	2018년 940만 마리	2018년 1,450만 마리	2010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
호주	2017년 480만 마리	2017년 390만 마리	인구 대비 많은 반려동물 사육
일본	2018년 890만 마리	2018년 965만 마리	2014년 이후 반려견은 감소세, 반려묘는 증가세
한국	2018년 5,158만 마리	2018년 1,124만 마리	2010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

자료: 저자 작성.

-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부가 반려동물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환경성이 동물보호에 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음.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반려동물 관리 업무는 주요 관리부서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하고 있음.

**표 5-6** 국가별 반려동물 주요 담당부서

국가	주요 관리부서	국가	주요 관리부서
미국	농무부	호주	농업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일본	환경성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저자 작성.

## 6.2. 생산/분양 관련 규제 및 제도

- 반려동물 등록제는 주요국에서 모두 시행 중이며, 무분별한 반려동물 증가 및 유기동물 증가 방지를 위해 동물분양업을 규제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이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며, 독일은 허가증을 발급함. 일본과 우리나라는 동물판매업은 등록을 해야 함.

**표 5-7** 국가별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등록 관련 규제

국가	입양 관련 제도	분양 규제	등록제 시행
미국	일부 주에서 입양 사전교육 시행	상업용 분양 면허 요구	등록제 시행 중
영국	-	면허 필수	등록제 시행 중
독일	반려견 면허 필요	허가증 필수	등록제 시행 중
호주	입양 전 권고사항 배포	면허 필수	등록제 시행 중
일본	-	등록 필수	등록제 시행 중
한국	-	등록 필수(판매업)	등록제 시행 중

자료: 저자 작성.

## 6.3. 반려동물 양육과정에서의 준수사항

- 반려견 사육 중 소음 발생 시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하여 소유주의 사고 방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표 5-8** 국가별 반려동물 양육 시 준수사항

국가	양육 및 외출 시 관련 규정	안전사고(개 물림 사고)
미국	소음 발생, 외출 시 목줄 필수 착용 및 위반 시 벌금	사고 발생 시 견주가 손해배상
영국	소음 발생, 외출 시 목줄 필수 착용 및 위반 시 벌금	부상 시 5년 이하, 사망 시 14년 이하 징역형
독일	목줄 길이 제한	사고 발생 시 견주 책임
호주	소음 발생, 외출 시 목줄 필수 착용 및 위반 시 벌금	상해 시 500점 벌점 또는 5년 이하 징역(동시부과 가능)
일본	외출 시 목줄 착용 권장	사고 발생 시 견주 책임
한국	외출 시 인식표, 목줄 착용 및 위반 시 벌금	상해 시 500만원 이하, 사망 시 2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

자료: 저자 작성.

## 6.4. 유기동물 관련 규정

- 주요국에서는 동물의 유기를 금지하고 있고,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재입양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 및 일본에서는 안락사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독일은 적극적인 유기동물 입양정책을 펴고 있음.

**표 5-9** 국가별 유기동물 관련 내용

국가	주요 내용	시사점
미국	주 정부 및 사립 동물 보호소 운영 중	유기동물 입양 및 주인이 되찾는 비율 증가로 안락사 비중 감소
영국	반려동물 유기 금지	유기 시 최대 2만 파운드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독일	유기동물 발생이 드물어 통계 집계 없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반려동물 입양하는 비율 높음
호주	반려동물 유기 금지	유기 시 최대 벌점 250점 부과 또는 6개월 징역형
일본	도도부현에서 동물보호소 운영	인수요청 거부 및 양도사업 등으로 안락사 지속 감소
한국	반려동물 유기금지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료: 저자 작성.

## 6.5. 동물 학대 관련 규정

- 외국은 반려동물 학대 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함. 특히 미국에서는 학대자가 청소년 또는 애니멀 호더인 경우 심리치료를 명령하고 있어 반복적인 학대 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표 5-10** 국가별 동물 학대 관련 규정

국가	주요 내용	시사점
미국	학대 시 소유권 상실 및 소유 제한조치	학대자가 애니멀 호더 또는 청소년인 경우 심리치료 강제명령
영국	학대 시 소유권 상실 및 20,000파운드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전기충격 목줄, 단미 수술도 학대에 포함
독일	학대 의심 시 티어하임 신고	산책 미실시도 학대에 해당할 만큼 동물 복지 인식이 높은 수준임
호주	학대 행위 시 범죄로 규정	벌점 300점 또는 3년의 징역(동시부과 가능)
일본	반려동물 학대는 범죄행위로 간주	학대한 경우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
한국	동물학대행위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료: 저자 작성.

## 6.6. 반려동물 사후 관리규정

- 반려동물 사후 시 일반적으로 매장 및 화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일정 크기 이하의 소형견 또는 고양이는 소유주 토지에 매장이 가능함.

**표 5-11** 국가별 반려동물 사후 관리 규정

국가	주요 내용	시사점
미국	매장 및 화장 가능	매장 시 2,000~3,000달러, 화장 시 50~100달러 필요
영국	소유주 토지 매장 가능	반려동물 묘지 운영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등록 필요
독일	매장 및 화장 가능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 화장 비용은 60~410유로임.
호주	매장 및 화장 가능	평균 매장 및 화장 비용은 약 200달러
일본	매장 및 화장 가능	화장 시 무료~3,000엔. 개별 화장 시 2만 엔
한국	매장, 화장, 생활쓰레기 봉투 처리	반려동물 장묘업 운영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등록 필요

자료: 저자 작성.

## 6.7. 시사점

-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의 반려동물 관리 정책은 무분별한 반려동물 증가 및 그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방지를 강조하고 있음. 이들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의 상업적 생산의 경우 관련 면허를 필수로 요구하여 무허가 번식업체의 난립을 막고 있음.
- 동시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여 광견병 퇴치와 함께 양도 및 분실 여부, 예방접종 유무 등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중성화를 유도하여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이 권장(미국, 일본)되거나 의무(독일)이며, 분양 전 사전교육(미국 뉴욕주, 독일)을

통해 충동 입양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보호소 내 안락사 비중이 점차 감소(미국, 일본)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음.

- 독일과 일본<sup>72)</sup>에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동물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하고 있음. 반려동물 인수제는 소유자의 사육 포기 방지와 입양을 통한 반려동물 보호처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동물보호소 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도적·합법적 유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소의 여건 고려와 사회 전반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함.
- 반려견 사육에 소음피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 소음 발생 시 양육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개 물림 사고의 경우 해외 국가 모두 양육자에게 벌금과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음. 이외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양육자에 대한 자격증명(독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영국)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동물 학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동물 소유 금지, 학대자가 청소년 또는 애니멀 호더인 경우 심리치료를 명령하고 있어 반복적인 학대 행위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동물 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주요 선진국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와 함께 기존 학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필요가 있음.

---

<sup>72)</sup> 부적당한 이유일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음(예: 동물판매업체가 보유한 반려동물, 반복적인 인수 요구, 노령·질병에 따른 요구, 번식 제한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 제6장

#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6

##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1. 반려동물 정책의 기본 방향

- 동물을 좋아하고 가족이 원해서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취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동물 학대, 동물의 유기·유실, 이웃 간 갈등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음.
-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관련 법(Legislation) 개선, 지속적인 교육(Education), 반려동물의 중성화(Sterilization) 정책이 유

기동물 숫자를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sup>73)</sup>는 미국 수의사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유기동물 숫자가 감소한 것은 미국 전역에서 정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교육·중성화 운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동물복지 법률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중성화 수술을 통해 원치 않는 동물의 출생을 제한하는 것”임.

○ 우리나라도 제4장에서 제시된 반려동물 생애주기별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규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도 활성화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sup>74)</sup>을 비전으로, 동물의 유기·유실 감소, 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동물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과 외국의 반려동물 관리 정책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 입양 단계: 동물판매 등 영업관리 강화, 반려동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지인 분양에 대한 관리 강화, 중성화 수술 활성화
- 양육 단계: 동물등록제도 개선, 반려동물 양육자 등 교육 강화 및 지원, 갈등 해소를 위한 법 및 제도 보완, 유기·유실 동물 관리 강화, 동물 학대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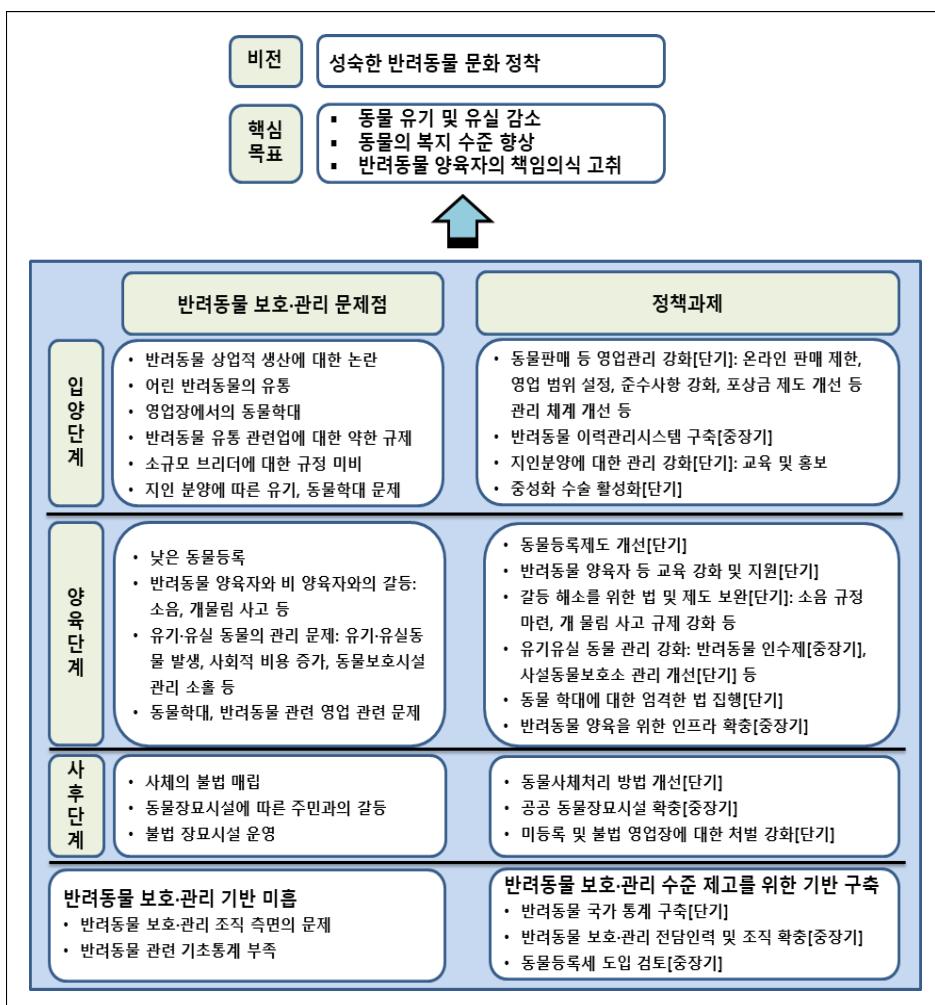
---

<sup>73)</sup> 한국일보(2019.10.05.).

<sup>74)</sup> 지인배 외(2017)에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목표를 비전으로 제시함.

- 사후 단계: 동물사체처리 방법 개선, 공공 동물장묘시설 확충, 미등록 및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반려동물 국가 통계 구축, 반려동물 전담인력 및 조직 확충, 동물등록제 도입 검토

**그림 6-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 저자 작성.

## 2.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 2.1. 입양 단계

#### 2.1.1. 동물판매 등 영업관리 강화<sup>75)</sup>

○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은 2018년 기준 각각 1,186개소, 4,056개소임. 이들 업종은 허가과 등록을 받고 영업 중이며 이 외에도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개인 브리더에 의해 생산 및 판매되는 반려동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입양되는 반려동물의 3.8(개)~7.3%(고양이)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거래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는 무허가, 무등록 업체의 불법 유통 경로로 이용되기도 함.

○ 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동물 유기, 동물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장의 경우 동물보호 여건이 취약할 수 있음.

- 따라서 동물 영업과 동물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허가 및 등록 영업자가 아닌 일반인의 온라인을 통한 판매 행위 제한

○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와 홍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반인이 반려동물을 무료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도 필요함.

---

<sup>75)</sup>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TF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미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거래할 경우 분양 면허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의 웨일스에서는 사육업자는 아니더라도 12주 이하의 강아지를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함. 독일의 경우, 정부가 허가한 유기동물보호소나 분양소 이외에서는 반려동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개인 간 동물 거래를 할 수 없음.

#### 나) 동물판매 영업 범위 설정

○ 동물을 판매하는 업종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에 대한 영업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상으로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 등록 및 허가 대상이 되는 동물 관련 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동물 판매금액과 번식 및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 마릿수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동물 판매금액이 연간 15만 원 이상인 경우<sup>76)</sup>나 연간 5마리 이상의 새끼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물판매 관련 영업자로 규정하고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게 함.
- 영국은 연간 5마리 새끼 생산자에게 면허를 받게 하고 있으며, 미국은 5마리 이상의 번식견 및 번식묘를 기르는 사람에게 분양 면허를 받도록 함.

○ 판매금액이나 마릿수 기준으로 영업 범위를 설정하더라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혈통 등록된 동물 등을 생산하여 1~2마리 판매하는 소규모 브리더는 현행법상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sup>76)</sup>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TF에서 논의 중임.

- 1~2마리를 생산·판매하는 소규모 브리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하는 것에 대해 허용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다) 동물판매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 동물 유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판매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물판매 관련 영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개체식별번호를 발급하게 하여 확인 가능한 개체만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호주에서는 반려동물 판매 전 12주령부터 인식표가 있어야 하며, 12주령 미만인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할 수 없음.
- 또한, 판매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반려동물 입양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한 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의 교환, 환급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라) 동물판매 영업자의 관리체계 개선

○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등 불법 영업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허가 또는 등록 업체들도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 환경을 조성을 위해 무허가 및 무등록 업체를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허가 및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허가 또는 등록하도록 하거나 폐업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허가 및 무등록 업체

가 동물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동물판매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 현행법상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반려동물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전에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는 동물생산업자가 폐업할 때 처리 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 후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동물보호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동물 관련 영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포상금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할 때 지급 가능함.
-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자가 동물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광고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마) 동물생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인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 및 관리 인력 확보(「시행규칙」 별표 9)’를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강화함.
-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인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10)”는 기준을 ‘10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임.

○ 규제가 강화되면 동물 생산업장의 동물 보호 및 복지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피규제 대상인 동물생산업체는 단기에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인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사자당 관리 마릿수를 50마리로 제한할 경우 50마리를 초과하는 생산업체는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다면 관리 마릿수를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기에 정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됨.
- 휴지기 연장에 대한 규제는 출산 마릿수 감소 및 판매 마릿수 감소로 동물 생산업체의 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전체적인 동물 판매 마릿수가 감소하면 동물의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판매 마릿수 감소를 상쇄할만한 수준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기존의 출산 마릿수를 유지하려면 번식동물의 수를 늘려야 하므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것임.
- 동물생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300~400개로 추정되는 무허가 업체가 허가를 받게 하거나 폐업을 유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 무허가 업체는 이러한 규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휴지기 연장과 인력기준 조정에 따른 출하 마릿수 감소로 판매가격 상승 등의 이익이 무허가업체로 귀속될 수 있음.
- 2018년 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동물생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피규제 대상인 동물생산업체가 강화된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각각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1.2. 반려동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 관련 영업자의 규제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생산 및 판매되는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sup>77)</sup>

- 동물 생산 및 수입부터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체 또는 농장 단위의 관리번호 부여 후, 개체관리카드상에 기록해야 할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반려동물 이력관리시스템은 동물등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 반려동물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도 마련해야 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협회<sup>78)</sup>에서는 회원이 출하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비문 등록 업체를 통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므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도입 초기부터 협조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이력관리시스템과 동물등록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방법도 개선되어야 함. 2개월령의 어린 동물이 유통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통한 등록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sup>77)</sup> 반려동물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은 2020~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TF에서 논의 중임.

<sup>78)</sup> 반려동물협회에 소속된 동물생산업자는 전체 동물생산업자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반려동물협회 관계자 면담, 2019.10.02.).

### 2.1.3. 지인 분양에 대한 관리 강화

- 반려동물 양육 중 강아지가 태어난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지인에게 입양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동물등록률이 낮다는 점과 지인 분양 비율이 절반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동물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입양자에게 동물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전달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펫숍이나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사육관리 및 양육자 준수사항이 공지되지만, 지인 분양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어 동물 유기, 학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기본적인 사육관리 및 양육자 준수사항 등이 입양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분양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내에서 부분별한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동물 입양 전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1.4. 동물 중성화 수술 활성화

- 반려동물 입양자의 절반 이상은 지인을 통해 분양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지인을 통한 무분별한 분양은 동물 학대, 동물 유기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또한, 시골 지역 마당에서 기르는 동물의 무분별한 개체 증가는 유기·유실로 이

어지고, 이로 인해 동물들이 야생화되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음.

○ 이와 같은 무분별한 동물 개체 수 증가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외에서 기르는 암캐를 대상으로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길고양이와 실외에서 기르는 암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 등록비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한 지역<sup>79)</sup>이 있을 정도로 중성화 수술이 동물 보호 관리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2.2. 양육 단계

### 2.2.1. 동물등록제도 개선

가) 등록대상 동물 확대

○ 현행 등록대상 동물은 개로 한정되어 있음. 최근 고양이를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양이의 유기·유실도 늘어나는 추세임. 개와 더불어 고양이의 유기·유실을 방지할 위해 등록대상 동물에 고양이를 포함하고 전국적으로 확

---

<sup>79)</sup>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4개월령 이상 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한 주 중 하나임. 그러나 주 내 일부 지역은 중성화하지 않은 동물에게 매년 동물등록비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함 (한국일보, 2019.10.05.).

대할 필요가 있음.

- 고양이의 경우, 2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고양이 등록을 실시 중임.
- 미국, 호주 등 일부 주에서는 고양이도 등록대상 동물에 포함됨.

#### 나) 동물등록 방법 개선

- 현행 동물등록 방법으로는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 부착 방법이 있는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반려견을 등록한 비율이 61%로 가장 많음.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영국과 호주처럼 동물등록을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한 나라도 있지만, 일본처럼 인식표를 교부하여 부착하게 하는 국가도 있음.
  - 신종화 외(2018: 68)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1.6%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현행 등록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반려동물에 부작용이 우려되어 꺼리는 경향도 있음.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하여 비문, 족문, DNA를 이용한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등록 방법 중 인식표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방법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분실할 가능성이 있음.
  -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비문, 족문, DNA 등록 등으로 등록 방법이 확대될 경우 이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6-1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기술 이용 의향

단위: %

구분	이용할 의향이 전혀 없다	이용할 의향이 별로 없다	이용할 의향이 다소 있다	이용할 의향이 많이 있다	모름/무응답
비문 등록법	5.0	23.4	43.5	23.6	4.5
죽문 등록법	5.5	20.8	45.7	23.4	4.7
DNA 등록법	7.5	27.7	40.0	20.1	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018: 95)의 자료를 재인용함.

#### 다) 동물판매 시 등록 의무화

○ 동물등록을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 등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동물판매는 생후 8주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현재 동물등록은 3개월령 이상부터 이루어짐. 2020년부터는 동물등록 월령이 2개월 이상으로 확대되므로 이 시기에 맞춰 등록된 동물만 판매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물등록 월령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낮추고, 동물판매업 등록자와 동물생산업 허가자가 사육·관리하고 있는 동물도 등록대상 동물에 포함해 동물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심사 중임.<sup>80)</sup>
-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는 동물등록은 2개월 이상으로 하되, 동물의 건강을 고려하여 내장형 무선전자식별 장치는 3개월 이상으로 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됨. 동물판매와 등록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라도 동물등록 방법을 비문, DNA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영국과 호주 대부분 주에서는 동물을 양도하거나 판매할 때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음.

8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372, 2018.05.01.).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2019. 10. 10.).

○ 분양숍 등 동물판매 업체에서 매년 20만 마리(지인배 외 2017: 17-18) 정도가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동물등록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라)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강화 및 단속 강화

○ 동물등록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양육자들도 상당수(약 31%) 존재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자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에서 동물등록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반려동물 양육자가 반려동물의 각종 예방접종이나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찾는 경우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 시 등록하도록 함. 전국에 3,245개(2018년 기준)의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병원 진료와 등록을 병행할 수 있음.

○ 또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60만 원이 부과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동물등록률이 25.2%로 높지 않고 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처벌 건수는 131건에 불과함.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19년 9~10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778회 점검을 하였고 482건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함.<sup>81)</sup>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도 및 단속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함.

---

<sup>81)</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11.12.).

### 2.2.2. 반려동물 양육자 등 교육 강화 및 지원

○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2014년에 수립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는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인배 외(2017: 83)의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83.4%로 높게 나타났음.

○ 반려동물 양육자 및 예비 양육자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반려동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미국 뉴욕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동물 보호 관련 교육을 하도록 규정함.

- 미국 워싱턴에서는 등록비를 재원으로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을 하고 있으며, 뉴욕주에서는 모든 주립 또는 공공기금 후원을 받은 초등학교에서 동물보호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상식과 방법을 배우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동물을 입양할 수 있음.

○ 우선 반려동물 양육자와 예비 양육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맹견소유자 교육프로그램과 EBS의 반려동물 건강, 위생, 미용, 훈련 프로그램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맹견소유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맹견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수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수료해야 함.

- EBS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자를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료로 운영 중임. 기본 위생 미용(6강좌), 반려견의 필수 건강관리법(3강좌), 기초애견훈련(8강좌)으로 구성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맹견소유자 교육프로그램은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려동물 양육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충분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EBS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양육자와 입양자의 교육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면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유료로 운영하되, 정부 및 지자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양육자와 입양자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 지원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참고하여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바우처 주관기관과 반려동물 양육자와 입양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대상자에게 반려동물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함.
- 바우처 주관기관에서 반려동물 분양, 등록이 이루어지는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동물 입양자에게 교육 바우처를 발급하고,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기관이 주관기관에 비용 청구하여 지급하도록 함.

○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 등 국민의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생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물 학대, 동물 유기 문제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될 경우,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2.3.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 양육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 보완

#### 가) 동물 소음 규정 마련

○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 양육자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반려동물 소음 때문임. 「소음·진동관리법」에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임.

- 미국 오리건주, 호주, 영국 등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개를 압류당하거나 양육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소음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벌칙도 규정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양육자가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여 동물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마련 검토가 필요함.

#### 나)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 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2019년 3월 맹견소유자에 대한 사육 및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 발생 시 벌칙이 강화됨.<sup>82)</sup>

---

<sup>82)</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3.21.).

- “맹견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출입할 수 없음.”
-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발생 시 벌칙을 강화함.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동물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 물림 사고 발생이 매년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맹견 입양 시 입양면허제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 개 물림 사고 동물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맹견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함. 맹견을 소유하기 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 입양면허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독일에서는 위험견종을 기르려면 반려지식증명시험을 보고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함.
- 개 물림 사고 후 반려견 양육자의 병원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영국에서는 금지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에 대한 처벌만 있음. 개 물림 사

고를 일으킨 개는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견에 대해 훈련을 거치게 한 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여 관리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개 물림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개의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함.

#### 2.2.4. 유기·유실 동물 관리 강화

가) 유기동물 및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 반려동물 양육자가 고령으로 양육이 어렵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등 불가피하게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 물림 사고 등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동물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반려동물을 인수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동물보호법」 제20조)는 마련되어 있음.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학대를 받아 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동물의 경우 지자체가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인수하고 지자체의 분양사업을 통해 활발하게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음.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기 어려우면 동물보호소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을 맡기는 제도가 운영 중임.

○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동물을 보호하거나 재입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유기·유실동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으로 인수 동물이 늘어나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유기·유실 동물 발생 추이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개선<sup>83)</sup>

○ 최근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이용된 사건이나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일방적으로 안락사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기준 267개소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자체에게 관할 동물보호센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입양 동물의 중성화 수술과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전국에 82개소의 사설 동물보호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설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동물보호 환경이나 동물의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설 동물보호소의 운영지침 마련과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 및 관리자에게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에 지자체에 신고 및 인도 의무를 부여하고, 중성화 시술 및 CCTV 설치를 지원하여 보호 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사설 동물보호소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 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2.2.5. 동물 학대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 지속되는 동물 학대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sup>83)</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7.04.)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에 처함. 이 조항은 2017년 3월 21일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 개정 전 동물을 학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한차례 강화되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칙으로 강화하게 되면, 동물의 안전관리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는 경우와 같아지게 됨. 현행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동물 학대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최근 2019년 7월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음.

○ 동물 학대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재발 방지 교육 의무를 부여하거나, 동물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84)</sup>

#### 2.2.6.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주기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산책이나 운동도 필요하지만,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전용 시설은 부족함.

- 정부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이나 놀이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를 위한 지원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

<sup>84)</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07.04.).

있으므로, 건설회사,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변에 작은 공간을 확보하여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2.3. 사후 단계

### 2.3.1. 동물 사체처리 방법 개선

○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주로 땅에 매립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 반려동물 사체로 인해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반려동물 사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지나 공원묘지에 매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묘지나 마당 등 사유지에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2.3.2. 공공 동물장묘시설 확충

○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2018년 기준 33개소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장례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동물장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동물장묘업은 지자체 등록대상 업종으로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하면 되지만, 동물장묘시설이 기피 또는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주민 민원이 심해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자체에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 설득을 통해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하는 등 공공 동물 장례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2.3.3. 미등록 및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이동식 화장장 등 미등록이나 불법으로 영업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미등록으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영업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크다 보니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

## 2.4.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2.4.1. 반려동물 국가 통계 구축

- 국민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실정임.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와 일부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동물보호 관련 인식조사에 의존하여 양육 동물 및 마릿수, 가구 수 등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 기관마다 추정된 숫자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조사 기관에 따라 23.7~27.9%로 나타남.
  -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정책 시행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기초 정보를 국가 통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부문 50개 항목을 선정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양육 관련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통계 구축이 가능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종류, 양육 마릿수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기본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의 중임.



#### 2.4.2.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및 조직 확충

○ 반려동물을 보호·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조직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전상곤 외(2017)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별도의 부서 또는 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반려동물 양육자 증가, 연관산업의 성장, 연관산업 및 동물보호 등에 대한 민원 증가, 정책 입안과 집행 관련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현행 조직 체계와 인력으로는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전상곤 외 2017).
- 지자체 조사 결과, 현재 동물 보호 및 관리 업무 담당자는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수의 업무 등 축산업 분야의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와 병행하지 않고 업무를 분리하여 동물보호·복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전상곤 외 2017).
- 단기에 담당 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요원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대체복무제의 대상에 해당 업무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7월 “2020~202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추진” 발표를 통해,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동물 보호 및 복지 인력과 조직을 확충할 계획을 밝힘.

#### 2.4.3. 동물등록세 도입 검토

○ 유기·유실 동물 발생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중성화 수술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구축, 동

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확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예산만으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물 등록세 등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모든 정부는 매년 Hundesteuer로 불리는 강아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독일 뮌헨주의 경우 일반견은 100유로, 맹견은 800유로의 세금이 부과되며 동물 미등록 시 세금 포탈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매년 애완견 등록세를 징수함(박효민 외 2019).

○ 박효민 외(2019)는 “반려동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개발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 정책이 지자체 단위에서 이뤄지므로 지방세로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외국의 반려동물 보호·관리 규정 등 참고 자료

**부표 1** 미국의 연방동물 보호법(알파벳순)

연번	보호법
1	Adoption of Military Animals, 10 U.S.C. § 2583
2	African Elephant Conservation Act, 16 U.S.C. §§ 4201-4245
3	Agriculture Appropriations Act, 2006, P.L. 109-97 (2005), and subsequent appropriations acts
4	Airborne Hunting Act, 16 U.S.C. § 742j-1
5	Alaska National Interest Lands Conservation Act
6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42 U.S.C. §§ 12101-12213
7	Anadromous Fish Conservation Act, 16 U.S.C. §§ 757a-757f
8	Animal Damage Control Act, 7 U.S.C. §§ 426-426c
9	Animal Disease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2001, P.L. 107-9 (2001)
10	Animal Enterprise Terrorism Act, 18 U.S.C. § 43
11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7 U.S.C. §§ 8301-8321
12	Animal Welfare Act, 7 U.S.C. §§ 2131-2159
13	Animal Fighting, 7 U.S.C. § 2156, 18 U.S.C. § 49
14	Antarctic Conservation Act of 1978, 16 U.S.C. §§ 2401-2412
15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vention Act of 1984, 16 U.S.C. §§ 2431-2444
16	Asian Elephant Conservation Act of 1997, 16 U.S.C. §§ 4261-4266
17	Atlantic Coastal Fisheries Cooperative Management Act, 16 U.S.C. §§ 5101-5108
18	Atlantic Salmon Convention Act of 1982, 16 U.S.C. §§ 3601-3608
19	Atlantic Striped Bass Conservation Act, 16 U.S.C. §§ 5151-5158
20	Atlantic Tunas Convention Act of 1975, 16 U.S.C. §§ 971-971k
21	Bald and Golden Eagle Protection Act, 16 U.S.C. §§ 668-668d
22	Captive Wildlife Safety Act: See Lacey Act Amendments of 1981
23	Chimpanzee Health Improvement, Maintenance, and Protection Act, 42 U.S.C. § 287a-3a
24	Commercial Transportation of Equine for Slaughter, 7 U.S.C. § 1901 note
25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Acts
26	Departments of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for the Fiscal Year Ending September 30, 1993

연번	보호법
27	Depictions of Animal Cruelty, 18 U.S.C. § 48
28	Dingell-Johnson Sport Fish Restoration Act, 16 U.S.C. §§ 777-777I
29	Disposition of Unfit Horses And Mules, 40 U.S.C. § 1308
30	Dog and Cat Protection Act of 2000, 19 U.S.C. § 1308
31	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 16 U.S.C. § 1385
32	Driftnet Impact Monitoring, Assessment, and Control Act of 1987, 16 U.S.C. § 1822 note
33	Eastern Pacific Tuna Licensing Act of 1984, 16 U.S.C. §§ 972-972h
34	Endangered Species Act, 16 U.S.C. §§ 1531-1544
35	Fair Housing Act, 42 U.S.C. § 3604
36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15 U.S.C. §§ 1261-1275
37	Federal Law Enforcement Animal Protection Act of 2000, 18 U.S.C. § 1368
38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Act, 16 U.S.C. §§ 2901-2912
39	Fish And Wildlife Coordination Act, 16 U.S.C. §§ 661-667d
40	Fishery Conservation Amendments of 1990, P.L. 101-627
41	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of 1990, 7 U.S.C. § 5801(a)(5)
42	Fur Seal Act of 1966, 16 U.S.C. §§ 1151-1175
43	Great Ape Conservation Act of 2000, 16 U.S.C. §§ 6301-6305
44	High Seas Fishing Compliance Act of 1995, 16 U.S.C. §§ 5501-5509
45	Horse Protection Act, 15 U.S.C. §§ 1821-1831
46	Humane Slaughter Act, 7 U.S.C. §§ 1901-1906
47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42 U.S.C. §§ 285I-285I-6
48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Act of 1992, P.L. 102-523
49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Program Act, P.L. 105-42 (1997) United States of America
50	Lacey Act, 18 U.S.C. §§ 41-48 (see also Animal Enterprise Protection Act of 1992, and Depictions of Animal Cruelty)
51	Lacey Act Amendments of 1981, 16 U.S.C. §§ 3371-3378
52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16 U.S.C. §§ 1801-1891d
53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16 U.S.C. §§ 1361-1423h
54	Marine Plastic Pollution Research and Control Act of 1987, P.L. 100-220, Title II
55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of 1972, 16 U.S.C. §§ 1431-1445b
56	Marine Turtle Conservation Act of 2004, 16 U.S.C. §§ 6601-6607
57	Migratory Bird Conservation Act, 16 U.S.C. §§ 715-715s
58	Multinational Species Conservation Fund, 16 U.S.C. § 4246
59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Extension, and Teaching Policy Act of 1977, 7 U.S.C. §§ 3191-3202
60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16 U.S.C. §§ 3701-3710
61	National Housing Act, 12 U.S.C. § 1701r-1
62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Administration Act of 1966, 16 U.S.C. §§ 668dd-668ee

연번	보호법
63	Neotropical Migratory Bird Conservation Act, 16 U.S.C. §§ 6101-6109
64	Nonindigenous Aquatic Nuisanc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90, 16 U.S.C. §§ 4701-4751
65	North Pacific Anadromous Stocks Act of 1992, 16 U.S.C. §§ 5001-5012
66	Northern Pacific Halibut Act of 1982, 16 U.S.C. §§ 773-773k
67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Convention Act of 1995, 16 U.S.C. §§ 5601-5612
68	Pacific Salmon Treaty Act of 1985, 16 U.S.C. §§ 3631-3645
69	Pacific Whiting Act of 2006, 16 U.S.C. §§ 7001-7010
70	Partnerships for Wildlife Act, 16 U.S.C. §§ 3741-3744
71	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 of 2006, 42 U.S.C. §§ 5170b(a)(3)(J), 5196(e)(4), 5196(j)(2), 5196b(g)
72	Pittman-Robertson Wildlife Restoration Act, 16 U.S.C. §§ 669-669k
73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 283e, 289d
74	Recreational Hunting Safety and Preservation Act of 1994, 16 U.S.C. §§ 5201-5207
75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76	Rhinoceros and Tiger Conservation Act of 1994, 16 U.S.C. §§ 5301-5306
77	Salmon and Steelhead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Act of 1980, 16 U.S.C. §§ 3301-3345
78	Shark Finning Prohibition Act, 16 U.S.C. § 1822 note
79	Sikes Act, 16 U.S.C. §§ 670a-670o
80	South Pacific Tuna Act of 1988, 16 U.S.C. §§ 973-973r
81	Tariff Act of 1930, 19 U.S.C. § 1527
82	Tuna Conventions Act of 1950, 16 U.S.C. §§ 951-962
83	Twenty-Eight Hour Law, 49 U.S.C. § 80502
84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See National Housing Act
85	United States-Russia Polar Bea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2006, 16 U.S.C. §§ 1423-1423h
86	Wendell H. Ford Aviation Investment and Reform Act for the 21st Century, 49 U.S.C. § 41721
87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16 U.S.C. §§ 6901-6910
88	Whal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Study Act, 16 U.S.C. §§ 917-917d
89	Whaling Convention Act of 1949, 16 U.S.C. §§ 916-916l
90	Wild Bird Conservation Act of 1992, 16 U.S.C. §§ 4901-4916
91	Wild Free-Roaming Horses and Burros Act, 16 U.S.C. §§ 1331-1340
92	Wildlife and Sport Fish Restoration Programs Improvement Act of 2000, 16 U.S.C. §§ 669-669k
93	Yukon River Salmon Act of 1995, 16 U.S.C. §§ 5701-5709

자료: 황선훈(2010: 16-17).

**부표 2** 미국의 주별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주	지역	대상	구비서류	등록비용	
				중성화된 경우	비중성화된 경우
앨라배마	헨츠빌	4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0/1년, \$35/종신	\$50/1년
	매디슨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10/년, \$35/3년	\$30/1년, \$65/3년 이름표 교환 시 \$2
알래스카	앵커리지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5/1년, \$27/2년, \$39/3년	\$23/1년, \$43/2년, \$63/3년
	코도바	6개월령 이상 개			
	가스티노	개		\$20	\$45
애리조나	마리코파	3개월령 이상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17 노인 소유 시 \$6 미등록 시 벌금 \$2/월	\$42 미등록 시 벌금 \$4/월
	유마시티	애완동물		\$13/1년, \$24/2년, \$35/3년 장애인 보조동물: 무료	\$30/1년, \$60/2년, \$90/3년
	피마시티	개		\$18/1년 \$11/저소득층 \$13/노인가구	\$63/1년
아칸소	엘킨스시티	개와 고양이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5	\$15
	로저스			무료	\$50/1년
	벤턴빌	4개월령 이상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6 장애인 또는 노인가구 1\$	\$12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5개월령 이상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4/1년, \$26/2년, \$36/3년	\$30/1년, \$50/2년, \$72/3년
	로스앤젤레스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약 \$20	
	프레즈노	4개월령 이상 개		\$12	\$50
콜로라도	덴버	개와 고양이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5/1년, \$40/3년, \$150/종신 노인가구 및 장애인 보조동물: 무료	
	콜로라도 스프링스	4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		\$15/1년, \$35/3년	\$30/1년, \$70/3년
코네티컷		6개월령 이상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8	\$19
델라웨어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0/1년, \$20/2년, \$30/3년	\$15/1년, \$30/2년, \$45/3년
플로리다	팜비치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5/1년 노인가구 \$11.25/1년	\$75/1년
	브로워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0/1년, \$25/3년	\$25/1년, \$60/3년
하와이				4~7개월령 개: \$10 8개월령 이상: \$10	4~7개월령 개: \$10 8개월령 이상: \$28.5

주	지역	대상	구비서류	등록비용	
				중성화된 경우	비중성화된 경우
아이다호	보이시시티	개	중성화 증명서(선택)	\$21.75/1년 노인가구: \$11.25	1세 이하: \$28.50/ 1년 1세 초과: \$55/1년
	이글시티	개		\$10, 노인가구: \$5	\$25
	머리디언	개		\$16	\$21
	쿠나	개		\$10.50/1년 노인가구: \$8	\$28/1년 노인가구: \$20
	아다			\$17.4 노인가구: \$9.75	\$43.6
일리노이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8/1년, \$50/3년	\$30/1년, \$85/3년
인디애나	해먼드시티			3월 31일 이전 등록: \$5 3월 31일 이후 등록: \$15	3월 31일 이전 등록: \$10 3월 31일 이후 등록: \$20
아이오와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2	\$30
캔자스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0/1년, \$27/3년	\$10/1년, \$27/3년
켄터키	루이빌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10	\$60
메인		6개월령 이상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6	\$11
메릴랜드		개 또는 고양이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5/1년	\$15/1년
매사추세츠	톤턴	6개월령 이상 개		\$10/1년	\$12/1년
	우스터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25	\$30
	매사추세츠	개		\$15	\$20
미시간	리빙스턴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10/1년, \$25/3년	\$25/1년, \$60/3년
	제네시	4개월령 이상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0/1년, \$25/3년	\$30/1년, \$80/3년
미네소타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25/1년, \$75/3년	\$75/1년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	개 또는 고양이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4	\$50
몬태나	미줄라	4개월령 이상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21/1년, \$36/2년, \$51/3년	\$36/1년, \$66/2년, \$96/3년
네브래스카	오마하	4개월령 이상 개, 고양이, 돼지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27.25	\$52.25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5	\$15
	카슨시티	3개월령 이상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8	\$25
뉴햄프셔	맨체스터	개		4~7개월령 개: \$7.5 8개월령 이상: \$7.5	4~7개월령 개: \$7.5 8개월령 이상: \$10
	도버시티	개		\$7.5	\$10



주	지역	대상	구비서류	등록비용	
				중성화된 경우	비중성화된 경우
뉴저지	웨스트필드	개와 고양이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개: \$16 고양이: \$10	개: \$19 고양이: \$13
뉴멕시코		개와 고양이		\$6	\$6
뉴욕주				\$8.5	\$34
노스 캐롤라이나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10/1년, \$25/3년	\$30/1년
노스다코타	그랜드포크스	6개월령 이상 개 와 고양이		\$5/1년	\$15/1년
	파고시티	개와 고양이		\$5	\$5
오하이오		개		\$18/1년, \$54/3년. \$180/종신	\$18/1년, \$54/3년. \$180/종신
오클라호마		개와 고양이		\$15/1년	등록 첫째 \$100, 이후 갱신 시 \$75
오리건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17/1년, \$31/2년, \$45/3년	\$31/1년, \$60/2년, \$90/3년
펜실 베이니아		3개월령 이상 개		\$6.5/1년, \$31.5/ 종신	\$8.5/1년, \$51.5/ 종신
로드 아일랜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4월 이전 등록: \$8 4월 이후 등록: \$20	4월 이전 등록: \$8 4월 이후 등록: \$20
사우스 캐롤라이나		개와 고양이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5	\$5
사우스 다코다	스피어피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5	\$10
	수폴스			\$10	\$50
테네시	내슈빌	6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8/1년, \$24/3년	\$8/1년, \$24/3년
	채터누가	개		\$5	\$10
텍사스	해리스			\$20/1년, \$60/3년	\$60/1년, \$180/3년
유타	솔트레이크	개, 고양이, 페럿		\$15	\$40
버몬트	베닝턴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4월 이전 등록: \$9 4월 이후 등록: \$11	4월 이전 등록: \$13 4월 이후 등록: \$17
	벌링턴			4월 이전 등록: \$27 4월 이후 등록: \$29	4월 이전 등록: \$47 4월 이후 등록: \$49
버지니아	버지니아 비치	개와 고양이		개: \$7/1년, \$14/ 2년, \$21/3년 고양이: \$5/1년, \$10/2년, \$15/3년	\$10/1년, \$20/2년, \$30/3년
위스콘신	매디슨시티	개와 고양이		\$15	\$20
	밀워키			3월31일 전 등록: \$12 4월1일 후 등록: \$18	3월31일 전 등록: \$24 4월1일 후 등록: \$36
와이오밍	에번스턴	개		\$4/1년, \$15/종신	\$15/1년
	롤린스	개	광견병접종증명서(필수) 중성화 증명서(선택)	\$5	\$15

자료: Spoilt pups(spoiltpups.com: 2019. 09. 10.). Dog Licence Requirements by state.

**부표 3** 미국의 주별 목줄 관리 규정

주	주요 내용	벌금
앨라배마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으면 안 되며, 목줄을 착용하거나 일정 장소에 격리되어야 함.	\$2~\$50
알래스카	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 중임.	
애리조나	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 중임.	
아칸소	명시된 주법 없음.	
캘리포니아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으면 불법임.	
콜로라도	주법에는 목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인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됨.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규정을 통해 목줄을 차도록 하고 있음.	
코네티컷	사냥을 제외하고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으면 불법임. 풀려난 개가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1,000의 벌금과 6개월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상해사고 시 \$1,000 또는 6개월 이하 형
델라웨어	목양견을 제외하고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으면 불법임. 일출부터 일몰까지 개들을 적정시설에 수용하거나, 결속장치 등으로 묶어놓아야 함.	1차 위반 시 \$100~\$500 재범 시 \$750~\$1,500
워싱턴 D.C.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는 것을 금지함.	\$20
플로리다	명시된 주법 없음.	
조지아	명시된 주법 없음.	
하와이	개를 공공장소, 고속도로, 거리, 광장에 목줄 없이 풀어놓는 것을 금지함.	
아이다호	명시된 주법 없음.	
일리노이	명시된 주법 없음.	
인디애나	명시된 주법 없음.	
아이오와	주법에는 목줄 착용을 명시하지 않으나,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은 경우를 발견 시 벌금형에 처함.	
캔자스	명시된 주법 없음.	
켄터키	일출에서 일몰 기간까지 주인 없이 방치된 개는 동물 담당관이 포획하거나 사살할 수 있음.	
루이지애나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는 것을 금지함.	
메인	사냥을 제외하고 목줄 없이 풀어놓는 것은 불법임.	
메릴랜드	지자체는 목줄 없이 풀어놓은 개를 잡거나 사살할 수 있음.	
매사추세츠	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공장소에서 개들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음.	
미시간	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6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함. 개 목걸이를 상시 착용시켜야 하고, 발정기 암개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함.	
미네소타	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등록되지 않은 개가 목줄 없이 풀려 있을 경우 압류할 수 있음.	
미시시피	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 중임.	

주	주요 내용	벌금
미주리	공원 또는 사적지에서는 10피트 이하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목줄 없이 풀어놓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몬태나	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 중임.	
네브래스카	인구 8만 명 이상 지역에서는 목줄 없이 풀어놓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걸이가 없는 개가 10일 이상 풀려있을 경우 벌금에 처함.	\$25
네바다	야생동물 관리지역에서 개가 야생동물을 추적, 뒤쫓음, 괴롭힘, 공격, 죽이는 경우 불법임.	
뉴햄프셔	개를 보호자 없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풀어놓으면 불법임. 단, 훈련용, 사냥용, 목양 또는 전시대회는 예외임.	
뉴저지	목줄 없이 풀어놓을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음.	
뉴욕	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 중임.	
노스 캐롤라이나	야간에 보호자 감독 및 목줄 없이 풀어놓으면 불법임.	
오하이오	사냥을 제외하고 개들은 목줄을 착용해야 함.	
오클라호마	공원, 놀이장, 기념관에서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 중임.	
오리건	발정기 암개를 공공장소에 목줄 없이 풀어놓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펜실베이니아	개를 적절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로드아일랜드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중임.	
사우스 캐롤라이나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아서는 안되며, 주립공원에서는 항상 목줄을 착용해야 함.	
사우스다코다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 중임.	
테네시	사냥 및 목양을 제외하고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으면 불법임.	
텍사스	6개월령 이상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을 수 없으며, 명찰을 달고 있어야 함.	
유타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 중임.	
버몬트	목줄 관련 규정 없음.	
버지니아	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 중임.	
워싱턴	목줄 관련 규정 없음.	
웨스트 버지니아	목줄 착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목줄 없이 풀려있던 개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위스콘신	목줄 없이 풀려있던 개가 일으킨 사고는 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으며 벌금이 부과됨.	1차 위반 시 \$100 재범 시 \$200
와이오밍	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시행 중임.	

자료: Edgar Snyder and Associates(www.edgarsnyder.com: 2019. 09. 24.). Dog Leash Laws in the United States.

**부표 4** 호주의 주 및 준주 정부 동물복지 법률 및 주관부서

주·준주	법률 (Legislation)	시행령·지침 (Code of practice·Guideline)	주관부서
NSW (New South Wa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 학대 방지법 1979 및 규정 2012</li> <li>■ 동물 학대 방지 (동물 거래) 1996</li> <li>■ Animal welfare act 1998 &amp; regulation 20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SW Animals in Pet Shops 2008</li> <li>■ NSW Breeding Dogs and Cats 2009</li> <li>■ PIAA National Code of Practice 2015</li> </ul>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animal welfare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법 2000 및 규정 2001</li> <li>■ Animal welfare act 1992 &amp; regulation 20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imal Welfare (Animals in Pet Shops)</li> <li>■ Welfare of Cats</li> <li>■ Welfare of Dogs</li> <li>■ Sale of Animals in the ACT 2013</li> </ul>	ACT Government Territory and Municipal Services
Northern 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imal welfare act 2002</li> </ul>	N.A.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y and Fisheries
Queens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imal Care and Protection Act 2001</li> <li>■ Animal Management (Cats and Dogs) Act 2008</li> <li>■ Local Laws and City of Brisbane Animals Local Law 20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ueensland Code of Practice for Pet Shops 2008</li> <li>■ Gold Coast Breeder Code of Practice</li> </ul>	Queensland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South Austr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85</li> <li>■ Dog and Cat Management Act 1995 and Regulations 199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re and Management of Animals in the Pet Trade</li> <li>■ Management of Companion Animals in Shelters and Pounds</li> </ul>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and Regions South Australia
Tasma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imal Welfare Act 1992 and Regulations 2001</li> <li>■ Domestic Animals Act 2000 and Regulations 2001</li> <li>■ Dog Control Act 2000 and Amendment 2009</li> <li>■ Cat Management Act 20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imal Welfare Guidelines for Breeding Dogs January 2012</li> </ul>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Parks, Water and Environment
Victo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mestic Animals Act 1994 and Regulations 2005</li> <li>■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86 and Regulations 199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ration of Pet Shops</li> <li>■ Management of Dogs &amp; Cats in Shelters &amp; Pounds</li> <li>■ Breeding and Rearing Establishments (amendments 2015)</li> </ul>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Primary Industries
Western Austr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g Act 1976</li> <li>■ Cat Act 2011</li> </ul>	N.A.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 호주 지역별 반려동물 생산·분양·입양 관련 제도

주·준주	등록	마이크로칩	기타 (기록, 면허, 중성화, 판매 등)
NSW (New South Wa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 고양이와 개를 제외한 모든 고양이와 개는 6개월까지 등록해야 함.</li> <li>■ 등록은 소유권의 변경에 관계없이 NSW에서 고양이나 개를 보호함.</li> <li>■ 고양이는 등록 불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개와 고양이는 12주령까지 또는 먼저 팔리거나 판매하기 전에 마이크로칩을 장착 의무화</li> <li>■ 마이크로칩은 NSW 지방정부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반려동물 등록소(Companion Animal Register: CAR)에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기록의 보관</li> <li>■ 모든 판매 동물의 최소 연령 준수: 개와 고양이의 경우 최소 8주령</li> <li>■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팔지 않도록 확인</li> </ul>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종신등록: ACT에서 28일 이상 보유하거나, 28일 이상 ACT의 거주자인 경우, 8주령 이상의 ACT에 있는 모든 개를 등록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양도 전 및 12주령의 개와 고양이에게 의무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마리 이상을 키우고자 하는 자는 국내 동물 서비스국이 발행한 복수 개 또는 고양이 면허를 소지해야 함.</li> <li>■ 중성화되지 않은 개의 보유는 국내동물법 2000 위반</li> </ul>
Northern 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윈(Darwin) 동물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모든 개 등록 의무화</li> <li>■ 1개월 이상 다윈 거주 3개월령 이상 모든 개는 매년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프로그램에 의해 다윈의 모든 개는 마이크로칩 의무화 (등록 조건으로 승인된 영구적 마이크로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프로그램에 의해 다윈에 사는 모든 개의 중성화</li> </ul>
Queens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개는 생후 12주가 되기 전, 새 지역으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역 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일부 지방 위원회 지역의 경우 고양이라도 등록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4월 10일 이후 출생한 모든 개와 고양이는 판매 또는 양도 전 마이크로칩 사용</li> <li>■ 모든 규제된 개(regulated dog)는 출생 시기와 상관없이 마이크로칩이 있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이나 개를 번식시키거나 번식시키려는 경우, 골드 코스트 시에서 번식업자 허가를 얻어야 하며, Breeder Code of Practice를 준수해야 함.</li> </ul>
South Austr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이상 모든 개는 '매년' 동물을 소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을 위한 신규 법률이 현재 협의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식업자 등록: 현재 개와 고양이의 모든 번식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신규 법률 협의 중</li> </ul>
Tasma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상된 개의 소유자는 개를 등록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상의 모든 개는 마이크로칩을 사용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 보관 및 보증: 개 사육에 대한 지침에 설명</li> </ul>
Victo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이 되면 고양이와 개 등록 필수</li> <li>■ 등록 조건: 고양이나 개에게 마이크로칩 장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이와 개는 생후 6개월 이내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li> <li>■ 동물 마이크로칩 번호는 동물의 광고에 표시되지만, 판매 시점에는 표시되지 않음.</li> <li>■ 판매자가 '국내 동물 사업자'인 경우 번식업자는 마이크로칩 번호 또는 번식업자 등록번호와 발급위원회 이름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 보관 및 보증: 애완동물 판매점 코드와 번식 및 양육 코드에 포함되어 있음.</li> </ul>
Western Austr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개와 고양이는 매년 또는 소유권 변경 시 등록해야 함.</li> <li>■ 개 등록은 연간, 3년 또는 평생일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3개월이 된 모든 개는 마이크로칩을 가져와야 하며, 고양이는 양도/판매 전에, 그리고 6개월령까지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le of Cats by Pet Shops: 영업주는 고양이 양도 전에 마이크로칩 및 소독</li> <li>■ 고양이 번식: 2013년 11월 1일부터 6개월이 넘는 서호주의 모든 고양이는 멸균, 마이크로칩 처리 및 지방 정부 등록</li> </ul>

자료: 저자 작성.

**부표 6** 일본의 반려견 및 반려묘 사육 현황 추정

구분	반려견			반려묘			일본 전체 세대수 (천 호)
	사육 세대수 (천 호)	사육 마릿수 (천 마리)	세대별 마릿수 (마리)	사육 세대수 (천 호)	사육 마릿수 (천 마리)	세대별 마릿수 (마리)	
2014년(A)	7,897 (14.4%)	9,713	1.23	5,363 (9.8%)	9,492	1.77	54,952
2015년	7,673 (13.9%)	9,438	1.23	5,332 (9.6%)	9,277	1.74	55,364
2016년	7,569 (13.6%)	9,356	1.24	5,335 (9.6%)	9,309	1.75	55,811
2017년	7,217 (12.8%)	8,920	1.24	5,459 (9.7%)	9,526	1.75	56,221
2018년(B)	7,154 (12.6%)	8,903	1.24	5,539 (9.8%)	9,649	1.74	56,613
증감(B/A)	0.91	0.92	1.01	1.03	1.02	0.98	1.03

주 1) 세대수는 일본 총무성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한 인구, 인구동태 및 세대수」에서 공표된 자료이며, 일반 세대 이외의 시설 등도 포함하고 있음.

2) ( )는 일본 전체 세대수에서 반려견 및 반려묘를 사육하고 있는 세대수의 비중임.

3)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20세~79세(2014년~2018년은 20세~79세, 2014년 이전은 20세~69세)임.

4) 5만 개 표본데이터를 이용해 각 연도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를 이용한 weighted sampling 집계결과임.  
자료: 일반사단법인 애완동물사료협회(2018). 「2018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 조사」.

**부표 7** 반려견 및 반려묘의 수용 및 처분 현황

단위: 마리

구분			반려견		반려묘		합계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수용 마릿수	소유자로부터	성숙 개체	5,756	3,775	7,646	7,488	13,402	11,263
		미성숙(유령) 개체	706	340	6,415	3,658	7,121	3,998
	소유자 불명	성숙 개체	32,517	28,178	18,002	13,754	50,519	41,932
		미성숙(유령) 개체	7,670	6,218	58,012	37,237	65,682	43,455
	합계		46,649	38,511	90,075	62,137	136,724	100,648
처분 마릿수	반환 마릿수		13,220	12,286	345	316	13,565	12,602
	미성숙 개체		85	35	88	81	173	116
	양도 마릿수		16,417	17,669	22,692	26,651	39,109	44,320
	미성숙 개체		4,780	5,053	14,587	16,974	19,367	22,027
	안락사 마릿수		15,811	8,362	67,091	34,854	82,902	43,216
	미성숙 개체		3,449	1,665	44,068	21,611	47,517	23,276

주 1) 회수 마릿수의 소유자 불명의 성숙 개체에는 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한 역류가 포함됨.

2) 회수 마릿수의 소유자 불명에는 일부 현·시의 조례에 의거한 수용을 포함함.

3) 안락사 마릿수에는 보관 중 질병 등에 의한 자연사도 포함됨.

자료: 일본 환경성(2018). 「반려견·반려묘의 회수 및 부상동물의 수용 상황(2018.12.28.)」.

**부표 8**    요코하마시의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이용 안내

화장의 종류	개별화장	합동화장
화장 방법	■ 1마리씩 개별 화장로에서 화장함.	■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화장함.
유골의 취급	■ 유골은 장례식장에서 준비하는 유골함 (요금은 화장료에 포함)에 넣어서 돌아감.	■ 유골을 받을 수 없음. ■ 유골은 일반사단법인 요코하마 반려동물공동묘원협회가 관리·운영하는 공동매장시설에 안장됨.
사전예약	■ 사전 전화예약이 필요함. ■ 예약은 화장일로부터 2일 전부터 접수함.	■ 화장장에 직접 반입할 경우 사전예약은 불필요함. ■ 출장 수거를 희망하는 경우는 자원순환국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해야 함.
장례식장의 수용범위	■ 9시·10시·11시·12시의 각 시간 2마리씩 총 8마리, 15kg 미만의 반려동물 개별화장 예약을 접수함. ■ 13시에는 1마리 15kg~50kg의 반려동물의 개별화장 예약을 접수함.	■ 수용 마릿수의 제한은 없음.
크기제한	■ 무게는 50kg 미만 ■ 반려동물을 담은 상자의 외경이 길이 100cm×폭 60cm×높이 35cm 이내일 것	
반입시간	■ 화장을 예약한 시간	■ 9:00~15:00
반입방법	■ 골판지 상자를 준비하고, 방수를 위해 상자의 바닥에 비닐봉지를 깔아야 함. ■ 사체를 면수건 등에 싸서 상자에 담아 반입해야 함.	
유의사항	■ 출장 수거는 없음. ■ 화장시간은 30~80분으로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달라짐.	■ 장례식장에 직접 반입하거나 출장 수거를 의뢰할 수 있음.
1마리당 화장요금	■ 1kg 미만: 10,000엔 ■ 1kg~5kg: 20,000엔 ■ 5kg~25kg: 25,000엔 ■ 25kg~50kg: 30,000엔	■ 직접반입: 3,000엔 ■ 출장수거: 6,500엔

자료: 일본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www.city.yokohama.jp: 2019.10.04.). 반려동물 화장 안내.

## 참고문헌

- 김문호. 2017. “애완동물 장례 비즈니스 성업. 화장, 매장 시설 750여 개.” 미주중앙일보 (2017.03.08.).
- 김선희. 2013.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시장조사 13-21. 한국소비자원.
- 김소희. 2004. “‘애완동물 등록제’ 꼭 필요한 이유.” 『주간동아』 460호: 68-69.
- 김수진. 2003. 『애완견 관리에 관한 법적문제』. 현안분석 03-15. 한국법제연구원.
- 김지현. 2018.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미국 입법례』. 최신 위국입법정보 제78호.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 김현희. 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현안분석 2017-08. 한국법제연구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201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201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2019. 『2019년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
- 박주연. 2017.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환경법과 정책』 19(0): 99-13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박효민·박서연. 2019.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이슈&진단 제380호, 경기연구원.
- 신종화·장석우·김왕곤. 2018.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이영대. 2016.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일반사단법인 애완동물사료협회. 2018. 『2018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 조사』.
- 일본 환경성. 2018. 『반려견·반려묘의 회수 및 부상동물의 수용 상황(2018.12.28.)』.
- 일본 환경성. 2019. 『알고 있습니까? 동물애호관리법』.
- 이화영·김현욱·심훈섭·심준원·오민영·이혜원·전진경. 2017.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장은혜. 2015.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②. 한국법제연구원.
- 전상곤·하수안·안윤미·지인배. 2017. 『동물보호·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전의식·김병수·명보영·김새롬·윤정임·한정아·임해린·박순식·정경민. 2011.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성자. 2019.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미국 개물림법(Dog Bite Law)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65(0): 283-30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R824.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허민영. 2016.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소비자지향성 강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16-14. 한국소비자원.
- 황규성·김정래·이충구·김두성·김성민. 2015.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4): 13-17.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황선훈. 2010. “미국의 연방 동물보호법.” 『최신 외국법제정보』 2010-08호: 15-23. 한국법제연구원.
- 황원경·정귀수·김도연. 2018. 『2018 반려동물보고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 실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Animal Medicines Australia. 2016. *Pet Ownership in Australia*.
- Jolly, William. 2017. “Australian pet ownership statistics.” Canstar Article.
- McMillan, Franklin. D. 2018. “Behavioral Issues in Dogs Obtained as Puppies from Pet Stores.” *43rd World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Congress and 9th FASAVA Congress*. WSV18-0143. WSAVA Congress 2018 & FASAVA.
- Rowan, Andrew and Tamara Kartal. 2018. “Dog population & dog sheltering trend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imals (Basel)*. 2018 May; 8(5): 68.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강세바 블로그. <[blog.naver.com/sora28/221626718134](http://blog.naver.com/sora28/221626718134)>. 검색일: 2019. 09.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검색일: 2019. 09.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검색일: 2019. 10. 11.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2019. 10. 10.
-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검색일: 2019. 09. 23.
-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http://www.qia.go.kr)>. 검색일: 2019. 09. 20.
-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http://www.qia.go.kr)>. 검색일: 2019. 10. 11.
-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http://www.qia.go.kr)>. 검색일: 2019. 10. 16.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검색일: 2019. 10. 23.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www.nias.go.kr>. 검색일: 2019. 10. 23.  
 빅카인즈(BIGKinds). <www.bigkinds.or.kr>. 검색일: 2019. 11. 08.  
 서울특별시. <news.seoul.go.kr/citybuild>. 검색일: 2019. 10. 05.  
 엔젤펫 블로그. <blog.naver.com/angelpet1004/221654474952>. 검색일: 2019. 09. 28.  
 영국 정부. <www.gov.uk>. 검색일: 2019. 10. 01.  
 일본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www.city.yokohama.jp>. 검색일: 2019. 10. 04.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www.env.go.jp>. 검색일: 2019. 10. 01.  
 정말로 동물병원 블로그. <blog.naver.com/jeongmaloah/221619634027>. 검색일: 2019. 09. 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검색일: 2019. 09. 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검색일: 2019. 09. 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검색일: 2019. 10. 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검색일: 2019. 10. 11.  
 행정안전부. <www.mois.go.kr>. 검색일: 2019. 10. 24.  
 Edgar Snyder and Associates. <www.edgarsnyder.com>. 검색일: 2019. 09. 24.  
 Spoilt pups. <spoiltpups.com>. 검색일: 2019. 09. 10.

#### 〈참고 보도자료〉

국민일보 기사. 2018.07.17. “애견카페서 기르던 투견이 강아지 물어 죽었다” 전주는 연락두절.  
 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 2019.02.01.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12.15.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01.18.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반려동물 에티켓 확산: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03.20. 동물학대 행위 처벌 및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12.20.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의무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03.21. 맹견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07.0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07.23.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09.1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11.12.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운영 결과.

데일리벳 기사. 2015.03.25. [칼럼] 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의 유기동물 정책.

데일리벳 기사. 2018.01.29. [2018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9-독일] 반려견 세금, 연간 26만 원.

매일경제 기사. 2019.03.05. 600마리 죽여도 집행유예...동물학대범에 관대한 이유.

법률신문 기사. 2019.02.25.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판매 등 동물영업 '허가제'로 바뀌어.

세계일보 기사. 2019.07.30. “내 강아지 내가 때려서 키운다는데”...유튜브 동물학대 논란 확산.

세계일보 기사. 2019.08.25. 2019년만 136억원.. ‘냥이·댕이’ 위한 세금 내라고? [S스토리].

소방청 보도자료. 2019.02.13. 하루 6명꼴 개 물림사고로 119구급대 출동: 매년 2천여명 이상 사고 발생.

스카이에일리 기사. 2018.04.21. 규제강화 법령 본격 시행, 반려생산업 생존 갈림길.

시사저널 기사. 2019.08.24.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아니라 ‘도살장’을 방불케 했다.

아시아경제 기사. 2018.09.09. “우리 댕댕이를 살려주세요”...애견호텔, 사각지대 없어질까.

연합뉴스 기사. 2017.10.22. '개 물림' 사고 매년 2천건 넘어...반려동물 관리강화 요구 봇물.

연합뉴스 기사. 2017.10.25. 최근 6년간 716명 개 물림 피해...개주인 23% 진료비 납부 거부.

연합뉴스 기사. 2019.02.17. [디지털스토리] 제발 강아지 짚는 것 좀 막아주세요.

이코노믹리뷰 기사. 2019.01.30. [갈등의 경제학 ⑬] 공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기르지 않는 나도 세금을?

조선일보 기사. 2017.10.27. 모두 다 동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선일보 기사. 2019.10.22. 유기견 사체로 만든 사료 25t 시중 유통...제주도 “전량 회수”

파이낸셜 리뷰 기사. 2019.02.18. Pet insurance market looks to rise of the ‘fur baby’.

한겨레 기사. 2017.07.17. 내 눈에 예뻐도 이웃에겐 재앙...반려동물 ‘이웃갈등’ 어찌 풀까.

한겨레 기사. 2019.01.11. 동물보호단체 ‘케어’, 구조한 수백마리 개 안락사시켰다

한국일보 기사. 2019.10.05. [이형주의 동물에 대해 묻다] 미국처럼 동물유기·학대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news1 기사. 2019.10.22. “테리러 온다더니”...애견호텔에 맡긴 견주는 연락을 끊었다.

SBS TV 동물농장. 2016.05.15.

〈참고 해외 법령〉

- 미국 「개 물림 손해 배상 책임법」(Dog Bite Law).
- 미국 「개 물림 엄격 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
- 미국 「군용동물 입양법」.
- 미국 뉴욕주 「교육법」.
- 미국 「동물 복지법」.
- 미국 「동물보호법(Animal Welfare Act)」.
- 미국 「동물피해 조정법」.
- 미국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
- 미국 「인도적 도살법」.
- 미국 「28시간 법」.
- 미국 「버지니아주법」.
- 미국 「오리건주법」.
- 미국 「워싱턴 D.C. 법률」.
- 미국 「원바이트(One Bite) 법칙」.
- 미국 「일리노이주법」.
- 미국 「특정 종 통제법(Breed-Specific Legislation)」.
- 미국 「해양포유동물법」.
- 미국 「혼합형 책임법」.
- 영국 「동물건강복지법 2006」.
- 영국 동물복지(개 사육)(웨일즈)규정 2014.
- 영국 「동물복지법 2006」.
- 영국 「반려동물법 1951」.
- 영국 잉글랜드 동물복지규정 2018.
- 영국 Animal Welfare Regulations 2010.
- 영국 Docking of Working Dogs Tails (England) Regulations 2007.
- 영국 Docking of Working Dogs Tails (Wales) Regulations 2007.
- 일본 「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일본 「광견병 예방법」.
- 일본 「동물애호관리법」.
- 일본 「동물의 반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본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애완동물식품안전법)」.

호주 수도주(ACT) 「동물복지법 199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동물학대방지법 1979」.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NSW Communities & Justice 2018. Penalties.

호주 빅토리아 Victorian Department of Justice and Regulation 2018.

호주 퀸즐랜드 Penalties and Sentences (Penalty Unit Value) Amendment  
Regulation 2018.

호주 태즈메이니아 Tasmania Department of Justice (2016). Value of Indexed  
Amounts in Legislation.

